第303回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 7 號
(定期會) (임 시 회 의 록)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11年11月16日(水)

場 所 第2會議場

議事日程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2. 2012년도 예산안(계속)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o 부별심사(비경제부처)

審査된案件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1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1
2. 2012년도 예산안(계속) ····· 1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1
4.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1

o 부별심사(비경제부처)

(10시00분 개의)

○委員長 鄭甲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기국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이계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委員長 鄭甲潤 의사일정 추가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간사 간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해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2. 2012년도 예산안(계속)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o 부별심사(비경제부처)

(10시02분)

○委員長 鄭甲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소위원회는 총 12인으로 구성하되 한나라당 7인, 민주당 4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며 비교섭단체 소위원은 예결위원장이 결정하고 소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예결위원장이 맡기로 간사 간에 합의되었습니다.

소위원 명단은 교섭단체로부터 제출되면 위원

님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를 말씀드린 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정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예, 곽정숙 위원.

○곽정숙 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했다고 방금 말씀하셨나요?

○委員長 鄭甲潤 예.

○곽정숙 위원 몇 대 몇 이렇게?

○委員長 鄭甲潤 7, 4, 1.

○곽정숙 위원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들어 있고, 마침 이번 2012년 예산안은 이명박 정부 18대 국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서로 존중하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기일 안에 함께 합의하면서 해 나가자고 하고 있는 마당에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아주 중요한 건데 이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소수 비교섭단체의 의견은 듣지도 않으시고 거기의 의견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존중하지 않고, 열어서 얼마든지 함께 하면서 합의해 가고 논의해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이고 이번만은 일방 처리 안 하겠다, 3년 내내 날치기 처리로 국회를 무력화했고 무실화했으면 이번만이라도 존중하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왜 열지 못합니까? 소수 비교섭단체의 의석수를 막고 이렇게 계속해서 불통·폐쇄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원장님, 비교섭단체가 계수조정소위원회에 1석을 좀 더 들어갈 수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참고로 모든 회의는 우리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각 정당별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양당 간사 간에, 교섭단체 간사 간에 협의해서 안이 마련됐습니다. 됐고, 그동안의 경과를 강기정 간사님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강기정 위원 강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계수조정소위를 몇 인으로 할 거냐를 가지고 그동안 다양한 방식의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에서는 15인의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자. 그래서 한나라당 9인 그리고 나머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6인 이렇게 해서 15인으로 구성했으면 하는 요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는 것이 민주당이나 비교섭단체의 기회가 더 보장되는 것 같다 싶어서요. 그런데 15인은 현실적으로 너무 많지 않냐 그래서 작년에 15인으로 구성했던 전례가 있습니다마는 계수조정소위답게 수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결국 12인으로 이렇게 합의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사실은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숫자가 많은 것은 조금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작년의 전례도 있고 그래서 15인으로 구성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결국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2인 안에 동의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계수조정소위의 역할이, 많은 역할이 있습니다마는 비교섭단체 또 우리 민주당의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한 위원님 등의 의견을 잘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그동안 상당 기간 고심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곽정숙 위원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강기정 간사님, 장윤석 간사님 등 소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대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조원진 위원 이해는 안 하지만 참아 준다는……

○委員長 鄭甲潤 동의를 안 해 주시면 표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가 방금 구성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심사가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고 13개의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완료하여 우리 위원회에 예비심사보고서를 회부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부별심사가 이번 주에 끝나면 다음주부터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의 심사 활동이 시작됩니다. 소위원회의 업무 중의 하나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조정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으로서 소위원님으로 선임되실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져 법정기일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가 실시됩니다.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이틀 동안 기획재정부에서는 제2차관이 출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1월 17일, 내일 부별심사 회의는 한 시간 앞당겨서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과 출석 기관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아시는 바와 같이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예.

○배영식 위원 지난번, 지난 주 청와대 경제수석께 제가 민주평통 관련된 자료를 비경제부처 심사 때까지 제출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 이유가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개인이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서 조직을 하는, 사조직화 돼 있는 이런 현상과 친목단체, 봉사단체 수준으로 격하해서 민주평통을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낱낱이 질타를 하면서 세 가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특수업무활동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내역을 내라고 했는데 그 상세자료를 지금까지 안 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통일정책을 위한 자문은 순수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용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수업무활동비를 사조직하는 데 썼다 하면 이거는 우리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시 통일정책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특수업무활동비를 어떻게 썼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甲潤 예.

우리 강기정 위원!

○강기정 위원 지금 오늘, 내일이면 부별심사 질의까지 다 마쳐집니다마는 아직도 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중에 제가 9월 결산 때도 말씀드렸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부분입니다.

그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18개 부처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양식은 크게 보면 지금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양식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수령자, 지출일시, 예산, 수령금액 이것은 정보활동하고 아무 관계없고 감사원 지침이나 기획재정부 지침 사항하고 일치된, 다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지출명목, 세부내역, 비고 이런 양식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만 거기 뒷부분은 백번 양보해서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출일시, 수령자, 예산, 수령금액, 누계 이 부분을 제출, 18개 부처 중에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온 만큼만 제가 예산심사할 때 인정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빈말로 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간사로서 혹시 예산심사 과정에 얻을 수 있는 간사로서 주어지는 어떤 특혜가 있다면 특혜도 제가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수활동비 문제 관련해서는.

그래서 특히 검찰, 법무부, 방금 평통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등등 지금 이 문제를 그냥 '아이고 또 하고 옛날 간사도 이렇게 하다 자기 지역구 예산 바꿔 먹더라'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가지실까봐 제가 진짜로 이야기드립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법무부에 제가 지난번 첫날 질의 때 그때 5분 추가 시간 때 시간이 없어서 답변하시려는 걸 제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안 주고 계시다가 어제, 몇 번에 걸쳐서 했더니 어제 3장짜리로 이렇게 왔어요. 그때 우리 법무부장관께서 답변을 하시려다가 만 얘기도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성실치 못하게 이 답변서를 써 주시는데, 제가 이따 질의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매우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甲潤 정부 측에서는 자료 내 달라는 걸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정 불가피한 사정일 경우에는 가서 충분히 설명 드려서 이해

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나라당 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섭 위원 정진섭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부장관님!

우리 류 장관님이 오시고 대북정책에서 유연한 자세를 견지하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백신 등 북한 지원 관련 기사들이 있던데, 추진하시고자 하는 그런 북한 관련 지원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충분하게 확보하고 계신 겁니까? 중간에 바뀌셔서 여쭤 보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류우익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예산의 계수로 나타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 대북정책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추진될 수 있는지를 미리 예단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예산의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을 지금 받아들이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이러한 계수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지를 국민에게, 그리고 관계되는 인접국이나 북한 당국에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예, 바로 같은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가 예산상에 얼마나 작년에 비해서 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하느냐가 메시지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봤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좀 내 주셨으면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류우익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유연한 자세를 견지하는 데에 대해서 환영은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천안함이나 또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시간은 좀 지났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매우 관심사인데, 우리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지금 일련의 유연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남북 간에 지나치게 높아져 있는 긴장을 어느 정도 낮추고 최소한의 대화의 채널을 열어 가기 위한 노력이고,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도 북한이 저지른 도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책임 있는 조치와 또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태도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유연화 조치가 사실상의 교류·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진섭 위원 류 장관님의 그 말씀을 우리 국민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예산에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한국에 들어오는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은 다른 부처 것을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사실 통일부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고 또 정착 후의 과정을 돕는 이러한 비용에 쓰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2만 300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와서 정착을 하고 있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예산의 소요는 지금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므로 또 그것이 지금까지 정착 주민을 지원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예산은 앞으로도 더 확보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그 부족한 부분이 예비비 등에서 일부 보전되고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정진섭 위원 다음 국방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사태를 보면서 서북도서의 우리 방위력을 강화하자 이렇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또 정부는 여기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해 왔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태세를 갖추기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작년도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군은 서북도서 방위를 위한 소요를 제출했고 국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상태에서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마친 상태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필요한 소요 전력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서북

도서 자체 방위력은 과거보다도 훨씬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은 어떻게 전력을 운용하고 어떻게 평상시 훈련해 놓느냐 하는 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냥 국민적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면, 연평도가 포격을 당할 때 그것을 왜 우리가 바로 못 때리느냐? 다시 말하면 동굴 속에 있어서 못 때린다 이렇게 국민들은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의 무기체계를 어떻게든 마련을 해서 그 동굴에 들어 있는 포를 바로 때릴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우리가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런 체계에 대해서 소요를 제기했고, 외국에 그러한 거기에 일부 맞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력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선행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무기체계 이름 같은 것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마는 언제면 실전배치가 가능하다든가 이런 설명은 가능하신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내년도 예산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무기를 배치하기 전에 몇 가지의 시험평가랄지 선행조치 과정이 뒤따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하고 배치할 예정입니다.

○정진섭 위원 비행기에서 JDAM으로 때리는 것 아니더라도 육상에서 바로 동굴을 때릴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국방부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계속사업이 여든두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초 계획 대비 30% 이상 증가한 사업이 열세 개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런 것들은 대개 타당성 재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 최근 2년간 열두 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재검증을 면제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제가 그 질문을 사전에 못 받아 놓았기 때문에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분야 같은 경우에 큰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그것이 타당한가를 재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고 국방부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방부도 그런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보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이런 것을 자꾸 면제해 준다고 한다면 이런 속에서 우리 국방의 여러 분야들이 부정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꼭 가져야 된다라고 주문을 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추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혹시 소요 검증에 대한 것이라면 소요 검증이라는 것은 소요 결정되기 전에 각계의 전문가들이 다 포함을 해 가지고 현재 소요 제기되어 있는 성능이 과연 맞느냐, 이것이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기술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수출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것인지 봐서 마지막 손질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것은 이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사업 착수하기 전에 하는 것이지요.

○정진섭 위원 착수하는 중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다시 한번 검증해 보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정진섭 위원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정진섭 위원 지난번에 장관님 안 계실 때 차관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참 어려운 여건에 있다 그래서 노후 소방차가 현재 17.4%가 있고 소방장비도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28.8%가 노후화되어 있다 이래서 이것을 좀 새로이, 402억을 우선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이것을 좀 도와주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차관님이 시원한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장관님께서 한번, 상임위에서도 이건 다뤄졌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우리나라 소방 장

비는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교체를 하고 보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우선 이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270억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우선 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했고요. 여기에는 조금 더 예산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금년에 저희 지역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 큰 수해가 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되지만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상가, 공장 이런 것입니다.

여기는 재해구호기금이나 아니면 융자 이런 것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이것 갖고는 도저히 그 위험 관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보험을 좀 활성화시켜 보자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보험 대상물을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시 그 실손해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보험을 들자 그렇게 해서 2~3년간은 시범사업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재정 소요를 예컨대 국비를 35% 지방비 15% 해서 보험료를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을 50% 해 가지고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일단 한 12억 정도를 예산에 반영해 보자 이런 노력이 있었는데 잘 안 되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기재부가 반대해서 안된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글쎄, 기재부하고 별로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또 나라 살림 전체를 하다 보니까 또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풍수해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정진섭 위원 주택, 농지 이런 것들만 보상을 해 주는 이런 것은 옛날 시대의 발상입니다. 지금은 훨씬 더 큰 자산가치가 상가, 공장에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생각하고 우리 기재부차관님이 오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영하지 못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지금 어떤 대상 중에서도 지금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주택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다른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그다음에 또 소득 관련 대상 이런 부분들을 광범위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진섭 위원 제가 귀가 어두워서 그런지 잘 안 들리네요. 이 부분 좀 반영하실 의사가 있는지만 딱 잘라서 말씀을 해 보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소상공인 상가는 기본적으로 영업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재난복구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풍수해보험 대상 적용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해보험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계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드리게 되면 다른 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또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계 부처, 특히 행안부나 또 소방방재청하고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앞으로 관계 부처와 더 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러니까 보험으로 하자는 것이고 시범 사업으로 해서 우선 보험이 정착될 때까지만 지원을 좀 해 주자는 차원이니까 좀 정부 내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얘기를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타운이라고 해 가지고 단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다른 것은 다 저희 광주시에 행정기관들이 입주를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만 예산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입주를 못 해서 이가 빠진 모양으로 됐고 또 선관위원회가 현재 세 들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데가 한 다섯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다섯 군데밖에 안 했는지 또 선거관리위원회, 저희 광주시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이런 데는 안 해도 되는 건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의 판단을 좀 구해 볼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광주시 선관위의 신축 필요성이나 시급성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신축의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국가재정 등이 고려돼 가지고 미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번 예결위에서 이 부분이 신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지원 당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섭 위원 내년도가 선거가 2개나 있는 큰 해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업무를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신청사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해 줌에 있어서 가장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정진섭 위원 그래서 도서관을 국가가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사각지대가 하나 있어서 그리고 주민들의 꼭 숙원사업인 도서관 건립이 하나 요청이 되는데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해서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오포 지역에, 특히 분당과 붙어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분당 쪽 도서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리는 광주시 시민인데 우리가 분당 도서관을 써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좀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이 광특회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광주시에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우리 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2011년 예산 신청이 없었습니다.

○정진섭 위원 예, 저희가 시간을 좀 놓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래서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경기도로부터 해서 광특회계예산 편성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문화재청장님!

○문화재청장 김찬 예.

○정진섭 위원 문화재가 나타나면 그것을 아주 중요한 것은 보전을 하고 또 아닌 곳은 정리를 해서 한 군데에 이렇게 잘 보관하고 그 땅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지 되는데 그냥 문화재가 나왔다고 해 가지고 계속 방치만 해 두고 있으면 그 토지 소유주들에게는 매우 큰 불편이 되겠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맞습니다.

○정진섭 위원 내년도에 이런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발굴비는 지금 말씀 주신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보존 조치에 필요한 토지구입비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올해 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는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고요, 이번 소위 논의에서 잘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이것은 그 주민들에게, 토지소유주들에게 큰 불편을…… 그것이 발견이 되면 빨리 조치를 해 주면 좋은데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그냥 가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아무 조치도 안 해 주고. 이런 것은 행정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 매장문화재 보존 예산이 금년도에 다 해서 한 6억 정도가 있는 모양인데, 한 9억 이상 증액해서 이런 불편들을 해소해 주는 데 정부가 앞장서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오셨나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왔습니다.

○정진섭 위원 2012년 말이 되면 이제 아날로그 방송을 강제로 종료하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그렇습니다.

○정진섭 위원 이것을 피해가구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을 소득 50%까지만 해 준다면서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취약계층 34만 명은 제대로 해 주고 그다음에 50%에 대해서는 한 반 정도를 도와주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전체 직접수신 가구가 96만밖에 안 됩니다. 원래는 100만이 넘는 걸로 통계가 나왔는데 금년 통계에서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게 96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가구를 지원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에 상임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예, 또 이것에 관련된 문의전화들이 많이 올 것이고 이런 데 대한 콜센터 등 행정체제를 준비하고, 또 '당신이 잘사니까 당신 돈으로 해결해라' '당신은 못사니까 해 준다' 이런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정진섭 위원 이것은 증액 조치를 해서라도 피해자들이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국가보훈처 나와 계신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정진섭 위원 이분들이 연로하셔서 자꾸 돌아가시게 되는데 계속 수당은 맨날 쥐꼬리만큼 드리고 이게 참……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3만 원씩 올려 드렸나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정진섭 위원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다 그랬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정진섭 위원 이분들 말씀은 하루에 한 1만 원 정도씩은 되게 해 달라 그런 게 요구사항이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그전에 그런 합의가,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원칙이 그렇게……

○정진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바로 거기에 쫓아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금년에도 한 3만 원 정도씩은 올려 드려서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데 대해서 우리가 빚을 갚는 자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무위에서 적극적으로 그 방향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처장님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여성가족부장관님, 다문화가족이라든가 탈북자가족이 우리 경기도에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아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정진섭 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어떤 건물을 하나 지어서 뒷받침을 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용기를 내 가지고 경기도 수원시 또 여성단체협의회가 다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 국가도 여기에 좀 보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지금 사실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하고 또 타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여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委員長 鄭甲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장병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완 위원 장병완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부장관, 감사원장님,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장님, 법제처장님,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시 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이 후원받은 옥매트 750개를 빼돌려서 자신의 지역구에 뿌렸을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에게도 나누어 준 사실을 지적했고 또 장애인체육회의 신규인력 충원 시에 절반 가량을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로만 채용한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리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직원들을 폭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회장 직위를 이용해 축구공을 또 600여 개를 후원받아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뿌리고, 또 무상급식 주민투표 가두홍보에 직원들을 강제동원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윤석용 회장의 이러한 비리에 대해서 문화부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본 위원실에 보고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드러난 윤석용 회장의 비리가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윤석용 회장이 지역구인 강동구에 뿌린 옥매트 500개의 경우 정황상 장애인체육회에 후원된 물품으로 판단된다, 또 윤석용 회장이 다섯 명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달한 옥매트 250개의 경우 장애인체육회에 후원된 것이 명백하다, 윤석용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성내복지관을 통해 지역구인 강동구에 뿌린 축구공의 경우 개인적으로 후원받기보다 장애인체육회 회장 직위를 이용해 후원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문제가 있다, 장애인인 이모 부장을 폭행한 의혹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장애인체육회 직원 18명을 동원하여 무상급식 반대투표 가두홍보를 벌인 의혹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직원 채용에 있어 신규채용된 15명 중 7명을 윤석용 회장의 지역구인 강동구 주민들로 채운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관, 이런 내용을 보고받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받았습니다.

○장병완 위원 그렇다면 이런 모든 문제점이 사실로 판명되었으면 신속하게 윤석용 회장을 해임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현장조사 또 자료수집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의혹에 대해서 관련자 진술이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관계의 규명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사 중인 검찰에 감사자료를 송부했고, 검찰에서 각종 부당행위 등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장병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실에 와서 보고한 내용하고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이 달랐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설명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해야지 비리를 저지른 당 본인의 말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가치판단하지 않고 말이 상충되니까 그것은 판단 못 한다 하면 정부부처가 왜 있습니까?

지난 11월 4일 장애인체육회 이사회가 열렸는데 이 이사들이 전부 다 본인인 윤석용 회장의 아주 친근한 인원들로만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잘못한 것을 왜 회장이 책임져야 하느냐, 또 윤석용 회장의 어떤 입장을 변호하는 자리로 변모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이런 본인의 문제에 관해서는 제척을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부에서는 이러한 비리를 확인하고도 해임권한은 이사회에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아까 위원님 말씀에서 그것도 '추정된다, 이렇게 판단된다' 이거지 사실규명에 있어서는 좀더 정확한 확인과정이 필요합니다.

○장병완 위원 그러니까 '판단된다'가 뭡니까? '판단된다'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판단된다는 얘기를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왜냐하면 보냈다는 그 자료가 그 당시가 아니라 나중에 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 그것은 관행적으로 몇 가지를 하고 나서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영수증을 끊어주고 끊어주고 했던 것이 관행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관행 과정이고, 500개를 넣은 수원에 있는 나눔복지중앙회 그것은 경기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도 아니고 받아 가지고 다른 데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없는 조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확인된 사실인데 거기에다 가치판단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화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장애인체육회를 정상화시키려면 반드시 윤석용 회장을 즉시 해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장하고 법제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장애인체육회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윤석용 회장은 동법에 따른 공직자에 해당이 됩니다.

또 부패방지법 제8조3항에 보면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보면 제4조에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짓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 제14조에는 '임직원은 본 회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된다' 하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국민권익위원장님하고 법제처장님, 이러한 부패방지법과 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라서 문화부에서 윤석용 회장을 적법절차에 따라서 해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장병완 위원 아니, 공직자가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 판단도 못 하시는 분이 왜 그 자리에 계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아니, 우선 저희 공공기관에 장애인체육회가 소속이 되는지, 행동강령……

○장병완 위원 정확하게……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예, 그것을 제가 좀 검토를 해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장병완 위원 정확하게 해당됩니다. 그것은 아주……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몰랐다고……」 하는 위원 있음)

○장병완 위원 본 위원 질의하는데 가만히 있으세요. 명확히 자료에 나온 사항이니까.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제가 오늘 처음 들은 사례여서 서면으로 꼭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병완 위원 법제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제처장 정선태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병완 위원 제가 조항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법제처장 정선태 예, 저희들이 서면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상세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병완 위원 감사원장님,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원장 양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사권 존중하는 의미에서 융통성 있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 지금 장애인체육회의 직원들은 바로 지금 현재도 윤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윤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천호 한의원 앞에서 시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의 직원들은 본 위원이 제기한 이 옥매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윤 회장의 비리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검찰에 고발한 그 사항 이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설령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장 양건 그 사안에 관해서는 좀더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 연후에 감사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법무부장관입니다.

○장병완 위원 지금 본 위원 질의한 내용을 잘 들으셨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장병완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검찰에서 옥매트의 업무상 횡령 문제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동부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의 직원들은 이외에도 윤 회장이 수많은 비리가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감사관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직원들을 질책하면서 제대로 특별한 조사나 이런 것을 진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 문제를 특별감사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중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해 달라는 이야기고요.

혹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만, 선관위에서 1차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에서 현재 수사 중인 부분은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 현재 많은 국민들과, 특히 장애인 선수들은 윤석용 회장과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이 사건이 짜 맞추기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고 개인의 비리와 관련된 혐의인 만큼 검찰에서 의지를 가지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도 소신을 가지고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 차원에서 수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 방통위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장병완 위원 지금 방송광고시장에서 방송사들이 직접 광고영업을 하는 것이 방송사들의 공영성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그래서 빨리 미디어렙법이 제정이 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 그런데 지난 2일 날 문방위에서 심의를 할 때 위원장께서 방송사의 직접 영업이 반드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는 단정하지 않는다 하는 답변을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라면 미디어렙법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아마 그 대목은 현재 방송법에서 종편사가 자유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상파와 관련해서는 빨리 미디어렙법이 만들

어져서 제대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 모든 것은 본질과 관련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디어렙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가 방금 제가 소개드린 방송위원장의 생각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2008년도의 헌법재판소 취지라는 게 방송사들이 직접 영업을 하면 방송광고시장이 혼란스럽고 공영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미디어렙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디어렙법 자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위원장이 종편은 물론 지상파방송마저도 직접 영업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는 것은 이 본질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부위원장 생각은 어떠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특히 지상파 방송사들은—법이 곧 마련이 될 테니까요—그렇게 가볍게, 빠르게 나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파 방송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이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진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경거망동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 미디어렙법이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을 포함해서 국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방송의 경우도 미디어렙법이라는 수단이 아직 없다는 이유로 방송의 공영성을 포기한다면 방통위 자체가 스스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의 공영성 확보를 위해서 방송사들의 직접 광고영업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막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위원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장병완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정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경 위원 수원 권선구 정미경 위원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님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정미경 위원 장관님,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내년에 총선·대선이 있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정미경 위원 재외국민선거, 솔직히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것은 반국가단체이자 북한 공민 신분인 조총련계가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할 우려가 있으니까 대책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기억합니다.

○정미경 위원 제가 최근에 파악해 본 건데요.

실제로 북한은 조총련에게 우리나라 선거 참여와 관련해서 한국 여권 취득을 장려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북한 225 정보국에서 조총련에게 '선거 개입하라' 지침을 하달했고, 일본 현지에서도 정권 교체를 위해 투표하자는 식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그런 정보가 있다, 이것 맞다' 이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 내용을 정말 정확하게 안다면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이것은 보수와 진보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정미경 위원 그렇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뭐냐 하면 북한이 실제로 대한민국의 대표자들을 뽑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국민들이 직접, 만약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안다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아직은 조총련 내에서 또는 일본 내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부가 거기에 합당한……

○정미경 위원 장관님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이미 늦은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런데요. 하여튼 지금 정부에서 나름대로……

○정미경 위원 지금 장관님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하겠다 이것은, 이제 국민들께 제가 계속 얘기할 것인데, 억장 무너지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부에서도 유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모여서 지금 논의를 하고 또 현행법만 가지고 다루기 어려운 부분은 국회입법사항도 저희가 협조 요청드

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외교통상부가 가장 협조를 안 해서 제가 지금 외교통상부장관님께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지 않습니다. 외교통상부가 특별히 협조 안 할 이유가 없고요.

○정미경 위원 그러면 장관님 지금 현재 일본에 조총련으로 추정되는 교포가 8만 5000명인 것 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런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미경 위원 이 중 5만 명이 아직 여권 취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여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여권법에다가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조총련은 국가보안법 2조와 3조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판결 받았어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정갑윤 위원장, 장윤석 간사와 사회교대)

○정미경 위원 그러니까 여권법에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은 여권 발급을 제한하겠다' 이런 규정을 신설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검토는 이미 다 했습니다. 결단을 내리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만 보면 결단도 필요하지마는 또 다르게 봐야 될 측면도 있고요.

○정미경 위원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은 뭔데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여권이라는 것은 지금 현행법상 우리 국민에 대해서 발급을 제한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법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입법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측에 대해서도.

○정미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김정일을 추종하는 김정일의 핵심 멤버가 조총련계인데 그 사람이 여권 취득해 가지고 투표한다 이러면 속수무책으로 그냥 있으면 돼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희들이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도 파악하고,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 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계부처 간에 현재 대책협의체를 마련해 놓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대응책은 법으로 넣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정미경 위원 그런데 외교통상부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일의 양이 많고 너무 어렵고 이래서 잘 못 하겠다는 취지로 협조하지 않는다고 국민들께서 아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그것은 사실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얘기가 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일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미경 위원 그러면 여권법에 이 규정을 넣는 것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검토했고 다른 부처하고 다 논의를 했는데 이 방법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외교통상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 많아진다고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국가의 존립 문제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이 많기 때문에 외교부가 피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통상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금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계속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지금 협조하는 정도 가지고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알고 있습니다.

○정미경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욱더 어떻게 하시겠어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하여튼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관계부처에서 의견을 만들어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장관님 이것 연구해서, 이미 밑에 실무자들 다 연구했거든요. 지금 장관님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지는 않고요.

○정미경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 보고받으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다른 정부부처는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외교통상부는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을 꼭 전해 주세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서면으로 전해 주세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3일 내로 해 주세요. 지금 이미 다 끝났다고 그러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3일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국방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귀신 잡는 해병대도요 잠자리가 좀 편해야 귀신을 잡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정미경 위원 그런데 해병대 2사단에 100여 명에 가까운 병사들이 지금 잠자리가 없어 가지고 컨테이너에서 자거나 그냥 내무실에서 쪽잠 자고 그런다고 합니다. 장관님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해병대 2사단 통합숙영지생활관은 이번에 꼭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기획재정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차관입니다.

○정미경 위원 차관님 지금 들으셨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숙소와 관련해서는 내년까지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전체를 다 바꾸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아니, 지금 약간 너무나 넓게, 광범위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해병대 2사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개별 사단에 대해서는……

○정미경 위원 생활관 이것 기획재정부에서 깎지 마시고 이번에 좀 넣어 주세요. 왜냐하면 해병대는 육군·공군·해군 그다음에 해병대 이렇게 항상 누군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같이 보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고개를 끄덕임)

○정미경 위원 행안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정미경 위원 장관님 제가 늘 우리 수원 권선구 이야기를 참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수도권에 전투비행장이 있는 곳이 저희밖에 없거든요. 수원에 있습니다. 그것도 권선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음이 실제로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고색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고색동에 파출소가 있는데 1989년에 완공, 그러니까 지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올해로 22년이 됐습니다. 여기에 경찰관 등 직원 2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답답해서 가서 보고 이렇게 사진도 찍었는데 잘 안 보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정미경 위원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서……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제가 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색동파출소에 대해서.

○정미경 위원 그런데 사실은 고색동 주민들이나 이렇게 좀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은 파출소, 경찰의 기능이 단순히 나쁜 사람을 잡아 주고 이런 것도 물론이지만 더 나아가서 뭐가 되느냐 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 그냥 주민들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파출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찰관 아저씨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위로가 되거든요, 위안이 되고. 그런데 굉장히 사실은 열심히 하고 계세요, 경찰이, 제가 보니까. 힘든 지역일수록 경찰은 자기 본연의 임무 외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근무하는 집, 사실은 집이지요. 밤에만 집이 아니라 낮에도 있는 곳이 집이지요. 근무하는 곳은 좀 편안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사실 행안부 예산은 아니고 경찰청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협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조현오 청장님 계시지요?

○경찰청장 조현오 예.

○정미경 위원 청장님 이것 보고 받으셨나요?

○경찰청장 조현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기획재정부에서 도와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지금 경찰청뿐만 아니라 청사·관사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파출소의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보고 있고요. 또 경찰청 자체에서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파출소는 예산 요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요.

하여튼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급한 대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제가 생각하는 복지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일단 살고 있는, 일하는 곳이 좋아야지 사실 그게 복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국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잘하는 것도 일단 자기 스스로가 행복해야지 국민들께 친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점을 좀 참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정미경 위원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법무부장관입니다.

○정미경 위원 철이 철이니만큼 내년에 큰 선거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질 텐데요 지금 제가 우려하는 지점이 이겁니다. 김정일 찬양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것을 종북사이트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저는 김정일 부자 내지는 김정일·김일성 찬양 사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내용을 보면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막으실 건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검찰에서 이미 방침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마는 안보에 대해서 위협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현재 종북사이트의 지속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특별수사반도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을 우선 철저히 하고 그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해서 엄벌이 되고 또 그 사이트가 적극적으로 처벌도 되고 폐쇄도 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장관님, 현황 파악은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3년간 경찰에 적발돼 폐쇄 조치된 국내의 김정일 찬양 사이트는 총 281개입니다. 주목할 것은 281개 중에서 178개가 시기상으로 올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37개는 초등학교, 중학생이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현황입니다.

가장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지점은 뭐냐 하면, 블로그라든지 사이트 이런 인터넷 활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아이들에게 지금 제대로 가치관을 정립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실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거든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지금 현재 단속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이게 판결이 조금 온정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법원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상응한 엄중한 판결이 나도록 저희들이 공소유지나 수사에 있어서 철저하게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예, 사후적 대책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전적인 대책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에 그것에 대한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지금 사이버범죄에 대한, 물론 종북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든 사이버범죄에 대한 거지만 사이버범죄에 대해서 특별한 기구를 검찰에서 만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미경 위원 그러면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권재진 알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張倫碩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딱 맞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 부산 사하을의 민주당 조경태 위

원입니다.

총리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예, 나와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에너지협력외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지식경제부에서도 하고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대통령께서 에너지외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총리실에서 하는 업무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에너지외교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따라서 에너지협력외교활동 지원사업 2억 9400만 원은 삭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일차적으로 자원외교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 하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에너지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고위층 간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상대적으로 상응하는 지위를 맞춰 주기 위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저개발국들이 많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대개 SOC라든가 혹은 기술 이전, 농업 협력 등 다른 분야하고 연계해서 패키지형으로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부처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의미에서 총리실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비록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총리실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조경태 위원 그런데 실적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냈으니까 국회에서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재부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조경태 위원 전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

○조경태 위원 한 103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거든요, 업무추진비.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업추비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억제하고 또 절약을 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조경태 위원 특히 통일부 같은 경우는 별로 활동도 안 하는데 27%나 증가가 됐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개별사업이 좀 늘어난다든지 특이한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베이스로 해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합니다.

○조경태 위원 아니, 활동도 안 하는 부처에다가 왜 이렇게 증가를 시켜 줍니까?

가능하면, 통일부·국토부·행안부 이런 데 20% 이상 증가되었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도 또 선거도 있고 이래서 좀 다르다라고 봐도 이런 20% 이상 증가된 부처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를 들면 국토부 같은 경우는 다른 부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봐서 굉장히 인원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업추비의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처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행정경비는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다른 부처는 모르겠습니다. 통일부는 좀 줄여 주십시오.

특임장관실 나와 계시지요?

○특임장관직무대행 김해진 예, 차관 나와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업무추진비가 한 해 얼마입니까?

○특임장관직무대행 김해진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기준으로 6억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특임장관실이 하는 일이 있습니까?

○특임장관직무대행 김해진 많습니다.

○조경태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뭘 하고 있는지 국민들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뭘 하고 계세요?

○특임장관직무대행 김해진 특임장관실은 정치권과의 어떤 소통과는 또 별개로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직능단체, 지방자치단체와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쪽에 많은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특임장관실이 일일이 실적을 홍보하거나 하는 그런 부처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다소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경태 위원 FTA와 관련해서 어떤 시민단체하고 어떤 활동했는지 지금 이야기해 보세요.

○특임장관직무대행 김해진 FTA 말입니까?

○조경태 위원 FTA와 관련해서 시민, 중소 유통 상인들하고 대표자들하고 만나서 회의하거나 소통한 게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특임장관직무대행 김해진 FTA 시위가 나면 다 저희들이……

○조경태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한미 FTA와 관련해서 대책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한 게 있으면 이야기해 보라고요.

○특임장관직무대행 김해진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깊이 있는 관여보다 그것은 여야 원내대표들도 있고 정부 대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전문성이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주로 의견 수렴 차원에서 관여를 했습니다.

○조경태 위원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시민대표들하고? 아까 시민대표들하고 만났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특임장관직무대행 김해진 시위 현장에서 만납니다.

○조경태 위원 현장……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역할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특임장관직무대행 김해진 아니, 현장에서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조경태 위원 현장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특임장관직무대행 김해진 현장에서 시위하면 현장에 시민단체들이, 대표들이 다 나가 있지요.

○조경태 위원 업무추진비 얼마라고 했지요?

○특임장관직무대행 김해진 6억 2000입니다.

○조경태 위원 6억 2000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통일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예.

○조경태 위원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왜 집행률이 떨어집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현재 남북 간에 관계가 상당히 경색되어 있어서 교류 협력에 관한 사업을 집행하기가 여건이 충분치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용이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집행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조경태 위원 그러면 제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남북이 경색되면 통일부의 역할, 고유의 역할들은 잠시간 개점휴업 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관계라는 것이 지금까지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기복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러한 기복이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라 하더라도 인도적 지원이나 또는 남북한 간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교류 협력은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본격적인 교류 협력은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 실험과 두 차례에 걸친 무력도발 때문에 우리가 5·24 조치를 취했고 이러한 5·24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에서는 이것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된다면 이런 사업은 통일부에서 주도적으로 죽 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조경태 위원 지금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률이 2.8%밖에 안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5000억 이상 삭감을 해야 되고……

기재부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조경태 위원 통일부 조직을 50% 이상 줄이십시오.

줄이고,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대북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통일부장관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예, 직접 만나서 들었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런데 2010년, 2011년도에 걸쳐서 유니세프의 경우만 예를 들어도 한 푼도 지원된 적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왜 이렇게 합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아까 말씀드렸듯이 5·24 조치로 해서 남북 간에 교류 협력이 제한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는 견지에서 반기문 사무총장과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북한의 영유아에 대한 식품 지원과 또 결핵 약이나 간염 백신 등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등의 지원을 일부는 이미 시행을 했고 또 차후로 시행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 교류 협력의 실적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깎아버리면 앞으로 남북 간의 교류 협

력은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부 예산은 다른 부처 예산과 달리 상대가 있어서 그 상대와의 관계를 고려해 가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년도의 실적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경태 위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를 말라고 했습니다.

통일부에서 일도 안 하는데, 장관님 한 해에 받는 연봉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다 국민들 세금입니다.

○통일부장관 류우익 통일부가……

○조경태 위원 들어보십시오, 장관님.

통일부를 만든 목적은 남북 간의 교류 협력과 남북 간의 평화 조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권력,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 정권에서 경색된 국면이 있으면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역할을 통일부에서 해 줘야지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제가 대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경태 위원 됐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장관님.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류우익 통일부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한 적은 없고요, 또 통일부는 남북의 교류협력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여건을 국내외에서 조성하는 사업과 또 분단 상황으로 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착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어서 통일부가 회담에 관한 일을 진척하지 않는다고 해서 통일부의 존재 가치를 격하시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경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대북 인도주의적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충실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남한 사회에 탈북해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행안부도 있고 여러 부처에서 지금, 법무부에서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원래 취지는 남북 간의 평화공조, 평화무드를 형성시키는, 평화적인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통일부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만들어 드리면 거기에 충실하게 쓰셔야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이 2.8%밖에 안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너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통일부에서 보다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드린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장관님?

○통일부장관 류우익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리고 오죽했으면 유엔 사무총장께서 나서 가지고 북한 어린이들, 영유아를 위해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이해 되시잖아요, 그 부분은?

○통일부장관 류우익 예,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해마다 그런데도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이 집행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류우익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조경태 위원 녹색성장 관련해서 중복되는 예산이 많다는 것 많이 보고 받으셨을 텐데요, 비녹색사업이라든지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을 해 주시고,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녹색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저희들 외부에서 그런 지적이 있고, 다만 비녹색사업으로 지적된 사항들도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요. 다만 원칙적으로 중복이 된다든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행안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조경태 위원 친환경 방문객 지원시설사업이 있는데 이게 2012년도 200억 예산 책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조경태 위원 이게 중복사업이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친환경 방문객 지원사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조경태 위원 지원시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제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조경태 위원 이게 보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생태탐방로사업이 있고, 국토해양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아, 이것은 녹색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조경태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산림청 환경부 문화관광부 행안부 이렇게 몇 개 부처가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조금씩 그 성격이 다릅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서 중복사업이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중복사업의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전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나눌 적에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중복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하여튼 200억 정도 예산을 저는 삭감 주장을 하는데,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조경태 위원 이것 역시 아주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글쎄요,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경태 위원 혹시 자전거로 인해서 사망사고율 이런 것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금 제대로 법체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 행정안전부에 자전거가 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자전거과로 승격을 시켰고, 거기서 법제화 문제라든지 자전거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보완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부산시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었는데 전시행정의 대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사하구 말씀하시는 것 제가 압니다. 그런데 아는데……

○조경태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 보시면,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데 수억을 들였습니다. 만들었는데 자전거는 한 대도 안 지나다닙니다. 안 지나다니고 오히려 여기 주차를 해 놓았어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여기뿐 아니라 여의도도 그렇습니다. 여의도 주변에도 자전거길이 있는데 거기 지금 전부 주차장으로 쓰고 그래서 막아놓고 그런 사정입니다마는 이게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자전거도로를 좀 만들자 해 가지고 시작을 했더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한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것, 그것은 4대강이나 이런 쪽은 만들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이것을 정비해 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조경태 위원 초기에만 그런 게 아니고 지난해에도 공단 내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사하구만 해도.

그리고 국민들이 항상 불만이 뭐냐 하면 왜 연말연시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시 엎고 다시 하느냐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그것도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이번에 보도블록 한 것뿐만 아니라 연말에 예산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 하도록 금년에는 막을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지침이 내려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의 전시행정 사례가 있는지를 행정안전부에서 자체 감사를 전국 지자체에다가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저희들은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하구만 해도 4차선 중에 한 차선을 자전거도로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들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자전거도로에다가 갖다가 대놓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사실은 구미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습니다마는 공단에 갈 적에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지하철에서 공단까지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자전거길을 분리시켜 가지고 자동차가 거기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부산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부산시만 할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낭비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잘 알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알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여성가족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조경태 위원 청소년 폭력 및 가출 예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가출 예방 부분은 좀 깎였는데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이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특히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피해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조경태 위원 이런 데에 대해서 사업비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1억 3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사업을 집행하는 부처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확보되면 좋은데요. 전체적인 재정여건하에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편부·편모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이혼율이 높아 가지고?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조경태 위원 거기에서 발생하는 아동 폭력 그러니까 일종의 계부·계모에 의해서, 그런 것을 혹시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사실 그래서 아동 성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일 경우는 따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도가니' 영화 이후에 이런 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져서요, 우리가 내년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서 편부·편모에 의해서, 여자아이 또는 남자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당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많거든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켜 주는 노력을 여성가족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조사가 미흡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지금 저희가 시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또 아직 사회적 인식이 어려운 점도 있고 국회의 예산도 지금 기본적인 인프라가 아직 전국적으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연구도 더 하고 예산이 허락하는 내에서 아동피해 사례를, 저희가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조경태 위원 한류 진흥 사업 중에 보면 쌍방향 문화교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전년도보다 대폭 늘었거든요? 36억 정도 늘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사업의 효율성이 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잘 아시겠지만 K-pop 이런 신 한류가 여러 나라에서 많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류 진흥 사업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또 해외에 있는 문화원과 협력을 해서 수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심형래 씨 그런 건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조경태 위원 그런 건에 대해서는 왜 그런 식으로 예산이 나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래서 그것은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집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나와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부위원장입니다.

○조경태 위원 2012년 12월 31일부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혼란이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그래서 지금 직접수신 가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만 가구가 안 되고 96만 가구이기 때문에 전체를 지원을 좀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마침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 뜻을 받아주셔 가지고 예산증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지금 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이 갑자기 안 나오는 사례는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꼭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지금 방통위에서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른 피해가구 구제를 위해서 177억 증액을 요구했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177억?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조경태 위원 그런데 최근에 주파수 경매제를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돈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張倫碩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마이크 넣어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이 돈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쓰면 되지 않겠나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그렇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이미 편성 집행을 하고 있는데 증액 부분도 기재부하고 이 부분을 협의해서 무리 없이 잘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張倫碩 조경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여성가족부하고 법무부장관께 질의를 하는데요. 이 질의 내용이 보건복지부·교육과학부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게 아마도 주무적인 일은 여성가족부에서 처리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가부장관님께서 오늘 출석하지 않은 두 장관한테도 해당 사항을 좀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인화학교 관련해서 며칠 전에 "그 피해자들을 대리한 변호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거다" 이런 언론 기사를 봤는데 장관님도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김재경 위원 그쪽 변호인단하고 그리고 피해자들 8명을 강남 세브란스병원 정신과에다가 입원 조치를 해서 치료를 죽 해 온 그 의료진, 또 몇몇 관심 있는 언론에서 우리 한나라당 정책위를 통해서 아마 전달된 문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누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김재경 위원 치료하면서 관찰을 해 보니까 심각한 정신병리 증상을 보이고 있다, 6명은. 그리고 2명은 자연회복이 된 상태였다. 피해자들이 그동안 정신과 진료도 없이 그냥 방치되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이들의 정신적 증상에 대한 고려 없이 수사가 진행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정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데 수화가 가능한 정신과 의사나 심리치료사가 없고 광주에서는 이들의 치료를 맡을 의료기관이 없다는 거지요. 하나 있었는데 전문의가 현재 사표를 낸 상태다, 그래서 입원진료비를 광주시청에서 지원을 했다, 이게 개괄적인 지금까지의 경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부에다가 제안을 하는 것은 향후 장애인을 위한 제대로 된 치료재활복지제도가 마련되어야 되겠다, 농아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화에 능통한 심리치료사 등등이 배치되는 이런 장기적인 어젠다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기금에서 이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인단이 마련되고 지원될 수 있는 이런 게 좀 지원, 뒷받침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가니사건 해결을 위한 변호인단 마련을 위한 법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장애 특성에 대한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특수교육프로그램을 지식경제부 측에서 좀 만들어야 된다, 이래서 앞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설계까지 요구사항이 꽤 많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기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제도에다가 이런 취지를 좀 가미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완전히 새로 설계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이번에 총리실 주재로 장애인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대책을 마련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장윤석 간사, 정갑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재경 위원 그래서 법률구조사업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장애인보호시설과 그룹 홈 추가설치가 필요하다 또 장애인상담소와 서비스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장애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예방교육예산이 필요하다 이러는데, 장관님께서는 저번에 여가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시고 또 예산의 충분한 확보에 대한 의지도 가지고 계셨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류성걸 차관님, 제가 오늘 질의는 굉장히 개괄적인 게 돼서 자세한 것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하여튼 주무부서하고 잘 좀 상의하셔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소방방재청장님.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예, 소방방재청장입니다.

○김재경 위원 아까 정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상가·공장 풍수해보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을 하시는가 보지요?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예.

○김재경 위원 지금 내년 예산이 94억 6000인가요?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그렇습니다. 94억입니다.

○김재경 위원 그런데 그게 확정이 돼서 시범실시를 하고 더 모범적인 사업을 토대로 해 가지고 좀 확대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한 11억 8000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지요?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에 관련되는 증액되는 부분이 11억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재경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중소기업에서도 지경위가 그쪽하고 업무 연관이 있다 보니까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의견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재부하고 잘 협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알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민주평통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인데요.

보훈처장님 하시나요? 이것은 누가 하시지요? 그래도 종국의 답변은 기재부에서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지요.

249명의 지역회의 및 협의회 사무주임이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 임금이 상승한 데 비해서 이 임금은 3년째 동결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 계속된 지적이 있은 후 올해 정부에서 3% 인상을 해 주기로 했다 했습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 중에서도 수당이 전혀 반영이 안 됐고 또 상임위에서는 한 15%로 지금 아마 인상을 해서 수정의결이 됐는데 여전히 호봉제나 명절휴가비 외의 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래서 연차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정도는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던데요, 어떻습니까? 좀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저한테……

○김재경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이 부분은 행안부하고 또 관련 부처가 같이 좀 봐야 될 사항입니다. 특히 공무원에 있어서의 비정규직 부분은 여러 파급효과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형평성 문제는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너무 처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아마 보훈처 소관 예산인 것 같은데 6·25 참전용사 수당 이것 지금 어찌되고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현재 6·25 참전용사 수당은 12만 원 정도 주고 무공수훈자는 18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누차 하는 이야기지만 이제는 이분들이 생존해 계시는 분들 숫자가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우리로서는 정말 가슴 아팠던 일이고 또 오늘날 우리 경제 번영이라는 게 이를 토대로 되어 있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분들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조금은 전향적으로 수용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해마다 반복해서 이런 요구들을 우리 국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인데 작년에 일괄적으로 많이 인상을 했었고 금년에도 지금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인상안을 결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결위나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금년에도 인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경 위원 저희들도 뜻을 보탤 테니까 끝까지 한번 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문화관광부장관님, 진주에 한번 와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10월 달 되면 여러 가지 진주에서 축제를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축제 예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 문제를 개괄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진주의 개천예술제는 우리나라 건국과 비슷하게 시작이 될 정도로 역사가 깊거든요, 지금은 지자체 되고 나서 거의 동네마다 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 축제의 역사를 가지고, 요즘 최근에 시작된 것 중 하나가 똑같은 시기에 하기는 합니다만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이라는 축제가 있는데 똑같은 시기에 다 몰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06년부터 시작됐는데 2007년 이후에는 국내외 관광객이 30만 이상 모이고, 올해도 그 효과 조사하러 나온 요원들이 보이던데 다 조사를 하고 계시니까, 소득 창출효과도 100억 원에 육박하는 이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후로 정부안은 항상 한 10억 정도 편성이 되어 가지고 국회에서 밀고 당기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20억씩 확정이 되어 왔는데 내년 예산도 보니까 5억밖에는 지금 정부안으로 안 되어 있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한 20억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죽 해 오던 여러 가지 패턴도 있고 이런 게 있을 텐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은 드라마 축제로서 콘텐츠 유통하는 장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 과다한 증액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2011년 예산 9억 5000 그 정도로 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너무 밀고 당기고 해 가지고 나중에 그냥 우리 달라는 대로 그렇게 주지 마시고 하여튼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께 다시 한번 질의해야 되겠네요.

우리 진주교육대학에 보면 교육문화회관 내에 다문화교육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한 13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와 지방비가 50%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주가 농업 도시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다문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이해도 시키고 소통의 장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준비가 되고 있는데 올 7월에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해서 2013년도에 준공되기로 했는데 좀 빠른 착공을 위해서 이 절반, 13억의 절반이니까 국비가 6억 6000인데 이게 한꺼번에 지원이 되면 훨씬 효율적인 사업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다문화가족, 지금 전국에 한 200개 있고요. 추가적인 시설 건립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도에서도 복합시설 건립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삼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다른 데하고는 조금 차별화되는

게, 그쪽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농촌에 가보면 대체로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굉장히 이 인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소에 존경하는 곽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숙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법무부, 국방부 이렇게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도가니 사태가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기본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곽정숙 위원 그 사태 이후로 인권위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그 사태 이후로 저희들이 직권조사 또 방문조사 해서 광주 현지에 내려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처를 했습니다.

○곽정숙 위원 조사하셔서 조사 결과를 어떻게 발표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예, 실제적으로 광주시에서 거기 생활인들을 전원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선 대화가 안 되고 조사하는 기법도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거기 시설에 있던 원생들을 전부 타지로, 다른 시설로 같이 데리고 나와서 합숙을 하면서 조사를 했고요.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결과들, 저희들이 낸 결과를 가지고서 광주시에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전문가들을 광주시에서 다시 협조를 요구를 해서 저희들하고는 끝나고 다시 개인적으로 그것을 하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곽정숙 위원 여러 가지 대처가 미흡합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단적인 사례로도 인권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인식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교육, 인권 감수성에 대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인권교육활성화사업 그다음에 장애인인권증진사업의 예산이 아주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늘려서 인권교육 활성화를 하고 특별히 장애인인권증진사업에 있어서도 보다 더 강화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이런 일들을 안 하겠다는 건지 소극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예산을 이렇게 대폭 감액했는데요.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위원님 말씀을 동감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많이, 실제적인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에서는 한 1억 50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전에는 장애인교육을 따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 분야를 강화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분야가 많이 있어서 장애인교육도 교육 전체, 인권위원회 전체 교육 속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예산을 짜다 보니까 중복된 게 한 6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저희들이 벌였던 사업 중에서 장애인 유형별 차별사유를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장애유형별 차별 상황 실태조사'라고 해서 이게 한 2억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장애인 국제심포지엄을 작년에 열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년에 사업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대안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게 한 2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 차액이 한 사오천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억 정도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마는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교육도 인권위 전체 교육 속에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작년과 다르지 않게 저희들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저희들이 1년에 토털 사업예산이 약 5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벌여야 되는 사업은 약 40개 정도가 나오고 금년에 더 새로운 사업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정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숙 위원 지금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올해 정도로 내년에도 하겠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삭감을 해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으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반인권적인 상황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수준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현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다 더 강화하고 책임 있게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을 그렇게 말씀하

시면 도대체 인권위원회가 충분하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2011년 4월부터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기관이 그동안 300명에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업장으로 하는 곳으로 더 늘어났고,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알고 있다'라는 답변은 17.8%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차별에 대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런 것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고 장애 관련 진정사건의 현황도 2009년 1300건, 2010년 2900건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올해 2011년도에 비해서 장애인인권증진사업 예산이 25.5%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삭감되고 감액된 예산을 다시 복구하시고 오히려 증액해서 보다 더 장애인 인권증진은 물론 전체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더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금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정숙 위원 여성가족부장관님, 지금 상임위에 장애여성지원법이 상정이 되어서 논의하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곽정숙 위원 이 법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지금 장애 여성이 입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장애 여성에 대한 특별한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법률적인 체계에서 볼 때 그 대상별로 따로 법을 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 법이 개별법으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곽정숙 위원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체 우리가,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고, 모든 여성이, 더더구나 가장 차별의 대상, 다중적인 차별의 대상에 놓여 있고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있고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장애 여성에 대해서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나서서 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극적인 대처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현재 장애 여성을 지원하고 있는 어울림센터가 있어서 일정 부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단위사업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단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언제 했다가 언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보다 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장애 여성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법의 의도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해 놓은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

그다음에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하나라도 여성가족부가 직영을 해서 설치를 해서 해 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011년 8월 23일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그렇습니다.

○곽정숙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올해 성별영향평가 추진 운영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될 것인데 감액이 되었다는 게 문제이고, 그다음에 2013년 회계연도부터는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이 되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그렇습니다.

○곽정숙 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 예산도 지원하는 예산, 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예산도 확대되어야 되는데 여기도 감소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곽정숙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한 37억 9400만 원이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장관이 동의하고 계신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이 정부안이 제출된 다음에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법 통과에 따른, 시행에 따른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위 차원에서 이 법 시행에 따른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예산부분이 증액이 되어야지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곽정숙 위원 적극 애써주시고 기재부장관께서

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그리고 우리 국회 위원회에서도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에 대해서 전적으로 민간이 알아서 해라, 정부가 도대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산 관련 말씀이십니까?

○곽정숙 위원 예산 관련이든 아니든 한 일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명예회복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정부가 한 일이 뭡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정부에서 위안부할머니들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의료비나 여러 가지 복지 관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곽정숙 위원 복지 관련 지원하는 것 자체가 명예회복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관련해서는 최근 외통부에서 일본정부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장관…… 양국간 장관 면담 시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정부 측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정숙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한 일이라고는 사이버역사관 운영, 예산이 4800만 원 이게 전부입니다. 국회에서 2008년도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촉구 결의문을 채택을 했고, 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여성가족부나 정부는 두 손 놓고 그냥 있는 겁니다. 4800만 원 예산해 놓고…… 지금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 건립을 지원하는 일에 여성가족부가 적극 나서야 됩니다. 이거 민간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손놓고 무책임하게…… 정부가 하셔야지요. 그리고 민간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이 하고 있으면 '너무 고맙다, 고생한다,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이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 이런 태도로 해도 될까 말까하는데 '민간이 하는 일이니까 줄 수 없다' 이러면서 손놓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여가부 예비심사에서 건립 지원을 위해서 5억 원 예산을 반영해 놨는데요. 적극 이것도 지원해서…… 책임지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야 합의하에 지금 박물관 건립에 대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도와주신다면 지금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신을 살려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성매매 피해여성 쉼터, 광주에 성매매 피해여성 쉼터가 있는데 이것도 다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민간단체가 다 할 수 없어서 힘들지만 부여잡고 있는 건데, 그 건물임대비가 없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임대해서 피해여성들을 쉴 수 있도록 마련했는데 기간이 지나니까 모금회에서 '이 돈 주라', 반환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민간에서 애써서 했으니까 이거 마련해서 대처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사실 정부가 미처 관심을 갖지 못할 때 민간에서 이런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시작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을 구조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지원은 아시다시피 어떤 일정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실 지원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챙겨서 지원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곽정숙 위원 예, 그러십시다.

법무부장관님, 2011년 9월에 국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조항이 마련됨에 따라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무료 법률지원 사업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곽정숙 위원 그리고 피해 장애여성 중에 60%

가 쉼터를 이용하는데 장애인전용쉼터에 갈 수가 없어서 일반쉼터에 서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통해서 여성가족부가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잡혀 있는데, 무료 법률지원 사업 수요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피해여성,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특별히 장애여성에 대한 쉼터나 그룹홈, 또 상담소, 여기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에 대해서 증액 요청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비심사에서 마련한 증액요청서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만드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장관 권재진 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다만 지원 강화라든지 예산증액을 하려면 기금이…… 재원이 지금 벌금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액이 적게 수납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벌금의 징수 실정이 지금…… 한데, 어쨌든 간에 일반회계의 증액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한나라당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한나라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11월 15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회 방문을 통해서 국회가 FTA 비준 동의해 준다면 지금 여야 쟁점사항으로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ISD 조항을 책임지고 90일 이내에 재협상하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러셨습니다.

○김성태 위원 장관님께서는 지난 11월 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재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는 그 발언이 무효가 된 거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사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한미 FTA를 발효하기 전에 미 측과 재협상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어제 대통령님께서는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셔서 한미 FTA를 발효한 후에 ISD에 대해서 미 측과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밝혀 주셨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심을 한 사항이다 이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오늘 언론에서는 미 통상 당국자가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미 FTA에 관해서 한국 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식 답변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본 위원도 미국도 한미 FTA의 민감성이라든지, 또 한미관계를 고려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회 약속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 한미 정부 간에 우선적인 교감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각에서 비준 이후에 미국이 재협상 요구를 일축하면 그만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미국의 공식 답변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 또 네티즌들의 사이버공간에서 이런 악의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의 수장이자 국무위원으로서 공식적으로 미국의 답변을 받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미국 측에서 USTR의 대변인에게 우리 연합뉴스의 특파원이 대통령님께서 어저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을 공식으로 질문했고, 또 USTR 대변인이 직접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국 측의 그러한 말을 믿고 있고, 또 미국 FTA 조항에 따라서도 일단 발효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무슨 문제든지 협의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고, 미 측도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김성태 위원 본 위원도…… 이 FTA 처리 문제가 국회에서 정말 순수하게 국민을 위하고 국

익을 위한 어떤 그런 측면에서 고민이 아니라 …… 특히 야권에서는 야권 대연합이라는 내년 총선이라든지 대선을 앞둔 이 엄청난 정치적인 계절에 이 FTA가 지금 상당히 악용되고 있어요. 처음에 농어촌문제 대책 세워 주면…… 문제 제기했고, yes, 오케이 되었고,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ISD 문제 제기돼 가지고 어제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는데……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오늘 지금 야당의, 특히 민주당 입장은 재재협상만이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특히 '독이 든 만두를 먹을 수는 없다' 그런 격한 표현까지 하면서 어제 대통령이 국회 방문해서 비준 동의 이후에 90일 이내에 미국과 다시 재협상하겠다는 이 자체를 갖다 지금 무시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은 앞으로 우리 국익을 위한 진정한 국회의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는 이러한 ISD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가 있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독이 든 만두다 이런 견해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정부로서도 이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대통령님께서 야당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어려운 결심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태 위원 다음은 최광식 문화관광부장관님, 손기정 선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성태 위원 또 지난 8월 달에 개최된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개막식은 전 세계 60억 인구가 우리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지켜 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성태 위원 그때 시청자들은 대한민국 손기정 선수의 1936년 베를린올림픽 금메달 동영상과 기념공연을 통해서 우리의 아픈 역사를 또 이해하고 그 당시 우리의 민족혼이 스포츠를 통해 승화되었던 감동적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성태 위원 종합정책질의 때도 관련 동영상을 틀어 드렸는데 기억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성태 위원 장관님,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우리 암울한 일제시대 때 그렇게 우리 민족의 어떤 영웅으로서 국민들에게 민족의 어떤 그런 정기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위원 손기정 선수는, 맞습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준 스포츠 영웅이자 역사적으로도 체육계를 빛낸 독보적인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세계 체육사에서 영웅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성태 위원 내년 2012년은 손기정 선수 탄생 100주년이고 또 이분이 서거하신 지 1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기리는 사업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동의합니다.

○김성태 위원 이런 사업으로 내년에 손기정 평화마라톤과 또 평화음악회, 그 외에도 지금 현재, 특히 작년에 예산이 반영돼서 손기정 기념관 건립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도 4억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장관님, 내년 손기정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마라톤행사와 이런 평화음악회 그리고 손기정 기념관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손기정 선생님 기념관은 이미 지자체 요구 전액이 정부안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평화음악제라든지 마라톤대회 이것도 저희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문화부장관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전국에 영구임대아파트 시설환경 개선, 그러니까 영구 9평 11평, 기초생활수급 고령자・장애인들・소년소녀가장・탈북주민 이런 우

리 사회계층의 가장 취약계층이 살아가는 주거환경이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9평 11평.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지금까지 약 400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켰고,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지역 주민들의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변, 이런 교육 문화적인 시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등촌3동에 구립도서관을, 그런 취약계층 자녀들과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51억 사업에 국비가 16억 지원되는데 지금 남은 계속사업으로서 문광부에서 약 8억 원 가까이가 좀 지원이 계속사업으로 돼야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 사업은 2012년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8억 9800만 원, 내년에 7억 46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김성태 위원 예.

임종룡 국무총리실장님!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예.

○김성태 위원 에너지협력외교 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예.

○김성태 위원 중앙행정기관의, 국무총리실의 주된 역할 중에서 행정의 지휘·감독과 또 사회 위험·갈등 관리, 규제개혁에 관해서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부분이 국무총리실의 주된 역할 맞지요?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에너지 정책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고위급 에너지협력외교와 자원개발 협력 등을 통해서 이미 자원협력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재정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리실에서?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측면으로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외교를 하다 보면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대개 그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는 국가들입니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협상을 하기 위한, 그 상응한 레벨의 협의를 위해서 총리실이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외교에서 지경부가 주로 전문기관이고 또 일차적으로 담당할 기관임은 틀림없습니다마는 갈수록 자원협력이라는 것이 일종의 패키지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개발을 같이 해 달라든가 뭐 기술이전을 해 달라 한다든가 SOC 개발을 해 달라든가, 이렇게 되면 지경부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 부처의 일이 관련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총리실이 나서서 각 부처의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혹은 때에 따라서는 총괄을 하는 이런 기능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때 좀 총리실이 나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김성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유가 있다면 개별 부처에서 다루기 어려운 수준의 자원외교가 주된 내용이 돼야 할 것이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하지만 2010년의 경우에도, 작년에 같은 경우도 녹색성장 정책 소개, 그리고 한국 발전의 성공요인 홍보, G20 정상회의 초청, 주택건설사업 추진 협조 지원 및 6·25 참전 기념공원 주변 환경 정비 등의 자원외교와 무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이후에 현재까지 에너지협력외교를 위해서 국무총리의 해외 순방은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총리실은 관련 부처들 간의 정보 공유, 업무 조정 그리고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의 심각한 이런 사회적 갈등, 사회적 문제를 조정하는 그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기본적으로는 김 위원님께서 정의하신 총리실의 기본적인 기능에 저희도 동의하고요, 그런 기능에 물론 주력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예를 드신 여러 가지의 사업들의 경우도 자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데 자원외교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적 인프라 혹은 수요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연계되어 있어서 총리실이 관여를 했던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총리실의 본연의 기능은 충실히 하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부처에서 하는 자

원외교의 필요, 뒷받침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 총리실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김성태 위원 지금 현재 개화산, 치현산 그리고 서남물재생센터, 한강을 연결하는 김포공항 인근 지역에 산책길을 조성하고 개발해서 지역 주민 그리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찾아가서 건강증진 그리고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둘레길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김성태 위원 장관님, 강서구는 지금 현재……

이것은 제 지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강서구는 지방재정자립도가 34%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취약하고 장애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지요. 서울에서도 재정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올해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6억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부, 특별 그러니까 교부세 10억을 좀 지원해서 그동안 낙후됐던 지역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각별히 좀 협조해 주실 용의가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위원님하고 별도로 그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甲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甲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장윤석 위원의 소개로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영주에서 쉰 분 정도 오셨습니다.

위원장이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실장께서 불참하시고 경제수석 김대기 수석께서 대리 출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기정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鄭甲潤 예.

○강기정 위원 사전에 동의 없었던 일입니다. 그 실장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실장 참석하시고 회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회의 시작 직전에 와서 대리 참석을 통보하는 기관입니까, 청와대가 국회에?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회의를, 아직 성원도 안 된 것 같은데 참석하시도록 하시지요.

○委員長 鄭甲潤 대통령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실경제수석비서관 김대기 지금 대통령님 내일 순방하시는 것 때문에 그 마무리 작업을 끝내고 오시면 4시경이나 4시 조금 넘어서 오실 수 있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우리 국무위원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은 어쩔 수 없지요, 불가피한 것은. 당연히 국무를 수행해야지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양당 간사에게 합의 봐 오지 않는 한은 제가 승낙하지 않는다고. 제가 먼저 승낙한 일은 없습니다.

양당 간사에게, 특히 내일 대통령께서 해외출장 가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알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그것을 인정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를 뜨실 때는, 잠깐 화장실을 가시고 그런 것이야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마는 장시간 비우실 때는 반드시 양당 간사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저에게도 마지막 그 통보해 주는 절차를 밟기를 바랍니다.

예, 장윤석 위원님!

○張倫碩 委員 대통령실장께서 아마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해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지금 출석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순방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 불참을 하게 될 경우에 사전에 양 간사에게 양해를 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 쪽에서는 여사한 불출석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강기정 간사와 이 문제에 관

해서 잠깐 협의를 하도록 잠시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장 간사님, 잠깐 저 좀 보자고요.

(위원장, 장윤석 간사와 협의)

존경하는 강기정 간사님, 질의 순서를 조금 뒤로 바꾸어 가지고, 아까 일찍 오신 분들 입장이 있고 하니까 이따, 대통령께서 내일 출국하시는 관계로 그 회의를 마치고 바로 오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강기정 위원 저는 청와대 있고 그러니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그때 하실래요?

그러면 지금 회의는 그대로 속개해도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권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석 위원 권경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장님, 그리고 한나라당 간사님 그리고 민주당 간사님!

예결위의 순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오늘 비서실장 불참 문제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기재부장관…… 차관 나오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차관입니다.

○권경석 위원 여러 위원들이 이번에도 질의를 많이 하셨고 작년, 재작년 계속 반복되는 질문인데 지방재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에 이전한 이전재원의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례적으로 지적을 해 왔습니다.

총액을 따지면 이전재원, 이전재원이라 함은 지방에 내려보내는 재원 중에서 독자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일반재원도 있고 특정재원도 있는데 이것을 다 망라해서 '이전재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내년도 예산에 약 105조, 이 액수는 작년보다 7.1% 늘어났습니다. 평균 예산증가율보다도 상회합니다. 지방교부세는 33조, 교육청에 내려가는 교육재정교부금은 38조, 국고보조금 33조 이런 수준인데 이 액수를 보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국가에서 내려 주는 이전재원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정부는 또 그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용되는 실태를 보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매년 확인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려보내는 재원이 일반재원일 경우에는 예산 편성의 자율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국고보조금은 이것은 매칭 펀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예산 집행에 관한 모든 감독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 완전히 제약된다,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돈은 많이 내려오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이른바 재정자치, 자치재정 측면에서는 오히려 중앙 종속이다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지요.

우리 차관님, 이 특성을 알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권경석 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면 내려보내는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2005년도에는 7.3조 그리고 금년에는 약 18조 정도로 2.5배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현상을 초래하느냐 하면 위에서 내려보내는 재원은 많아지지만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률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가용재원은 줄어든다 이런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통상 이 자리에서도 지난번 기재부장관께서 지방에서 집행하는 돈이 60%가 넘기 때문에 국가는 40%밖에 안 되고 지방에서 오히려 돈 많이 쓰고 있다, 우리 중앙정부보다는 풍족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체를 전혀 모르는 주장입니다. 가용재원이 자치역량이라든지 재정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 주는 것이지 완전히 용도가 지정되고 통제도 중앙에서 받는 이런 재원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재정자치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을 초래하느냐 하면 중앙에서 딱 집어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 다 하고 나면 남는 돈 가지고, 가용재원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뭔가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서 기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빚은 자꾸 늘어난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사회복지 분야예요. 물론 사회복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난 2005년도에

149개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을 했는데 그중에 67개 사무가 사회복지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앙정부는 분권교부세라는 이름으로—이것은 일반재원이지요—내려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권교부세가 어떤 비율로 증가되어 왔고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켰느냐 하면 총 사업비 증가폭은 11.8%인데 분권교부세는 8.1%밖에 안 내려갔어요. 그러면 지방부담이 3.7%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의 경직성, 가용재원의 축소 이런 것 때문에 재정 운용에 더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하는 이런 점을 기재부는 보니까 전혀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계십니까? 복지부장관 오늘 안 나오셨네요?

○委員長 鄭甲潤 오늘 안 계세요. 경제부처……

○권경석 위원 행안부장관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권경석 위원 행안부도 연관이 있으니까 참고로 들어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행안부와 연관이 많습니다.

○권경석 위원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노인 분야, 아동 분야, 장애인 분야 이런 업무들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액수는 미달되게 지원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로 충당하느냐,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 가지고 충당을 시킬 수밖에, 다른 일반재원으로 충당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적인 현상으로 가용재원의 축소 또 그것이 기채로 이어지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양된 이 사무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3개 도에 집중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노인, 아동, 장애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3개 시도에 전국 업무의 한 3분의 1 이상이 거기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면 전국적 업무를 3개 시도가 수행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또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기재부에서는 이것은 백지상태에서, 처음부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분석을 하고 사무 구분을 다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분권 차원에서 내려 줄 것은 내려 주고, 환원시킬 것은 환원시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체크를 해 보니까 이 부분들이 정말 실감 있게 또는 실효성 있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중간점검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분권교부세율 인상하라, 두 번째는 국고보조금을 포괄보조금으로 바꾸든가 안 그러면 교부세로 통합하라 또 부적절한 이양사무는 국고로 환원시켜라, 이런 부분과 더불어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문제도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 인상 문제,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화 내지 일반재원화하는 문제 그리고 부적절한 이양사무를 분권 차원에서 환원시키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차관께서 답변해 주시고, 행안부장관께서는 지금 지방재정법 바꿔 가지고 지방재정의 공시제도 그게 지금 법안이 통과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권경석 위원 지방재정은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책임성을 포기한 경우도 있다. 호화 청사, 일회성 축제 얼마나 낭비성 행사가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차관님하고 행안부장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조금 전에 권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기간 실시가 됐고 또 거기에 따른 업무 분장이라든지 재원의 근본적인 배분에 관련되는 사항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야 되고 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어떤 재원을 늘리고 또 어떤 사업을 이양하게 되면 결국은 전체적인 한정된 재원에서 중앙재정을 줄이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그런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분권교부세 인상 관련돼서는 분권교부세 자체가 현재 내국세의

19.24%로 돼 있는 그중에 0.94%가 지금 내려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렇게 한다면 중앙재정을 줄이고 지방재정을 늘리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분권교부세가 5년 연장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5년 동안에 과연 어떤 사업을 국가에서 하고 어떤 사업을 지방에서 하고 어떤 재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하도록 지금 시간을 받아 놓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고보조금도 저희들이 기관 고유업무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와 이렇게 분담을 해야 되는 비율을 보조금법에 의해서 기준보조금을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양사업의 환원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갑윤 위원장, 장윤석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도 행안부와 또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취득세·등록세 관련돼서 금년 말까지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련되는 사항을 합의를 할 때에 TF팀을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데 있어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사항은 전체적으로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 아니면 한정된 재원 중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건지 하는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호화 청사라든지 행사성 이벤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효율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행안부장관입니다.

지금 권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 행안부의 입장하고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 내에서 기재부와 행안부는 항상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놓고 서로 대화도 하고 대립도 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안부의 입장은 분권교부세율을 인상을 하든지 국고보조금을 포괄보조금이나 교부세로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 줘야 되겠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부적절한 이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적절한 것은 아닐 테고 이른바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등등 세 가지 정도가…… 아, 일곱 가지가 있지요. 그중에 한 세 가지 정도는 원래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 쪽으로 환원하는 게 저희는 옳다는 생각을 하고 정부 내에서도 항상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도 그 당위성은 알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살림을 사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대화를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호화 청사하고 일회성 축제, 행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를 지금 바꿔 가면서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막겠습니다.

○권경석 위원 지방재정 공시제도는 철저하게 이행이 돼야 됩니다. 공개하라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기재부와 행안부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전부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지방 발전 차원에서 긴밀한 협의와 구체적인 대책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잘 좀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촉구를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잘 알겠습니다.

○권경석 위원 보훈처 처장 계십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우무석 차장이 있습니다.

○권경석 위원 어제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6·25 참전용사에 대한 명예수당 문제는 작년도와 금년도 같은 수준으로 동결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23만여 명의 참전수당 받는 수혜자가 있는데 매년 1만 5000명씩 돌아가시고 계시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우무석 예, 돌아가시는 분……

○권경석 위원 이것 뭐, 3만 원 더 인상해 주는 것 이것을 인색하게 한다는 것은 나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돈이 그렇게 크게 드는 것도 아니고 계속 유공자들이 돌아가시는데 돈 몇 푼 되지 않은 이 수당 인상하는 데 이 정부가 그렇게 인색하냐, 이 부분은 내가 반성을 촉구합니다, 우선 보훈처부터. 이것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중에 증액 심의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우무석 예, 알겠습니다.

○권경석 위원 국방부장관 계십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국방부차관입니다.

○권경석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 오버하더라도 한 10초만 더 부탁드립니다.

K-2 전차 문제입니다. 방산업체는 이게 단순한 군비 확충, 군사장비 현대화 차원이 아니고 지금은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술 파급 효과도 지대합니다. 국가 경제 발전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인데 지금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로템에서 하고 있지만 1400 협력업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위에서도 논의를 한 모양인데 이것 계속 2년간 동결 상태에서 지연돼 오다가 지금 실소요액도 반영해 주지 못하는 이런 예산 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첫째는 기술 향상 측면에서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 그리고 수입대체효과, 수출증대효과, 이것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좀 감안해 주셔서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기재부차관께서도 이 점을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張倫碩 권경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장으로부터 방금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아세안회의 참가차 출국하는 일정을 마치는 대로 예결위 전체회의에 바로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무위원, 정부위원들께서는 양당 간사의 사전 양해를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민주당 존경하는 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위원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나는 꼼수다' 진행자인 정봉주 전 국회의원의 여권 발급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에 초청을 받았는데 가지 못한다 이런 일이 있는데 혹시 그 사실을 파악하셨습니까, 경위를?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언론 등을 통해서 봤는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법무부는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현재 상고심에 재판이 계속 중입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출국금지조치는 지금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면 여권 발급에 검찰이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여권 발급 업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특별한 저거는 없고요. 여권법에 따라서 아마 여권 발급이 제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외통부장관님, 지금 여권이 발급되지 않는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죄송합니다마는 정 의원님 여권 발급 안 되는 것을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바로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기정 위원 작년 1월에 재판 과정, 1심 2심 끝난 이후에 재판 과정에도 여권이 발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여권법에 따르면 기소된 경우에는 발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시행령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국외여행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법무장관님이 그것 답변 좀 해 보시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여권 발급 업무는 외교통상부 업무입니다마는 여권법에 필수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대법원이 실질적으로 지금 출국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출국금지조치라기보다는 여권법과 관련해서 저희들 그 사건을 가지고 있는 재판부에서 해외여행 허가를 불허하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면 재판부에서 지금 그 의견을, 여권 발급 불허 의견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경찰을 통한 그 신청에 대해서……

○강기정 위원 재판부는 재판부 독자적으로 결정합니까, 검찰의 의견을 듣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재판부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압니다.

○강기정 위원 절차적으로 보면 검찰의 의견을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이것은 재판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점을 감안해서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면 2010년 1월에 발급이 됐던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재판부에 전달해서 합리적인……

○강기정 위원 많은 네티즌들은 '나는 꼼수다' 진행에 대한 보복이다, 2010년 1월에 나갔다 왔고 또 재판이 있다 하지만 신분이 분명한 사람이고,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도 없고, 정봉주 전 의원은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밀항선 타고 들어올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선거에 나가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또 잘 알다시피 하버드나 콜럼비아대에서 초청해서 특강을 해 달라 이래서 나가는 목적인데, 이렇게 목적도 분명하고 신원도 분명한데 이것을 동의하지 않고 여권을 내주지 않는다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자꾸 이상한 눈으로 대법원을 보게 되면 이것 역시도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말씀하신 취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재판부에 전달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위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통령 친구라는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천신일 그분은 두 번, 세 번씩 해서 12월 1일 날 재판 판결 날 때까지 구속집행정지 특혜를 주고 있다, 그런데 지난번까지 멀쩡하게 여권 발급되다가 지금 '나꼼수'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자 여권 발급을 않는다 이것은 뭔가 오해를 살 만하다, 행정처장께서 정말 다른 오해가 없다면 미국의 두 대학에서 초청한, 세 대학에서 초청한 특강이라도 할 수 있도록 여권 문제를 잘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재판부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위원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강기정 위원 지난번 종합질의 시 대우조선해양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서면답변서가 안 와서 다시 질의합니다.

2004년 이창하가 최종애, 남상태의 처입니다. 최종애에게 5000, 3000을 준 걸 물었더니 "액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라고 속기록에 답변이 돼 있어요. 얼마나 차이가 나던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사 종결된 사안이고 기소된 사안이 아닙니다, 범죄 혐의가 없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액수나…… 이게 뭐냐 하면, 유죄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이나 명예 문제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위원 아니, 지금 답변하는 것이 무슨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입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아니,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강기정 위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 자료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자료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이나 명예에 관한 부분에 손상이 갈 염려가……

○강기정 위원 그러니까 뭘 말씀을 못 하시겠단 겁니까? 그럼 먼저 말씀해 보세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러니까 구체적인 범죄 내사 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금품수수라는 개괄적인 말씀은 드릴 수가 있는데……

○강기정 위원 2007년 7월 이창하가 김동각에게 4만 유로를 줬고 받는 것에 대해서 "기록에는 꼭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에는?

○법무부장관 권재진 내사 사건 전체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사 사건으로 내사를 해 본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서 내사 종결했다는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개인 사생활 이야기가 아니고, 이창하가 남상태 측 최종애에게 5000, 3000을 전달한 것을 무혐의 처리했는데 무혐의 처리한 이유는 뭡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내사 종결이 됐습니다, 내사 종결이.

○강기정 위원 공소시효가 지났습니까? 내사 종결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내사 종결이 되셨냐고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러니까 입건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서 피의자를……

○강기정 위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강기정 위원 대우조선해양 관련 내사의 시작 시점이 언제입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잠깐만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기정 위원 찾아보시지요. 차분히 하십시오.

○법무부장관 권재진 2009년 4월 달에 아마 처음 조사가 시작되어서 그해 2009년도 7월 달에 이창하가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과 관련된 사건이 기소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달에……

○강기정 위원 이창하 기소는 별건이니까 그것은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사와 최종애 씨 등 내사와……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것은 2009년 4월 달부터……

○강기정 위원 4월에 시작해서 종결이 언제입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종결이, 2010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강기정 위원 이창하 조사 시점이 2009년 4월에서 7월 맞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강기정 위원 정확히 언제입니까, 이창하 조사?

○법무부장관 권재진 조사는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시작해서 구속 기소된 것이 7월 29일입니다.

○강기정 위원 아니아니, 그 사건 말고 지금 내사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사건은 별도이고,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사 사건 이창하 시작이 언제입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이창하 내사 사건이 본인 기소된 것 말고 말씀입니까?

○강기정 위원 예.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것은 지금 현재 그 날짜는 여기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내사 시작했던 날짜가.

○강기정 위원 2009년 7월쯤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때 구속 기소된 그 무렵에 아마 조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정확한 날짜는 지금 여기……

○강기정 위원 이창하의 조사 시점이 7월이라 하더라도 이창하가 돈을 줬다는 시점은 제가 알기로는 2004년 8·9월에 5000, 9월·10월에 3000인데, 그러면 지금 배임죄가 공소시효가 몇 년입니까? 5년이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강기정 위원 그러면 공소시효가 남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당시 아마 구체적으로 공소시효가 일부는 완성이 된 부분이 있었고 일부는 그런 대가성이 인정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면 공소시효가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한 겁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아니, 조사는 주변조사는 다 했지요. 관계자 조사도 하고 계좌추적도 그 당시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 이유가 뭡니까, 내용이?

○법무부장관 권재진 기소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는 것인데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 이렇게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면 최종애는 그렇다 치고 그 남편인 남상태는 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자를 조사해서 혐의가 어느 정도 의심이 간다 싶으면 먼저 조사를 하는데……

○강기정 위원 아니, 내사까지 했는데 증거를 못 잡았는데 그 옆에 있는 남상태 조사는 왜 안 하셨냐고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러니까 남상태 조사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2007년 10월 이창하가 최종애에게 2만 유로를 전달한 것 이것은 무슨 목적으로 줬습니까? 이것은 공소시효하고 관계없는 돈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어쨌든 그 부분이 이창하의 연임 로비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밝혀졌습니다.

○강기정 위원 이것은 지금 연임 로비하고 관계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강기정 위원 아니, 왜 어떤 목적으로 줬어요? 이창하는 줬다고 그랬는데 최종애에게 2만 유로를 왜 줍니까, 2007년 10월에? 이것은 지금 2007년 10월에 이창하가 최종애에게 2만 유로를 전달하는 문제입니다. 앞에 것 2004년에 5000만 원, 3000만 원 전달은 일부 공소시효 뭐 지난 것 그것 빼고.

자, 이것은 왜 무혐의 처리했어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것 무혐의가 아니고 내사 종결인데, 결론적으로는 범죄 혐의를 못 찾았다는데 범죄 혐의를 왜 못 찾았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세하게 지금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강기정 위원 아니, 알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알고 오셔야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아니, 그러니까 저기……

○강기정 위원 아니, 조사 내사 보고서 있잖아요, 3건.

최종 보고서 언제 받았어요? 내사 보고서 있잖아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내사 보고서에 증거가 없어서 내사 종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증거가 없다?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강기정 위원 이창하가 2만 유로를 줬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증거가 안 돼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러니까 금품수수가 있었다고 그래서 다 범죄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목적이 있고 대가관계가 있고 그런 경우에 범죄가 성립되는 것인데……

○강기정 위원 그래서 이창하가 2만 유로를 왜 줬냐라고 내사 보고에 적혀 있느냐고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강기정 위원 아니, 수사기록이 없어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내사기록에…… 내사기록에 있지요. 기록은 지금 제가 결과를 보고받은 것인데, 내사기록을 제가 본 것은 아닙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면 내사기록 보고 그것을 서면답변 하실래요? 수사……

○법무부장관 권재진 내사기록 봐서 저기……

내사는 기본적으로, 위원님한테 몇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구체적으로 왜……

○강기정 위원 도대체 왜, 2만 유로를 주게 됐는데 그것을 왜 줬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명예라든지 사생활에 관계없는 부분이면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짚어 봐서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위원 옥상민, 정성진이 2억 4400만 원을 제일은행에……

2억 400만 원하고 4000만 원, 옥상민, 정성진 두 사람이 제일은행을 통해서 최종애의 통장으로 넣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혐의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서 내사 종결한 것을 보고를 받았는데……

○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왜 넣었다는 이야기예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강기정 위원 돈을……

○법무부장관 권재진 아니, 그러니까……

○강기정 위원 최종애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그 두 사람 모른다' 그랬잖아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러니까 구체적인……

○강기정 위원 모르는 사람의 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셨냐고?

○법무부장관 권재진 조사는 아마 돼 있을 건데 구체적인 내사 종결 사유는 사건관계인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현재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지도 못했고 내사결과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기정 위원 무엇 때문에 2007년에 내사하기 시작했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첩보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강기정 위원 무슨 첩보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자체 첩보입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첩보 내용이 뭐냐고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첩보 내용이 이창하가 연임을 위해서 로비를 했다 하는 하여튼 그런……

금품수수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확인해 봤더니 그런 부분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그 통장에 돈이 오고가고 하는데 그것이 뭔지 몰라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넣었는데? 최종애라는 사람이 '두 사람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왜 돈이 들어왔는지.'

○법무부장관 권재진 어쨌든 그 내사,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무슨 증거가 입증된다든지 다른 진술이 있으면 수사를 재개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내사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종결 사유라든지 내사 요지라든지 이런 수사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사생활이나 명예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 상세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

○강기정 위원 언제부터 검찰이 그렇게 했습니까? 최종애, 부인 통장에 모르는 사람이 넣었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회사 관련이니까 남상태를 조사해야지요. 왜 남상태는 한 번도 조사를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것은 검찰에서 조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기정 위원 축소·은폐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아니, 축소·은폐는 아닙니다. 검찰에서 판단했는데 저희들이 뭐 구체적인, 특히 수사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내사 문제에 있어서도 검찰의 독자성을 존중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갖다가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를 않습니다. 내사에 의해서 결과를 보고 그것이 합당하느냐 여부만 지금 따집니다.

○강기정 위원 김동각 부사장이 이창하 전무한테 4만 유로를 준 것, 김동각 조사했다고 그랬지요, 지난번에?

○법무부장관 권재진 아마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언제입니까, 조사 시점이?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것도 정확한 시점은 지금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강기정 위원 아니, 제가 두 번에 걸쳐서 귀한 10분씩을 할애해서 질의를 하는데 아무 것도 가져오지 않는 것은……

○법무부장관 권재진 아니, 그러니까 저기……

○강기정 위원 답변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내사사건에 대해서 내사 종결된 사건이고……

○강기정 위원 이것이……

○법무부장관 권재진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당사자의 명예나 사생활 문제가 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린다는 거지요.

○강기정 위원 2007년 7월 4만 유로를 김동각이 이창하에게 줬습니다. 아니, 이창하가 김동각에게. 왜 무혐의 처리했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무혐의 처리한 것이 아니라 내사 종결……

○강기정 위원 왜 내사 종결했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 내사 종결, 범죄 혐의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기정 위원 아니, 돈이 관계 때문에 4만 유로가 오고가고 있는데 그것을 입증 못 해요? 내사보고서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내사보고서는 증거가 없어서 혐의가……

○강기정 위원 증거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내사보고서에.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강기정 위원 내사보고서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내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강기정 위원 오늘 답변 준비 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답변 준비를 했습니다.

○강기정 위원 지난번에 '왜 돈을 줬냐' 그러니까 '직접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거 같은데, 이창하와 김동각 관계에서.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돈의 금품수수 목적이나 경위가 범죄가 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검찰……

○강기정 위원 이창하는 당시에 학력위조 사건이 나타나면서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 자리가 위태로웠습니다. 김동각은 알다시피 대우조선해양의 부사장이고 대우조선해양, 이창하가 전무로 있는 그 회사는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입니다. 그 아시잖아요?

자회사의 전무가 학력 허위 때문에 위태로워져서 돈을 4만 유로를 김동각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돈 관계가 아무 입증 없다? 관계가 없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자회사가 디에스온이라는 회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2007년 6월에 설립했는데 이창하의 지분이 51%입니다. 나중에 증자해서 68%로 확대됐어요.

무슨 말이냐, 이창하와 남상태는 한 몸이고 이창하는 로비 과정에서 한 몸이 된 겁니다. 이창하가 남상태의 연임 로비의 돈줄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남상태는 한 번도 수사를 않고 이창하는 김동각에 돈 준 것도 아무 조사도 않고,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아마 의혹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조사가 돼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기정 위원 저는 내사기록을 보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지금?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러니까 내사기록에……

○강기정 위원 내사기록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내사기록은 저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강기정 위원 왜 못 보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강기정 위원 아니, 오늘 제가 질의한다고 그랬잖아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러니까 질의를 해서 아우트라인은 파악을 하고 결과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부분에 말씀 못 드리는 사유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강기정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인정도 부인도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러니까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들 법무부·검찰 입장은 적어도 무슨 증거가 발견이 된다든지,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내사를 재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강기정 위원 남상태, 천신일, 이수우 간의 금전거래를 조사했습니다, 내사 과정에. 그런데 덮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천신일을 구속했어요, 금전거래가 나타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덮어서, 다시 제기해서 기소한 것이 아닙니다. 내사 사건은 내사 사건대로 있었고, 그 중간에 2009년 7월 달에 이창하 구속기소 되고 2010년 9월에 이수우가 구속기소 되고 같은 해 2010년 12월 달에 천신일 씨가 구속기소 됐는데 그 뒤에 남상태, 이창하에 대해서 내사 종결됐는데, 위원님 지적 때문에 그 사건을 다시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구속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강기정 위원 제가 그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계실 때 로비의 창구 중의 하나가 법무부장관, 지금 우리 권재진 민정수석이다라고 했을 때, 기억나시지요? 지금 그 이야기의 시작 단계입니다, 지금 다시. 제가 작년 11월 2일인가 3일 대정부질의 했을 때.

○법무부장관 권재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로비 대상도 아니고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강기정 위원 2009년 당시에 6월에서 9월 우리 천성관 낙마할 때 그때 뭐 하셨습니까, 민정수석이었던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아닙니다. 그때는……

○강기정 위원 청와대 민정수석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2009년 9월 1일부터 했습니다.

○강기정 위원 남상태 동서가 김회선 전 국정원 차장이라는 건 잘 아시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거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강기정 위원 지금 남상태 대우조선 사장이 '그때 것이 억울하다. 명예훼손 당했다' 그래서 2억 민사소송 제기 건 거 아십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언론보도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1심에서, 뭐라고 합니까? 혐의 없……

○법무부장관 권재진 청구가 인용이 안 된 것으로……

○강기정 위원 인용이 안 된 거고, 지금 항소중인데요.

형사도 명예 고소돼 있고, 당시에 이 내사 사건, 지금 제가 죽 말씀드린 내사 사건이 떠들어보니 남상태와 이창하 이 돈들이 청와대나 검찰의 고위층에 갔다, 그래서 덮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저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없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기정 위원 남상태 사장이 '청와대에 로비했다. 영부인에게 로비했다' 제가 그러니까 '영부인은 어렸을 때 보고 본 적이 없다' 그랬는데 그 말을 믿으십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누가 말씀입니까?

○강기정 위원 남상태 사장이.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건 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기정 위원 저는 이, 지금 앞서 말씀 여러 건 8000만 원, 2억 4400 유로, 4만 유로 이 모든 것은 남상태와 이창하를 둘러싼 비리와 로비의……

1분만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張倫碩 마무리하시도록 마이크를 넣어 드리세요.

○강기정 위원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심에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내사를 잘해 가다가 누구에 의해서인가 덮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여쭤본, 지금 물어본 이걸 지금 답변을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왜, 혐의가 없다? 제일은행 통장으로 왔다 갔다 한 2만 4400 유로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검찰에서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사를 했을 것이고 그에 따른 결론을 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고려가 없고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면 답변을 분명히 확실히 하세요. 하지 않으면 계속 의혹이 가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권재진 답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내사 종결된 부분에 혐의가 없음, 종결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기정 위원 아니, 그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은 이런 관계였다더라, 개인적 사업 돈이었다고 그러더라, 최종애라는 사람이 '난 돈 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그런데 그걸 조사를 하지 않고, 그러면 남편을 조사하든지, '혹시 당신 돈이요?' 뭐예요, 이것이? 이걸 누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張倫碩 강기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성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호 위원 진성호입니다.

국회의원 된 첫 해에 예결위 왔다 두 번째로 왔는데요.

이번에, 이게 한나라당 내부 일이기는 하지만 문방위에 한 명도 예결위원이 없어 가지고 얼떨결에 제가 이제 왔는데, 어쨌든 이 예결위원회가 정치적 논쟁보다는 정말 국민들의 돈을 어떻게 알뜰살뜰 잘 쓸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張倫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나라당 이성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헌 위원 서울 서대문갑 한나라당 이성헌 위원입니다.

기재부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이성헌 위원 올해 공공기관들의 청년인턴 채용이 몇 명이나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지금 저희들 올해 계획이 9532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이성헌 위원 실제로는 1만 2246명을 채용했거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맞습니다.

○이성헌 위원 그래서 목표보다는 숫자를 더 많이 하셨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이성헌 위원 혹시 청년인턴 중에서 그러면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지금 9월 말 현재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742명이 전환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성헌 위원 그러면 몇 %나 됩니까, 전체 채용된 숫자에 비하면?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퍼센트는 좀 많이 낮습니다.

○이성헌 위원 낮은 편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저희들 당초에는 원래 계획 잡을 때는 한 20%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이성헌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인턴채용 계획이 28.4%로 해서 목표보다는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이 채용됐던 사람들이 실지

로 정규직으로 가는 경우는 지극히 지금 낮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이런 인턴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이, 제한이 있겠지만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면서 실지로 이것이 과연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대책으로서 이게 가능한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11월 15일자 동아일보에 '채용절차조차 귀찮은 전시용 청년인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본 적 있으신가요?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예, 본 적이 있습니다.

○이성헌 위원 그 내용 보시니까 어때요, 느낌이?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그 청년 인턴을 뽑을 때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직접 뽑지 않는다 하는 것인데 그 상황은 물론 기관 경우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채용을 할 때 보다 좀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별 케이스별로 판단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성헌 위원 지금 실장께서 전문성을 위해서 외부에 용역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본질적인 부분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업률에 대해서 분식회계 하는 것입니다, 분식도구.

그러니까 아예 몇 개월 쓰지도 않을 사람들을 굳이 이런 공공기관들이 면접까지 하고 시험 보게 하고 해서 하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을 외부 용역에 맡겨서 적당하게 처리하고 또 기간 끝나면 바로 내보내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이것을 총리실장이 모르고 그것이 전문성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청년 인턴들 전문성이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부분이?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아니요. 그 전문성이라는 것은 채용과정의 전문성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사 내용 중에서도 한전 자회사라든가 농수산물유통공사, 가스공사 이런 예를 들었는데 그런 기관의 경우에는 인턴뿐만 아니라 정규직도 외부에 위탁해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성헌 위원 제가 외부에 위탁하는 것 자체를 문제가 있다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예.

○이성헌 위원 문제는 청년 인턴을 뽑아서 그것이 일시적으로 청년실업률을 눈가림하기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이 더 농후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예, 청년 인턴이 물론 그 채용과정이나 혹은 운영과정에서 다소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점차 이것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고용 사정이 굉장히 어려울 때 일단 시급하게 임시직이라도 자리를 주면서 그 사람들의 시급한 사정을 보완해 주는 형태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이런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많이 채용하면 채용할수록 그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이 제도가 점차 자리 잡아 가도록 그렇게 제도개선도 하고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저희가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사후평가도 하고 그리고 실제 집행과정을 들여다봐서 보완해 나갈 사항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헌 위원 이 부분은 특히 공공기관에서 청년 인턴을 고용해서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습니다마는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일의 내용도 그렇고, 단순하게 복사를 시킨다든지 허드렛일만 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치를 불리기 위해서만 접근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인턴을 뽑았으면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 내용을 좀 더 정확히 한번 점검을 하고 분석하셔 가지고 조금 더 실용성 있고 좀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인턴 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총리실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성헌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청년 인턴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조사해서 만족도라든지 또 바람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뭐를 개

선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셔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한번 내셔서 총리실에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헌 위원 국방부장관 나와 계십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국방부차관입니다.

○이성헌 위원 그러십니까?

68년도에 김신조 사건, 청와대 기습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이성헌 위원 그것이 한 40년 지났는데 지금도 그런 기습 공작원 침투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우리 경계임무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헌 위원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도심 한가운데 군부대가 위치하면서 많은 도시 실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서대문구 현저동에 소재한 수방사 3033부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그렇습니다.

○이성헌 위원 이 부대의 주둔 임무와 목적이 뭡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청와대 중심으로 해서 경계 임무에 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성헌 위원 언제 이 부대가 설치되었는지 아세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이성헌 위원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이 부대가?

○국방부차관 이용걸 이 부대가 원래 6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죽, 연혁을 거슬러 올라가면 61년부터 시작해서 96년에 현재의 경비단으로 통합 창설되었습니다.

○이성헌 위원 아니요, 그건 그렇고 지금 이 부대가 이 자리에 위치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아시느냐고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7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헌 위원 79년도부터시지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이성헌 위원 그럼 79년도 전에는 어떻게 청와대를 경비했나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아마 이 부대도 그 인근에 있는 부대를 통합해서 이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헌 위원 이 부대의 역할이 뭔지 정확하게는 알고 계세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헌 위원 어떤 역할입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특정지구 방호계획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헌 위원 오늘 여기 청와대의 경호실장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청와대 자체를 경호하기 위한 부대는 청와대 주변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무를 알고 계세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저는 지금 현재 그 특정지구 방호계획에 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헌 위원 지금 이 부대 주변에…… 부대가 몇 평이나 쓰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면적은?

○국방부차관 이용걸 부지가 한 3.8만㎡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헌 위원 그러니까 거의 1만 5000평에서 2만 평 가까운 평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헌 위원 여기 주변에 지금 5300세대가 살고 있는 것은 아세요, 아파트 주민들이?

○국방부차관 이용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이성헌 위원 그러시지요?

이 부대가 지금 현재로는 아파트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 주거단지가 없었기 때문에 청와대의 외곽 경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파트 한가운데에 이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에게 매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소음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몇 년째 여기에 대해서 부대 이전을 청원도 하고 서명을 받아서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쪽에서의 얘기는 대체 부지를 만들어 주면 이전하겠다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다시 돌아와서는 이전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대가 아파트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데 이런 부대는 좀 이전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지역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 조금의 불편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부대 자체도 부대의 임무 목적에 맞게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체 부지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성헌 위원 수방사 지금 이전하셨는데 원래 그 수방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경비단을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성헌 위원 아니요, 수방사령부……

○국방부차관 이용걸 필동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이성헌 위원 예, 필동에 있었던 것이요.

그것 왜 옮기셨나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전반적인 도시 발전도 고려하고 또한 보다 더 적합한 위치를 찾아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헌 위원 그렇다면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주거 환경이 바뀌고 주변 환경이 바뀌었으면 이제 이 3033부대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해 봐야 할 시점이 된 것 아닌가요?

실제로 지금 이미 청와대 주변의 외곽 경비를 하거나 내부 경비하는 부대는 다른 부대가 다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는 부대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와서 일정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여기서 자기 충전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 부대를 꼭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현재로는 이 부대도 일정한 방호태세 발령 시 일정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부대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부대와 달리 이전 부지를 찾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아마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말씀하셨고 청원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헌 위원 그런데 제가 매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검토만 하고 마시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좀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대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 보시고, 이제 주변 여건 상황이 너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좀 적절하게 대처해서 조금은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이익을 잘 고려하셔서 부대 이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헌 위원 다음은 최광식 문체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문화부차관입니다.

○이성헌 위원 2011년 6월 10일 중국 국무원에서 아리랑을 비롯해 가지고 조선족자치구에 있는 아리랑과 가야금 회혼례 판소리 씨름 등을 제3차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 발표한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헌 위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아리랑을 한국의 100대 상징의 하나로 선정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이성헌 위원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자기 나라의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은 동북공정의 일환이고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중국에서 사전 포석으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중국이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그것을 했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저희들은 드리기는 사실은 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국이 소수민족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 조선족이 굉장히 중요한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조선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유산을 중국이 의식해서 그렇게 등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헌 위원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안에 아리랑 전체를 수집해서 내년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이성헌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중국에서 저렇게 먼저 아리랑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예상을 사실 전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주변국에서의 움직임을 살피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 확실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자신

들의 것으로 먼저 등재하기 이전에 저희가 좀 서둘러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문가들 의견 구하면서 지금 등재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헌 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위원님께 설명드릴 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데요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헌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장관께서도 취임하면서 남북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씀은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실제로 뭘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구체적인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헌 위원 지금 국립국악원에서 이 아리랑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문화콘텐츠를 알리기 위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공연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물론입니다.

○이성헌 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문광부에서 어떻게 지원을 계획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지금 저희가 아리랑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계획 속에 국립국악원이 활동하고 해외에 알리는 그 작업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자료를 어디서 어디까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아리랑들을 포함시킬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자료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을 지금 참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헌 위원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이성헌 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 한 1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이성헌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중단될 위치에 놓여 있어요.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우리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무형문화재를 알리기 위한 작업을 하는 데 10억 정도 예산도 쓸 수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헌 위원 좀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인권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예.

○이성헌 위원 최근래에 교권 침해 사례가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저희들이 구체적인 데이터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헌 위원 교과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 1학기까지 5000건이 넘습니다. 2011년도 1학기만 해도 총 1596건 있거든요. 이 중에 서울이 718건, 대전이 152건으로 많습니다. 이런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인권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교권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헌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간접체벌 하는 것도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의견을 교과부에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요?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교권의 확보와 체벌의 금기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성헌 위원 아니,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통해서 영상통화를 한 학생에 대해서 5초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켰는데 이것 간접체벌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사를 징계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세미나도 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세계 190개국 나라 중에서 간접 체벌까지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110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허용해야 되나, 세계 일반적으로 체벌을 허용한다고 해서 교권이

확립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그럼 그런 문제 학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다른 제도적인 보완이 있다,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만 따로 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특수학교를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학부형과 학교와 사회가 공동으로 그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런 쪽의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성헌 위원 아니, 그러면 수업시간에 영상통화 봤다고 해서 그 학생을 그럼 별도로 다른 학교를 만들어서 특수학교로 보내라는 얘긴가요?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아니, 그 구체적인 안은 저희들이 이제 더 상의해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성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체벌은 안 하지만 간접체벌하는 것까지 인권침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그런 안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 의견을 저희들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문으로 '체벌을 허용한다' 이거보다도 학부형과 학교와 교사가 같이 머리를 짜서 안을 찾아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성헌 위원 실제로 지금 교권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학교 내부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까지, 간접체벌까지도 마치 학생들의 인권침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면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그 문제는 저희들 내부에서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같이 전부 안을 찾아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헌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한번 전문가들하고 논의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예.

○委員長代理 張倫碩 감사합니다.

이성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나라당 조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전혁 위원 인천 남동을 출신 조전혁입니다.

국방부하고 감사원, 같이 들어 주십시오.

국방정보화, 국방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국방부에 서면질의를 냈습니다. 서면질의 낸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에 대해 가지고.

저한테 답이라고 온 게 통신망사업 중에 주노드하고 보조노드 구축하는 사업이 있고, BTL 사업, 이렇게 2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그렇습니다.

○조전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별개의 사업이다라는 게 귀부의 입장입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그렇습니다.

○조전혁 위원 그런데 실시협약서 별표1-2면 보면 WAN 구축 및 구축을 위한 광장비 1878대는 주·보조노드를 코어(core) 임차방식으로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고, 또 BTL 사업에 주·보조노드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명시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결국은 주·보조 이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테크니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테크니컬한 부분은 빼고 질문을 드릴게요.

주·보조노드 구축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기술 대 가격을 80 대 20으로 했지요? BTL 사업은 60 대 40입니다.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그렇습니다.

○조전혁 위원 그런데 BTL 사업 같은 경우는 구축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이 조금 떨어져도 되는 부분이고, 광대역통신망은 기술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보조노드 사업이 기술, 가격 대비해 가지고……

제가 자꾸 말이 꼬입니다. 기술 부분이 높게 된 게 좀 이상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이 좀 답변을……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보조노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회계예규에 따라서 협상 시, 계약체결 시에는 기술을 80, 가격 20 이렇게 배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라서 저희들이 했고요.

BTL 사업은 저희들이 민자를 동원하는 것이 굉장히 주목적의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쪽에 비중을 좀 더 많이 두어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침에 따라서 그때 6 대 4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전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예규 있지

않습니까? 예규규정 제12조에 의하면 가격 협상하도록 되어 있지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조전혁 위원 그것은 분명하지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그 규정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전혁 위원 그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런데 가격 협상을 했다고 하면 예가보다는 훨씬 더 깎여져야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BTL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전혁 위원 아닙니다. 주·보조노드 사업.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전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가의 몇 %에 낙찰되었는지 아십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제가 예가하고 정확하게,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조전혁 위원 예가의 무려 99.998%에 낙찰이 됐습니다. 저는 조달청 조달할 때도 보니까 이렇게 낙찰되는 경우를 한 건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굉장히 사실 이상합니다. 그런 식으로 거의 100%에 가까운, 0.02% 모자란 가격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하나 이상한 것은 말입니다. 당시 이 사업을 실무 담당을 했던 모 중령이 계십니다. 그 중령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뜻하는지.

○조전혁 위원 옷을 벗고요. 이 사업 끝나자마자 옷 벗고 외국 나가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냄새가 무지하게 나는 사업입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노드를 KT에 발주한 결과 BTL 사업자가 제안한 가액보다 훨씬 큰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저한테 대답을 했느냐 하면 KT는 4core에 351억 원을 제시를 했고 BTL 사업자는 2개 코어에 216억 원을 제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4core로 환산하면 BTL 사업자는 432억이 되기 때문에 KT에서 고가로 발주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지요, 맞습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맞습니다.

○조전혁 위원 그런데 이 답변도 오류입니다.

BTL 사업자가 제안한 금액은 5년간 2core에 108억을 했고요. 이것을 4core로 환산하면 216억 원입니다. 그래서 KT에서 발주한 것보다 135억 원이 저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뚱하게 저한테 답변을 해 가지고 저를 국방부에서 지금 기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BTL은 2core로 할 때 216억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요. KT는 4core기 때문에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351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전혁 위원 그렇게 답을 했는데요, 사실은 뭔가 하면 BTL 사업자가 제안한 금액이 5년간 2core에 108억 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core로 환산하면 216억 원입니다.

○국방부차관 이용걸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조전혁 위원 그것 확인해 가지고 만약 제가 이야기한 사실이 맞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그것은 제가 다음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자체를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전혁 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것이 맞다고 하면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어떤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전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또 역시 제 서면질의에 대해 가지고 보조노드를 KT에 발주한 결과 회선임차비용이 276억 원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코어 방식은 코어 임차비용 외에 장비구매, 설치비, 운영비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게 예상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맞습니다.

○조전혁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BTL 사업에는 보조노드 전송장비가 이미 포함돼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BTL 비용으로 그 전송장비가 설치되었고 BTL 사업자가 국방광대역통합망을 10년간 운영하면 운영비로 지급하기로

이미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장비 구매비, 운영비 등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국방부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국방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조전혁 위원 만일 그렇다고 하면 국방부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확실히 확인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용걸 확실하게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국방부에서 보고한 대로 BTL 사업자 제안에는 유지·운영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유지·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지급한다면 BTL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BTL 사업자가 총 사업비를 제안할 때는 유지·운영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전혁 위원 그 부분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원에서는 만약 이게 국방부에서 이런 식으로 저한테 답변을 한 것이 허위였다고 판정이 될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한번 좀 감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홍정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국방부에서 답변하신 답변서 한번 검토해 보고요. 사실관계도 한번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전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가보훈처 나오셨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우무석 예, 차장 나왔습니다.

○조전혁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무공 수훈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수당 18만 원 되어 있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우무석 예, 그렇습니다.

○조전혁 위원 21만 원으로 3만 원 더 늘리는 문제가 지금 정무위원회에서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우무석 예, 정무위원회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조전혁 위원 국가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신, 그리고 그 영예로서 훈장을 타신 분들한테 대해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국가가 그에 맞는 처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획재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영예로서 타는…… 영예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소득이 일정 부분 이하 되는 분들한테는 좀더 파격적으로 드리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일률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한번 개선점으로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무위원회에서 3만 원 더 올려 주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전혁 위원 예.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위원님, 무공 수훈자 등록 연혁을 혹시 아십니까?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들 무공 수훈자를 등록할 때에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사실은 바라지 않고 명예 차원에서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공 수훈자로서 전체 생활수준이 좀 어렵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은 당연하게 다른 규정에 의해서 전부 다 지원이 될 거고요. 이것은 나라에 진짜 명예 차원에서 등록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던 것인데, 2001년부터 시작되어서 금전적 지원으로 지금 사실 바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금전적 지원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 등록할 때에 제일 처음에 취지를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전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거 하나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 국가보훈체계 전체를 보면 보훈체계 전체가 좀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엉뚱한 다른 사건이나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도 돈을 다 받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과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국가보훈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체계하에서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이것은 무공 수훈을 화랑 을지 태극 이렇게 죽 해서 훈장을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해서 지금 지급하는, 나라의 부가급 성격의 명예형 금전적 지원입니다. 그렇

기 때문에 보상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전혁 위원 그런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훈장 받은 분들도 사실은 연금을 수령을 하는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처음에 등록을 할 때 82, 83년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처음에 각종 법률을 해서 제정을 할 당시부터 시작해서, 등록 자체에 관련되는 사항을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이 어떤 금전적 지원 차원의 사항이라면 당연히 공식적인·정식적인 보상금으로 지원을 해 드려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6·25 참전수당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은 저는 100%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하고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조전혁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요, 각종 운동경기나 이런 데서 포상금 받는 것도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국가를 위해서 몸 바쳐서 무공훈장 타신 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게 저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시초가 어떻게 됐든 간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세부적인 것은 소위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전혁 위원 총리실 좀 여쭙겠습니다.

북한인권하고 관련해 가지고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실국정운영1실장 홍윤식 국정운영1실장입니다.

관계 부처에서 북한인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전혁 위원 그런데 법률 통과되기 전이라도 북한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지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인권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이것을 전담하는 기구는 하나도 없지요?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예, 총리실에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조전혁 위원 통일연구원 같은 경우가 국내외 네트워크하고 홍보하고 인권정보 관리하겠다는 구축사업을 10억인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조전혁 위원 전액 다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관심도 굉장히 높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무총리실에서도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전혁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張倫碩 조전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래 위원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위원입니다.

오후 피곤하실 시간인데 고생들 많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기재부장관, 국방부장관 이렇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련 부처가 함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그렇습니다.

○노철래 위원 중요하고 시급한 대책, 그 주요 대책이 뭐가 있었습니까?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부처별로 각자 부처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냈고요.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는 성폭력을 당한 장애인들 보호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또 장애인 특성에 맞는 상담이 가능하게 전문 수화통역을 배치한다든지 상담소를 추가 배치하고 또 성폭력 당한 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를 확대하고 여러 가지 보호시설을 늘리고 그런 적절한 보호가 가능한 대책을 내 놨습니다.

○노철래 위원 지금 대책들이라고 하는 게 그간 시행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대책을 세워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여기서 특이하게 새로운 대책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지금 아시다시피 대책을 하고는 있는데 그 숫자가 너무 적고 또 충분히 커버할 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

이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아, 해 오고 있는 것인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더 좀 확대해 가지고 하자?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그리고 그런 시설들이 장애 특성에 따른 그런 것을 적절하게 지금 맞춤형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것을 순서대로 한번 죽 짚어보도록 하지요.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2010년도에 320건, 2011년 상반기에만 290건이 발생했으며 금년 말까지 가면 450건 정도 될 것으로, 물론 그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라지 않는데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정을 하는 것이지요. 한 450건 발생할 것 같고, 한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사례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1년 내지 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비율이 43.6%에 달할 정도로 이것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노철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심각하게 성폭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주로 지인, 주변, 친족 등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가려져 있어서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 일단은 심각한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셨듯이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나 이런 경우는 사실은 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치료하고 상담하고 또 그 시설에서 나온 후에도 생활이 계속 가능하게끔 그룹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장기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설이 아직 좀 극히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하고 있는 정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설 설치가 더 필요합니다.

○노철래 위원 지금 보호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운영을 지원하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담 보호시설이라고 하는 쉼터 그것이 전국에 몇 개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3개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3개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노철래 위원 여기 정원이 고작 40명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그렇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러면 지금, 물론 정확한 숫자일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략 여성가족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런 보호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철래 위원 물론 정확할 수는 없을 것인데.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상담 받고 돌아가고 조치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웨이팅 하는 상태가 아니어서 정확한 숫자를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작 40명 내외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일반인 쉼터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보호되고 있고 교육되고 있는 것이, 어쨌든 60% 정도를 소화하고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그렇습니다.

○노철래 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이 혹시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설에 장애인들이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은 아무래도 일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특성에 맞는 그런 전문상담이나 치료나 그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철래 위원 성폭력상담소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 있게 믿고 싶은데, 이 자료를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장애인 성보호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나라인가 진짜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이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무부장관으로서 이것이 좀 부끄럽거나 여성가족부를 맡고 있다는 자체에, 지금 어떻습니까 심정적으로 한번 피력해 보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사실 기본적인 인프라를 국가가 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항상 예산이, 저희가 많이 확보하려고 해도 전년 대비 몇% 이런 식으로 예산이 늘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인화학교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울 때 위원님들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니까 이런 차제에 좀 예산이 확보돼서 장애인들을 위한 그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호와 지원이 가능한 그런 시설이 좀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노철래 위원 그런데 맞춤형 전문적인 치료·보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3개의 시설에는 이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수화를 하는 인력이나 이런 분들이?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각장애인도 있고요 청각장애인도 있고 또 지체장애인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 종류에 따라서 맞춤형이 지금 완벽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장애인 여성을……

○노철래 위원 최소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3개 시설에도 이것이 부족하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추가적으로 인력 배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철래 위원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이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장애인에 대한 성보호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심각하게 생각하는 나라인지, 이것이 너무도…… 진짜 이것은 참 후진적, 후진이라는 말이 안 나올 정도의 이런 국가시스템인데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노철래 위원 도와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진짜 너무 심각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여성가족부장관의 책임만도 아닐 수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장애인 피해자가 아까 얘기대로 가족이나 친족, 이웃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 치료하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지요? 그러면 그 악순환이 계속되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그렇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호시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기획재정부에 혹시 예산상의 지원 같은 것을 요청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지금 사실 정부안이 올라갈 때는 예산에 못 넣고 우리 여성가족위 상임위 차원에서 지금 이 부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좀 예산을 늘려서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철래 위원 장애인들이 자립을 가능하도록 소규모 그룹홈 설치 이것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 혹시 어떤, 지금 그룹홈을 설치하기 위한 대책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지역에서……

○노철래 위원 그것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노철래 위원 예산이 가장 문제군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노철래 위원 어떻든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아까 장관님께서도 도가니 사건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병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인 대책과 그에 따른 교육 등등으로 해서 예방이 최선인데, 지금 나열된 모든 대책을 보면 백화점식으로 장황하게 내놓고 있는데, 지금 실제 예방프로그램이나 찾아가는 교육 또 예방을 위한 그런 교육시스템 개발된 것 혹시 있습니까? 한두 가지 예로 한번 들어 봐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노철래 위원 그 하고 있는 예가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 봐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우리가 청소년성문화센터라고 해서 전국에 42개의 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노철래 위원 그것은 청소년이고 장애인은 어느 정도, 42개 중에 장애인하고 관련된 데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저희가 장애·아동·청소년 이것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노철래 위원 42개가 다 같은 시설 내에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아니, 이렇게 특성화돼서 더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장애인만 따로 하지는 않고요 장애 유형에 따라서 사실은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좀더 개발해서 맞춤형 그런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저희가 예산 지원과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철래 위원 자, 계속 예산 얘기가 나오는데, 기재부차관님 지금 너무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2010년도 경찰청의 성폭력 범죄 발생 통계에 의하면 연간 7225명의 아동·청소년, 19세 미만입니다. 아동·청소년이 성폭행 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성폭행 피해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

는데 이들에게 최소한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률구조 예산은 2010년부터 2012년, 내년 예산까지 3년간 15억 3500만 원으로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기재부차관님, 3년 동안 이렇게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성폭행은 심각하게 증가되고 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12년부터 법무부에서 13세 미만 성폭력피해아동·장애인 법률조력지원사업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6억 원을 신규로 반영한 것을 감안해 본다면 전체적으로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금액에다가 추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철래 위원 그러니까 15억 3500만 원에 6억 원을 플러스해야 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전체적으로는 6억을 플러스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부장관님, 그러니까 2011년도 금년 예산이 15억 3500만 원이라고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 여기에 6억 플러스하면 아까 여성가족부장관이 말씀하신 그 인프라 구축하는 데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무부의 예산하고 포함을 하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노철래 위원 아, 예산을 다 포함을 하면?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노철래 위원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적만 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통계청에서 얼마 전 자료 낸 것을 제가 어디에서 얼핏 봤는데 우리가 지금 GDP 2만 4000불대 되는 것 같던데 그것은 맞습니까? 혹시 통계청 나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1인당 GDP가 2만 759불입니다.

○노철래 위원 금년은 아직 예상되는 게……

그러면 하여간 2만 불이 넘는 나라의 장애인 성보호나 또는…… 여러 가지 필요로 한데 이 정도라고 한다는 것은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돼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여성가족부, 기재부, 법무부 또 경찰청 다 좀 협조를 해서 도가니 사건이 우리한테 주는 경종을 사회가 책임지고 우리한테 그 짐이 다시 넘어오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는데 국방부장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차관이십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노철래 위원 그러면 없더라도 몇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오는 11월 23일이면 연평도 포격 1주년이지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그렇습니다.

○노철래 위원 제2의 연평도 사태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하고 국민은 지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방부에서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세밀히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제가 그것하고 관련해서 예비군하고 관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예비군 100명 중 37명은 전쟁이 발발해도 헬멧 없이 싸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비보유율, 뭐 이게 헬멧인 것 같은데요 70%가 넘는…… 타 장비입니다. 야전삽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일반 보유장비를 보니까 70% 정도가 허리띠, 야전삽, 물통, 이게 전부예요. 방독면은 46%에 불과하고 예비군에게 60년 전 구식 칼빈총을 지급하고 있다네요. 이게 현실입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지금 예비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적절한 장비가 제공되지 못하고 좀 구형 장비가 제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철래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단 유사시에는 예비군들의 역할이 중요하지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그렇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전체적으로 재원의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투자 우선순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비군이 앞으로 유사시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동원자원이기 때문에 예비군 전력이라든지 장비를 2015년까지는 좀 더 완비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지금 이 정도 수준인데 2015년까지 현실화된 장비로 가능합니까? 안이 그렇다?

○국방부차관 이용걸 아주 첨단 장비는 아닐지 몰라도 지금 현재 현역들이 쓰고 있는 장비를 일부 예비군 장비로 전환하는 것을 통해서 하면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갖추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이것도, 국방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자료를 한번 보았습니다.

K-9 자주포는 386·486 도스(DOS) 컴퓨터 장착 그리고 K1A1 전차 사격지원 계산체계는 아날로그 방식인 32비트 컴퓨터를 쓰고 있다네요.

공군기의 90%는 독도 상공에서 30분 이상 작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최신예 국산 잠수함은 나사가 풀려서 운항이 중단된 일이 139회, 이것 엄청납니다.

국방부, 합참, 계룡대 등 군 심장부가 북한이 전자기 펄스, 즉 EMP……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격에 거의 무방비한 상태랍니다.

그게 군쪽에서 나온 자료에서 확인한 겁니다.

○국방부차관 이용걸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여러 가지 신형 장비가 조금 더 완벽하지 못해서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문제점이 도출될 때마다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기 개발에 있어서 좀더 완벽한 무기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노철래 위원 북한은 전대미문으로 진짜 무장한 체제로 해 나가는데 우리의 이런 자료를 보면서 우리 군의 심각성, 그것을 한번 짚어 볼 시기니까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철래 위원 이상입니다.

……

○委員長代理 張倫碩 노철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나라당 여상규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여상규 위원 남해·하동 출신 여상규입니다.

기획재정부차관님, 행안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님, 소방방재청장님 그리고 국가보훈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방재청장님, 질의합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재해 대응력이 취약한 농어촌지역 소하천을 정비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지자체에 국비 50%를 보조하는 사업이지요?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예.

○여상규 위원 관련해서 문제점 한두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업을 촉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 및 지방 하천 정비율 78~95%로 알고 있는데 전국 소하천 정비율, 얼마인지 아십니까?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40……

○여상규 위원 41.2%지요?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42.2% 정도 됩니다.

○여상규 위원 절반도 안 됩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 5년간 전국 하천 피해액 6710억 원 중 소하천 피해가 3213억 원, 딱 절반입니다. 그중 94%가 미정비 소하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알고 계십니까?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예, 알고 있습니다.

○여상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국비 지원율을 50%에서 60%로 올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방방재청 소관 사업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그리고 국토해양부 소관 지방하천 정비사업, 모두 국비 지원율이 60%지요?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예.

○여상규 위원 이들과 사업 성격이 유사한 소하천 정비사업만 50%, 말이 안 됩니다.

더구나 소하천 정비사업은 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농어촌지역이 해당됩니다. 때문에 지자체의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인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장애 요인이 있다는 실정, 잘 알고 계시지요?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예, 알고 있습니다.

○여상규 위원 기재부차관님께 묻겠습니다.

결국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고 보조율을 상향하고 조속한 사업 완료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일정 부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저희들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라든가 소하천을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또 관리 주체가 다를 뿐더러 또 거기에 지원하는 국고 보조율이 다른 게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소하천의 경우에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

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제일 크기 때문에 보조율도 50%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또 이렇게 되어서 소하천의 국고 보조율이 올라가게 되면 지방하천도 또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런 연쇄적인 문제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대폭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상규 위원 긴급성과 필요성이 특별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재부차관님께 계속 묻겠습니다.

석면 관리 종합대책으로 노후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그렇습니다.

○여상규 위원 그런데 올해 시범사업 예산이 28억 원이데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내년 정부예산안 얼마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지금 30억 들어가 있습니다.

○여상규 위원 그것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시범사업이 28억인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내년 예산안이 불과 2억 원 증액한 30억 원이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정부가 내놓은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내년 처리 목표 물량 1만 800동이지요? 이 30억 가지고는 턱도 안 됩니다. 5000동만 지원하면 그것도 모자랄 정도라는 게 지금 파악된 내용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정부 부담이 30%, 지자체의 매칭펀드가 30%,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런데 노후 슬레이트 교체 대상자가 대부분 농어촌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입니다. 자부담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 교체를 포기하는 농가가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서야 석면에 의한 추가 피해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결국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기존 정부 계획대로 그렇게 과감하게 추진해야 되고 그리고 취약계층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좀더 줄여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노후 슬레이트 지붕은 철거를 하면서 또 자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할 때는 철거 비용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한 374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대량으로 철거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저희들이 전망했을 때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부담 규모는 생각보다 많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부담을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한 개도 이 부분은, 물론 이제 국가에서 30%, 지방에서 30% 해서 하지만 자기 책임하에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여상규 위원 농어촌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중에서는 노인복지, 그중에서도 노령화율이 높은 농어촌지역 노인복지는 복지예산 편성을 할 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여상규 위원 특히 경로당은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노인들 대부분이 경로당에서 여가·문화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또 자체 취사를 통한 식사까지 해결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식사용 쌀인데요. 전국 6만 2000여 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월 40㎏씩 지원하게 될 경우에 택배비를 포함해서 국비 500억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어떻게 좀 지원될 수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위원님, 경로당에 대한 정부의 양곡 지원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세대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부분들하고 형평성 이런 것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층에 대해서는 양곡할인 사업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득과 관계없이 연령을 그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이런 상충의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상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 위원 이해가 됩니다. 안 되면 우선적으로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인 농어촌 경로당만이라도 먼저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한 100~200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니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 50주년 행사, 내년도 정부 예산안 1억 원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여상규 위원 문화계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위원 고령화의 진전 등 환경 변화에 부응한 새로운 문화원의 역할, 그런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으로는 문화계에서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4억 원 정도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재부차관님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상규 위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문광부장관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저렴한 가족단위 숙박휴양시설 부족 등을 해소하고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및 농어촌과 연계한 특색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휴양촌 조성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그렇습니다.

○여상규 위원 내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내년도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상규 위원 반영이 안 되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여상규 위원 아주 필요한 사업인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질적으로 향상된 숙박시설을 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어촌관광을 스쳐 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무는 관광으로 이렇게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마련한 국민휴양촌 조성사업, 내년 예산 좀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이것은 당초에 문화부에서 요구를 안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보면 많이 뒤떨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상규 위원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우선순위가 충분히 있는 사업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현장, 특히 농어촌지역 현장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과거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추진 중에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그렇습니다.

○여상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개소당 19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지금 정부 예산은 14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그렇습니다.

○여상규 위원 기재부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예산이 부족해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어떻습니까, 좀 실효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상규 위원 그리고 참전용사 명예수당,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고요, 또 기재부차관님 답변도 들었습니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은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에 공이 있으면 금전으로 보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증액시켜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둡니다. 예산 편성 때 참고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나중에 소위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국가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서, 또 희생의 정도에 따라서 1급부터 6급까지 아주 차등해서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참전했다는 사실만으로, 또 무공수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해서 신중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여상규 위원 예, 잘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 생각하면 그런 분들 예우해야 됩니다.

보훈처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사업은 보훈복지사 및 보훈도우미를 보내서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여상규 위원 지금 내실 있는 재가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우선 보훈도우미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요? 왜 1000명에서 딱 멈췄습니까, 계속 증원하기로 해 놓고?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지금 증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원이 필요한데 보훈도우미 재원이 보훈기금으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종합적으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위원 기재부차관님께 보훈도우미 인력 증원에 필요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상규 위원 그리고 아울러 현재 보훈복지사 및 보훈도우미 중 보훈가족 비율이 22%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여상규 위원 향후 인력 채용할 때 저소득 보훈가족을 우대 채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훈가족의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고 아울러서 애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비스 질이 높아지겠지요.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상규 위원 그리고 행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결혼여성이민자의 친정부모 초청사업 지금 하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금년까지 했는데 내년부터는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중단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까지는 새마을운동중앙회하고 죽 같이 한 5년 동안 해 왔는데 시범적으로 대단히 성공적이었고 이제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담을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상규 위원 조금 병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고 있고 결국 그로 인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도 되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행안부에서 계속해서 의지를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병행 실시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상규 위원 사실 가난한 나라에서 꿈을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시집와서 수년이 지나도 역시 가난 때문에 친정부모를 못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자체에 미루면 역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제대로 할까 걱정이 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여상규 위원 그리고 역시, 계속 묻겠습니다.

정보화마을사업이요. 농산어촌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委員長代理 張倫碩 마무리해 주시지요.

○여상규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그렇습니다.

○여상규 위원 그런데 법률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 이것 지금 안 되어 있더군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여상규 위원 그리고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화마을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국비지원도 필요해 보이는데 인정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상규 위원 기재부차관님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같이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여상규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격차 해소 사업이요.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여상규 위원 지금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하고 보급받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이 15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 7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기재부차관님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편성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긍정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상규 위원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張倫碩 여상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나라당 조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위원 대구 출신 조원진입니다.

소방방재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기재부차관님도 같이 좀 들어 주시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조원진 위원 소방업무가 2005년도에 특별교부세 지원이 중단됐지요?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업무 전체가 지방에서 하는 업무로 위임이 된 거지요?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예.

○조원진 위원 재정이 없는 지방에서 소방에 대한 장비,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장비 교체가 안 되어서 노후화되고 있고, 그렇지요?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예.

○조원진 위원 방화복 지급 자체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조원진 위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저희들 소방에 관련되는 사항은, 소방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 업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중앙 정부에서도 일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자체가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원진 위원 지금 전체 공무원 중에서 국민신뢰도 1위가 소방공무원이시지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그 자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소방공무원이 신뢰도 1위거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조원진 위원 그런데 사망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큰 사고가 나면 뭐 대단한 대책을 세워서 정부가 다 해 주는 것같이 얘기했다가 재정 없는 지방에 모든 것을 미루니까 이 대책이 세워지겠습니까?

현실을 좀 말씀드리면 소방차 7556대 중에 노후차량이 1300대가 넘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소방차가 노후가 되면 이 소방차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소방 현장에서 소방사다리가 꺾여 가지고, 하도 오래 되니까 소방사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국가가 이것 지방 업무니까 그냥 내팽개치고 있으면, 이게 국가가 할 책무가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그런데 위원님,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범위는 엄격하게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다만 지원을 해 드리는 차원하고 주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원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특히 지역자원시설세도 현재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런 재원을 활용해서 지자체가 관련되는 장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원진 위원 우선 재정이 열악한, 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는 정부가 좀 나서줘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선 급한 게 소방차량·방화복, 이 방화복하고 소방관 보호장비 5종 중에서 아직 지급이 안 된 %가, 71.2%가 지급됐고 약 한 30% 정도가 지급이 안 됐어요.

이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한시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파악부터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업무 분장은 명확히 하고 지원해 줄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해 드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관련되는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재원 전체가 필요한 소요에 충분한지 아닌지는 그것은 따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지방교부세라든가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원이 충분히 활용이 되어서 먼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원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전체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재정 사정이 어려운 지방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한

시적으로 일부를 좀 국가가 국비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내용을 파악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해 보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여러 가지 행안부나 관련되는 부처하고 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소방방재청장님!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예.

○조원진 위원 소방방재청이 힘이 없어서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가장 힘든 데서 일은 가장 많이 하고 국민신뢰도는 1위인데 부서에 힘이 없어서 예산 확보를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계속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좀 강하게…… 국민의 뜻이 그렇지 않거든요. 소방공무원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필요한 신형 방화복도 지급을 못 받는 현실을 알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임태희 실장님 웃으시는데 청와대에서도 좀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시적으로 재정 투입을, 전체가 아닌 일부라도 급한 것부터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문화부차관입니다.

○조원진 위원 차관님,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문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현실은 이런 거예요.

전임 장관께서 6000개 넘는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다 넣자, 그것은 굉장히 90% 이상의 지지도를 받고 있다. 교과부는 예산을 5 대 5에서 6 대 4로 맞추는데도, 교과부는 6을 준비하고 있어요. 문광부에서도 돈을 달라고 기재부에 얘기했어요.

그러면 정부 부처가 다 얘기했는데 기재부에서 그 예산을 못 늘리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어느 방안을 좀 세우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지금 조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사실 스포츠강사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고요. 사실 초등학교 체육시간이 거의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체육은 특별히 아이들의 체력 개선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룰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여교사가 지금 많아져 있는 현실 그리고 운동에 많이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거의 죽어 있거든요.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스포츠강사를 배치하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전국에 초등학교가 5854개가 있습니다. 금년에 나가 있는 초등학교 강사가 12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가는 예산 130억 정도 되는데 예산 대비 만족도가 이만큼 높은 사업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에서 다른 예산들, 다른 일들은 조금 뒤로 돌리더라도 스포츠강사 문제만큼은 정말로 이번에 완벽했으면 좋겠다……

(장윤석 간사, 정갑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원진 위원 수혜자가, 학생·학부모·선생님들이 다 90% 이상이 지지를 해요. 그다음에 청년실업을 해결하는데 이것만큼 청년실업에 대한 확실한 모습을 보이는 게 없고요. 또 교과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예산 확보해 놨는데 그 예산 안 쓰면 어디로 갑니까? 또 무상급식합니까?

정부가 판단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재부가 판단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하고 뭔가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그래서 지금 문방위에서 294억 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다시 정부안으로 요청을 드렸고요. 정부에서 요청을 드렸고, 문방위에서 294억 원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된다면 5854개 초등학교에 다 스포츠강사를 보낼 수 있고요.

조 위원님 관심 더 가져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래서 스포츠강사들의 근무환경이 사실은 130~170만 원 받고, 1년에 열두 달 중 열 달 근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가 전향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기재부차관님 확실한 청년실업 해소방안이고 초등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데 기재부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위원님, 이 부분은 효과라든지 만족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규 체육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저희들이 또 정부 내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 반영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실시를 하고 그다음부터 그런 방법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사실은 국민에 대한 신뢰거든요. 전임장관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전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다 넣겠다, 그런 방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님, 지난번 제가 말씀을 올린 적이 있는데 내년이 한중수교 20주년이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러면 정부 간의 교류도 많아지겠지만 민간교류가 상당히 활발하게 되어야 되는데 민간교류를 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니까 1억 지원, 2억 지원 이 정도의 행사지원을 원하고 있어서 내년도 한중수교 20주년에 있어서는 특별히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아무튼 저희 외교부에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민간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런데 국가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국가가 만나지 못하는 부분들도 민간이 만나는 입장이 있어서 한중 간에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민간교류를 통해서 풀 수가 있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래서 그것은 외교통상부에서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들어오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지금 상임위원회 갔다 왔습니다.

○조원진 위원 대구에 보면 경북도청이 있어요. 도청이 2014년 되면 안동·예천지구로 옮기거든요. 거기에 따른 후적지 개발 문제가 있는데 전남도청 같은 경우에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하면서 5조 3000억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남도청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후적지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5억 정도가 배정이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시지요.

○조원진 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경상북도 도청 후적지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조금 배정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것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냥 알아보시면 안 되고요. 그게 필요성이 있으니까 연구용역비를 줘서 후적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다음 예산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연구용역이 거의 한 1년 이상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시기에 맞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리고 대구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마쳤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대구시민들, 자원봉사자들이 약 한 6700명, 서포터즈를 1만 7000명이 했습니다. 우리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 서포터즈가 활동을 해서 대구시가 중심이 된 가장 성공한 국제경기대회다, 이런 평을 받아서 93년도에 제4회 대회를 치른 슈투트가르트하고 두 번째로 대구시가 육상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상당히 대통령께서 육상도시 지정에 대해서 축전도 보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대구시민들이 굉장히 그런 봉사한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육상협회하고 우리가 약속했던 대구육상진흥센터가 진행이 잘 안 돼서 이 부분은 빠른 진행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이제 육상도시로 지정이 되면 육상 관련 여러 가지 행사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육상협회와 약속했던 대구육상진흥센터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서면

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내년까지 이것을 다 짓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내년까지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사실은 배정을 해야 되는데 물가변동도 있고 예산이 조금 늘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 협회하고 약속 또 육상도시로서의 지정,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은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하여튼 당초 목표대로 내년 10월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고요. 위원님께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대구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됐는데요. 사실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성공하기 위해서 제약 부분, 의료기기 부분, 신약 개발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빨리 와 닿을 수 있는 게 의료관광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약령시도 있고……

○조원진 위원 의료관광 부분들을 어떻게 잘 추진해 나가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관광단지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좀 필요한데 의료관광의 거의 대부분이 서울로 집중되어 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조원진 위원 지방에 많은 의료시스템, 교수들 또 의료진, 이런 부분들이 다 많이 갖추어져 있는데 중앙으로 집중되고 있는 의료관광객들 지방 분산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최근에 역시 의료관광이나 생태관광이 아주 중요한 관광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숙소는 또 너무 서울 집중적, 수도 집중적이기 때문에 지방 분산으로 해서 관광을 활성화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세계에서, 여기도 머리 없으신 분 좀 계신데요. 우리가 대머리의 모발 이식이 전 세계 최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개인 기업을 하면 엄청난 돈을 버는데도 개업을 하지 않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메디센터 준비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甲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오제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세 위원 민주당의 청주 흥덕갑 출신 오제세 위원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님, 엊그제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 가지고 한미 FTA를 비준하면, 또 국회가 건의한다면 3개월 내에 재협상을 제안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ISD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불평등하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된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ISD가 무슨 불평등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미 FTA의 원만한 처리를 위하고 또 야당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미 측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제세 위원 저는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야당이 얘기했다고 그래 가지고 ISD가 문제가 없는데,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재협상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러나 물론 거기에 운영의 개선이라든지 지금 제기하신 부분 중에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의해 보겠다 그런…… 저희들은……

○오제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정부 입장에서는……

○오제세 위원 ISD가 문제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그러고 재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우선 출발이 되는 겁니다. 진정성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아니요, 그런데 위원님, ISD 문제는……

○오제세 위원 그러면 진정성이 없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아니요, 이것은 진정성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2007년에 FTA를 합의했을 때 이미 ISD가 거기에 들어 있었고, 그다음에 정부 내에서도 그 당시 ISD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정부 나름대로는 제기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협의를 했고, 그래서 처음부터 ISD는 미 측하고 협의가 됐고 그 상황대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다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지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은 또 저희들이 그동안 미국하고 협의해 온 것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제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전체가 안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중대한 문제가 국회에서 비준이 안 되는 것은 ISD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지금 잘못 얘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 문제는 ISD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끝장토론도 했었고요. 서로 견해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또 더군다나 지난 4년 동안에 우리가 2007년에……

○오제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 가지고 ISD에 대해서, 비준되면 3개월 이내에 국회의 권고가 있으면 협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대통령이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대한민국을 완전히 대표하는 분인데 이런 분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호하다 이런 식으로 하고서 출발하면 되겠어요, 말씀을?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의를 해 주시면……

○오제세 위원 그것을 대통령께서는 '문제가 없다' 딱 말씀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둘 중에 하나 하셔야지 되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러니까 국회에서 합의를 해 주시면 저희는 합의해 주신 내용대로 미국과 하겠습니다.

○오제세 위원 그것도 또 잘못된 말씀이에요. 국회가 여야가 있는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오제세 위원 여당에서는 지금 ISD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오제세 위원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여당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나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문제가 없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러나 견해가 다른데 야당에서는 끝까지 이것 때문에 FTA를 처리를 못 하시겠다고 그러시니까……

○오제세 위원 그러면 야당에서 안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하실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은 한 번 더 협의해 보겠다 하는 겁니다.

○오제세 위원 아니, 원만한 처리가 안 되지요. 그렇게 얼버무려 가지고 원만한 처리가 되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아니, 이것은 얼버무리는 게 아니고……

○오제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ISD…… '비준해 주면 그다음에 하겠다', 비준하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지 않습니다.

○오제세 위원 모든 행위가 계약이 끝났는데 그다음에……

여기 법률 하신 분들 다 여쭤보십시오.

법무부장관님, 효력이 완성했는데 그다음에 다시 재논의가 되겠습니까, 그게?

○법무부장관 권재진 ISD 문제는, 법무부장관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게 더 국익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 정도의 문제인 것이지 맞다 틀리다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조금 더 국익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제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모두가 그렇게 국익에…… 어느 정도의 문제 가지고 이렇게 국회에서 비준이 안 되고, 정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도의 문제는 말하자면 그런 것은 다 양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ISD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엄청나게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엄청나게 피해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비록 소수 야당이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 국민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정도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 핵심, 본질적인 문제는 ISD라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없다 거기에 천착을 해야 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는 ISD……

○오제세 위원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ISD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말씀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제세 위원 충분히 답변하실 시간을 드릴 수는 있는데, 또 넘어가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통일이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국가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예, 통일은 제가 그동안에 우리 국가가 추구해야 되는 매우 큰 과제고 또 시대정신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제세 위원 그렇습니다. 시대정신이고 우리나라가 5000만 남한 국민들은 과거 50년, 60년 동안에 정말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0만 우리 동포가 북한에서 지금 엄청난 그런 시련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차대한 국가 과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동포와 같은 형제로서.

그런데 장관님, 통일이 언제쯤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것을 지금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통일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오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 방식이 점진적인 평화통일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서 그러한 여건이 만들어지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보고, 최근에 저희 통일부에서 전문가집단에게 용역을 의뢰한 바에 의하면, 물론 다른 목적으로 했습니다마는, 통일 재원을 산정하는 문제로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20년 후에 통일이 된다고 보고 최초 1년간의 통일 비용을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오제세 위원 통일을 하는데 그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통일은 남북 간에 서로 다른 체제가 평화적으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이 해결되는 것이 첫째고, 그 모순을 해결하는 주체가 남북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건의 중요한 환경요소가 남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과의 관계와 협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제세 위원 저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통일이라는 것이 국민적 컨센서스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때 한국 국민의 통일 의지와 북한 주민들의 통일 의지가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제세 위원 북한 주민들의 지금 통일 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것은 당연히 원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지금 북한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권력체 또는 당국과의 문제로 해서 이러한 북한 주민의 통일 의지가 직접 표출될 수 있는 그러한 경로는 현재로서는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오제세 위원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거를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직접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대체로 우리 한국의 정치·경제적 형편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제세 위원 그러시지요.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해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알고 또 남한이 잘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뭐라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북한 주민이 통일을 원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이게 민족적 과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하는 토대 위에서 출발했다고 보고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형편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경로는 여러 경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은 북한 사회도 불가피하게 외부 세계의 정보에 대해서 개방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또 우리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경로의 통일정책을 통해서 노력한 성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제세 위원 예, 바로 그 통일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뭔가 하면 지난 정부, 말하자면 문민정부로부터 그 이전에는 아마 남북교류가 없었지요, 그렇지요?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북한을 간 이후에 아마 남북이 교류가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런 정부를 통해서 대북과…… 개방과 협력을 해서 북한이 남한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지원한 대북지원 상황을 보면 문민정부가 2100억, 국민의 정부가 6100억, 참여정부가 1조 4200억을 했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지금 890억 그야말로 10분의 1 이하로 떨어졌어요. 저는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남한을 알게 하고 또 남한을 지지하게 하고 또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바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북지원이 통일을 위해서 엄청난 효과를 밑에 쌓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들어와서 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게 아닌가.

물론 위정자들이 도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해서 남한에 대해서 지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대북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난 3월에 세계…… 유엔 식량농업기구, 유니세프 같은 데에서 북한에…… 20일간 북한의 9개 도와 40개 군을 방문해서 600만 명 이상이 긴급히 식량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43만t의 식량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때에 이런 굶고 있는 주민들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이 통일사업이다, 통일을 위해서 긴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통일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북 교류·협력이 우리의 통일 여건을 개선시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여러 면에서 우리 한국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형편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대규모 식량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형편이 여기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북한 당국에서 저지른 핵실험과 두 차례의 무력도발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이런 원인이 해결되고 또 남북 간의 관계가 정상적인 것으로 되돌아가서 이러한 지원들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또 궁핍한…… 궁핍하고 고통 받는 형편이 나아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제세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남북통일이 우리 국가의 과제라고 하면 그 과제가 달성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남북 간의 군사대결은 통일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대결을 해서 안보를 굳건히 지킬 필요도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큰 목적이 통일이라면 통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행안부장관님께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600만 명의 비정규직이 있고 또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도 비정규직이 있는데, 저는 이번 정부예산에 일자리예산이 대단히 미흡하다. 한 3조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부의 고용실업수당을 제외하고.

저는 통 큰 정부로서의 일자리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600만 명의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분들이 50만 원에서 150만 원, 20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저는 600만 명 중에 100만 명 정도, 말하자면 한 20%를 정규직화하자. 그것은 다시 말하면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200만 원, 또는 150만 원, 250만 원으로 올려 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100만 명을 100만 원씩 1년에 올려주려면 예산이 10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이 일자리대책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정부가 먼저, 공공기관에서 먼저 지금 공기업과 공공기관, 국가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해서 그중에 10%라도 정규직화한다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6000억, 2조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저는 비정규직 일자리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문제는 방향은 아주 100%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가재정의 형편상, 지금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단계적으로 그 형

편을 고려해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조만간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만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지자체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제세 위원 기재부차관께, 장애인들이 지금 장애인학교에 가야 되는데—특수학교에—지금 특수학교에 가야 될 대상학생이 8만 2600명인데 재학인원은 29%밖에 안 됩니다. 2만 4000명인데요. 이런 장애학생들이 대상의 30%가 안 되는 분들밖에 학교에 못 가고 있다 하는 것이 저는 복지우선순위에서 대단히 앞서는 우선순위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차관님 장애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세울 용의가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저희들 취약계층, 특히 장애인에 대한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 때에 중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장애학생 8만 2600명 중에서 2만 4000명밖에 특수학교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일단은 관련되는 사항들을 점검을 하고 필요한 사항들은 계획을 세워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제세 위원 나머지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하고, 또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수고했습니다.

이왕 할 것 서면으로 하고 말지 또 뭐 추가질의 합니까?

제가 오후 사회를 볼 때 대통령실장께서 급한 나머지 절차를 밟지 않고 이석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과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니까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오후에 일시 제가 이석한 사이에 회의 진행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오제세 위원님께서 외교통상부장관께 ISD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제가 특별히 발언을 부탁드렸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ISD에 대해서 비준 발효 후 3개월 후에 협상을 하시겠다고 한 그 내용은 우선 첫째는 통상대표 간에 서신을 교환한 게 있습니다. 그 교환에 투자와 서비스에 대해서 어떠한 쟁점도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다, 일방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야당에서 줄곧 문제 제기하시는 것이, 저희 정부에서는 투자에 분명히 ISD도 포함된다 하는 점을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ISD가 포함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건 분명히 포함된다고 통상장관끼리도 얘기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미 측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ISD가 마치 우리 공공정책, 정당한 공공정책조차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야당에서.

그러나 분명히 ISD에 대해서 협의 시에 국민의 안전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책은 물론이고 부동산가격 등과 관련된 그런 안정화정책 등 일국의 정당한 공공정책의 경우에는 협정 적용을 배제하고, 또 예외적으로 이런 정책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율권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협의를 통해서 양국 간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확고히 하자.

세 번째로는 발효 전에 이거 못 하느냐 하는 문제는 발효 전은 결국 미국에 대해서 또 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는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협정이 체결되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당당한 절차에 따라서 하지 왜 주권국가로서 그런 절차를 밟지 못하느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책임지고 그 협정절차에 따라서 3개월 내에 문제 제기해서 협의를 다시 하겠다 하는 점을 강조하신 점을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甲潤 오제세 위원 간단히 한 말씀 하이소. 그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오제세 위원 지금 대통령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투자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이것은 레터에만 있는 겁니까, FTA 협정 자체에도 있는 겁니까? 협정 자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협정 자체에 이게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협정 자체에 있는 조항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정책, 아까 말씀하신 의료나 건강, 환경, 이런 공공정책은 정당한 공공정책에 한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당하다' 하는 자체가 무엇이 정당하냐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료보험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민간의료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는 민간의료 체계가 정당한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 의료보험 체계는 미국도 지금 대통령이 하려고 그러다가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정당하냐 하는 것이 쟁점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개월 후에 한다는 거는 어떤 계약이든지 일단 끝나면 그걸로 끝난 거지, 법을 이미 통과해서 땅땅땅 쳤는데 3개월 후에 문제 있는지 없는지 다시 검토해 보자, 이건 얘기가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ISD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당한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자율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고, 또 규정 및 통상장관 간의 교환된 레터에 의해서 분명히 세부적인 절차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해도 ISD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을 달리하시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고 이 문제는 정부로 하여금 협의토록 해서 이 문제는 분명히 야당에서 걱정하시는 점에 대해서 이것은 정리를 하겠다 하는 의지를 표현하신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세 위원 제가 한 30초…… 위원장님, 20초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다음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오제세 위원 만나 가지고……

○대통령실장 임태희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다시 한번 설명을, 서로가 이해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한나라당 이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 위원 경남 통영·고성 이군현 위원입니다.

우선 다른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오늘 오후에 여상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기재부 차관님, 제가 지지난 주인가요, 그때도 최구식 위원께서 발언하시고 제가 앞에 나가서 발언한 기억이 나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예산을 좀 증액을 28억에서…… 지금 시범사업에서 내년도에 32억 편성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뭐 그 정도 가지고는 좀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선 또 아주 취약계층이에요. 슬레이트 지붕에 사는 사람들 자체가, 거기서 아직까지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증액해 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출 수 있으면 최대한 낮췄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 예결위장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금년 여름에 한 3개월 600여 개 되는 전 마을을 한번 돌면서 보니까 저희 지역 경우도 그 2개, 금년에 2개 슬레이트 지붕 교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갖고 어느 세월에 그걸 교체할 수 있겠나 싶어서 그것 좀 증가해 줬으면 좋겠다, 꼭 재고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장님이 나오셨나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정무위에서 지금 인상한, 무공수훈자 예산 올린 게 얼마입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지금 현재 18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다시 그것을 조금 더 올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무위에서 통과되지 않았어요, 소위에서?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아직 통과가……

○이군현 위원 통과를 안 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이군현 위원 그것 조금, 지금 한 3만 원 인상하려고 하는 거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지금 그럴…… 우리 정무위에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물론

뭐 기재부에서야 예산을, 지출예산 편성해서……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정무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이군현 위원 그것 정무위에서 통과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정무위에서는 통과됐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래서 처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좀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저는 당연히 인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군현 위원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다음에 경찰청과 행안부 관련인데, 이것은 경찰청과 행안부만이 아니고 국무총리실장께서 좀, 지금 총리가 안 나오셨기 때문에 국무총리께서 좀 주관을 해 가지고 유관 부처끼리 의논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은 좀 편성해야 되는데, 지난 9월 15일 날 정전 대란 시에 전국의 교통신호등 중에서 2877개소가 갑자기 소등되어서 교통신호 시스템이 중단되고 많은 혼란과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예.

○이군현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말이지요, 지금 교통신호등 설치 및 유지보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교통신호등의 운영 관리는 경찰청이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 경찰청에서 누가 나와 있지요?

○경찰청장 조현오 청장입니다.

○이군현 위원 청장님, 맞지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이?

○경찰청장 조현오 예,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서 이 해당 예산 편성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리께서 안 나오시고 오늘 총리실 실장이 나오셨지요?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것 주재를 하셔 갖고,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경찰청하고 지경부와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정전이 되더라도 전원이 계속 공급될 수 있는 장치, UPS라고 이야기를 하데요. 그것을 좀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간선도로 왕복 6차로 이상 교차로 등 1단계 전국 6261개소네요. 설치 소요 예산 이게 얼마나 듭니까?

혹시 어디, 어느 부처에서 알고 계신가요?

○경찰청장 조현오 총 219억 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예, 219억, 대충 이야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리실장이 좀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는데요.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지난번 정전 대책에서도 UPS를 갖다 설치해서 신호등이 유사시에도 꺼지지 않도록 하기로……

○이군현 위원 그래야지요.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부처 간에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그 예산에 반영하는 문제도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편성을 안 하면 실제 사고가 나면 돈이 더 들 것 같아서……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리고 생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좀 챙겨 주시면 좋겠네요.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다음에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나오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군현 위원 지금 제 지역 문제인데, 고성 공룡세계엑스포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현재 광역발전계정으로 통과를 했어요. 한 7억 통과를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군현 위원 그런데 이걸 관광발전기금으로 변경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입장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글쎄요, 그것은 좀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군현 위원 검토를 좀 해 봐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군현 위원 그다음에 또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가 5회째 금년에 열렸습니다. 내년에 하면 6회째 열리는데, 그것도 상임위에서 지금 5억 신청한 것 중에 한 3억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것 좀 국제대회의 원활한 대회 성공을 위해서 원래 올렸던 5억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런데 이것은 타 대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사업비의 3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군현 위원 지금 독도 요트대회도 얼마 주고 있습니까, 국제요트대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러니까 %로 합니다, 30%.

○이군현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독도 국제요트대회, 내가 정식 명칭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것 비슷할 텐데요, 거기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것은 액수보다는 전체 예산의 3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아니, 그래서 결론이 뭐지요, 그러면 우리 장관께서 결론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러니까……

○이군현 위원 5억을 신청했는데 지금 3억을 상임위가 통과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런데 그것은 총 사업비의 30% 안에서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군현 위원 그러니까 3억에서 더 증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것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군현 위원 좀 적극 검토를 한번,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한번 봐 주면 좋겠습니다.

민주평통 사무처장 나오셨나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이상직 예, 나왔습니다.

○이군현 위원 어디 계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이상직 여기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지금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 연간 한 10% 정도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 그동안에 전국 249명의 비정규직 사무주임이 있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이상직 예,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평통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이상직 예,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죽 지난 4년 동안 일체 이분들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이상직 예,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이번에 몇 %나 올렸나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이상직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예산 협의해서 3% 인상이 되었고……

○이군현 위원 공무원 전체 금년도 인상률은 몇 %인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이상직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3.5%예요.

그런데 지금 3%, 4년 만에 처음 3%를 올리는데…… 헌법에 명시한 대통령 자문기관이잖아요, 평통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이상직 예,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처우 문제도 그동안 너무 소홀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를 통과한 인상이 몇 %입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이상직 15%입니다.

○이군현 위원 15% 인상이 됐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이상직 예,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것은 지켜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다른 공공기관 또 다른 헌법기관 내 비정규직과 형평성에 맞춰서 호봉제 도입이나 수당 신설 등 종합적인 처우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좀, 우리 전국 모든 지역에 다 해당된다고 보는데, 소홀히 되고 있다고 보는데 처장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이상직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도 하고 검토해 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250여 명의 평통 행정실장들의 처우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예, 그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이상직 예.

○이군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행안부장관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이군현 위원 이것 17대 국회 때부터 계속 이 야기가 돼 오고 있고 저도 이 법을 동의를 하고 또 발의도 하고 한 사람인데 우리 교사 중에 영양교사・사서교사・상담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오래된 숙제인데 비교과 교사 교직수당가산금 3만 원씩 이것 좀 편성을, 보건교사의 경우에 총액이 연간 한 16억, 사서교사의 경우에 2억 규모, 전문상담교사에 한 2억, 뒤 천만 원 단위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한 20억 규모 정도 되는데 이번 예산 편성에 꼭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행안부에서 오히려 반대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이것은……

○이군현 위원 잠깐만요, 장관님.

2009년도에 교과위 예결소위에서 이게 예산편성이 됐었고 또 2010년도도 예결소위 시에 다 편성이 됐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었느냐 하면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이것을 개정을 해 가지고 예산도 반영하겠다 이렇게 부대의견까지 채택을 했던 것인데 계속 몇 년째 안 되고 있어요.

다른 타 교과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건교사의 경우에는 지금 교직수당가산금을 잘 알다시피 주고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이군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전국에 많은 영양교사・사서교사・상담교사 이분들도 그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우선 보건교사의 경우에는 이것은 교과교사입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과 교사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행안부에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떤 돈 20억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마는 저희 예산 규모로 따지면, 이것은 원칙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직수당가산금이라는 것은 어떤 특수한, 학교별로 학교 교원 중에 특수한 근무여건에 있거나 또는 별도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서 추가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교원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인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게 수당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우리 이군현 위원님은 주로 영양교사 쪽에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이군현 위원 아니요, 사서・상담 세 교사들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교사들이…… 장관께서 비교과, 이 세 분야는 비교과 교사이고 보건교사는 교과교사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렇지 않지요. 2002년에 비교과 교사인 보건교사에게도 지급이……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지금은……

○이군현 위원 같은 비교과지요. 영양교사・사서교사……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보건교사가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강의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좀 다르고……

○이군현 위원 영양교사도 필요하면 영양 강의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강의 시 수당 좋은데 수당을 주기 위해서 강의를 만든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이것 좀 검토를……

○이군현 위원 아니요, 아니요. 수당을 주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장관님, 수당을 주기 위해서 강의를 만드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지요. 지금 이분들도 필요시에 강의를 한다고요. 보건교사도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영양교사의 경우는 말이지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종전 학교에 근무하는 식품위생직 8, 9급 일반직 공무원을 교원으로 특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25% 정도의 보수가 인상이 이미 된 상황이지요.

그런데 지금 민간영양사 평균 임금은 167만 5000원 정도로 평균이 나오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한 100만 원 높은 상황입니다.

○이군현 위원 장관님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영양교사도 2급, 영양학과를 다니는 동안에 교직과목을 이수해서 영양교사 자격증을 2급증을 따야 돼요. 똑같은 2급증 교사들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이 문제는 좀 검토해 보겠……

○이군현 위원 영양교사도 교사자격증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원들과 똑같은 월급을 받는 거

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보건교사도 전에 양호교사라고 하다가 보건교사 이름을 바꿨고 이분들도 영양사였지만 영양교사로, 다 교사로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평성이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 차등하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똑같이 해 주어야……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당초에는 보건교사도 반대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군현 위원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해 주는 것이 맞다 해서 결국 법적으로 교사가 됐단 말이에요. 됐으면 이분들이 늦게 됐다고요. 그러면 같이 해 주는 것이 맞다 이것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하여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새로 한번 장관님이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생각뿐만 아니라 저의 논리는 저는 하여튼 제 생각이 맞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 또 그런 여러 가지 들은 정보의 지식을 가지고 또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시지만 한번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하여튼 오늘 말씀하시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재검토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방방재청장 나오셨지요?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예.

○이군현 위원 노후 소방차 그리고 개인 소방장비, 그것 대폭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5년 동안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지금 저희들이 지난 5년 동안에 총 사업비는, 노후 차량 사업비는, 국비는 없었습니다.

○이군현 위원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지요? 내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향후 계획 세우고 있지요?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예,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6700억입니다.

○이군현 위원 6700억이지요?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예.

○이군현 위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그리고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노후 차량 비율이 전체 소방차량의 17.4%고 방화복 등 최소한의 기본 보호 장비 지급률이 71%에 불과하다 지금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열악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대형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대폭 노후 소방차, 개인 소방장비 대폭 보강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소방장비는 현장 소방활동 또는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사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하지만 또 기획재정부에서 판단하는 것도 있고 해서 충분하게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서 보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주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 경기 구리 출신의 주광덕 위원입니다.

저는 외교통상부장관님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또 경찰청장님, 행정안전부장관님, 시간이 되면 국가보훈처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교통상부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주광덕 위원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한나라당의 4명의 의원과 민주당의 네 분의 의원님이 민주당은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ISD 유지 여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약속할 경우에 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는다' 또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이러한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한미 양국 정부가 재협의를 약속할 때까지 이 비준 동의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해서 여야 의원 8명이 의회 민주주의를 살립시다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장관님, 혹시 그 내용 보셨나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

는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 내용이 어저께 아마 대통령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0일 이내에 협의한다는 것은 결국은 발효되면 즉시 협의한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광덕 위원 예, 그 부분은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한미 양국 정부가 약속할 경우 민주당은 이렇게 하고 한나라당은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어제 국회에 와서 말씀하신 것은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말씀이고.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USTR에서도 우리 연합뉴스 특파원의 문의에 대해서 ISD 이슈를 포함해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지난번 우리 서한 교환을 통해서 만들기로 한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 이슈를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 하는 입장을 오늘 자기네 대변인 명의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측에서도 약속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면 오늘의 그러한 발표는 미국 행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주광덕 위원 아니, '저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USTR의 대변인이 대변인 말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주광덕 위원 미국 행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 저희가 대통령께서 어제 국회에 오셔서 그런 제안 말씀을 하시고 간 후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각보다 신속하게 미국 정부가 어떤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한 걸로 여겨지는데 사전에 어떤 협력 요청이나 그런 접촉이 있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정상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상들만 가시는 회의였기 때문에 제가 모릅니다마는 저희들 장관선에서는 꾸준히 미측에다가 우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제 국회에 와서의 말씀과 미국 행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를 봤을 때 저희 여야 의원 8명이 발표한 성명에 있는 한미 양국 정부가 발효와 동시에 ISD 유지 여부 및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약속한 것으로 지금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 지금 미국 행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이라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의원총회를 하면서 그런 미국 정부의 의견을 문서로 확인해야, 문서로 받아야 된다라는 일부 의원님들의 그런 주장이 있거든요.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것은 제가 미국 사람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주광덕 위원 외교적인 관례나 상황상.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그것이…… 글쎄요, 미국 입장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국회에서 합의해서 저희한테 지침을 주시면 저희는 행정부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광덕 위원 다음은 법무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권재진 법무부장관입니다.

○주광덕 위원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태원 살인사건의 패터슨에 대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과연 패터슨의 출국으로 정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본 위원은 정지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권재진 여러 가지, 두 가지 점에서……

○주광덕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아니, 오늘은 똑같은 답변을 듣고자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열흘이 지났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주광덕 위원 공소시효가 정지하는 건지 아니면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되는 건지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열흘이 지난 오늘 검토는 끝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저희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일응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 견

해와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패터슨을 한국 법정에 미리 기소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 답변은 제가 들었는데……

○법무부장관 권재진 위원님, 다만……

○주광덕 위원 저는 법무부에서 공소시효가 과연 정지하는가 아니면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벌써 패터슨이 미국에서 구금된 지 오래 됐고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질의를 드렸고 열흘 정도가 지났으니까 당연히 법무부 내에서 이것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다, 아니면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계속되기 때문에 내년 4월이 공소시효 완료일이다……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아직 결론 내지…… 왜냐하면 그 결론을 내려면 도피 목적의 출국이 돼야 되는데 도피 목적의 출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패터슨을 조사를 해 봐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패터슨이 나갈 때 출국 목적이 어떻게 됐는지, 출국 경위가 어땠는지 사실관계를 아직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저희들은 일응 도피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정지기간 중에 나갔기 때문에 도피 목적으로 일응 추정을 합니다마는 사실관계는 좀더 확인해 봐야 최종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광덕 위원 무슨 정지기간에 출국했다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러니까 지난번에 8·15 사면과 더불어 가지고 패터슨 형 집행 정지기간 중에 아마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광덕 위원 장관님, 형 집행이 남아 있는데 출국하는 것은 나머지 잔형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도주한 것이지 살인죄의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 당시에 패터슨과 같이 있었던 에드워드에 대해서 재판 최종심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도피 목적도 인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광덕 위원 좌우지간 시간 관계상 그 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서 저한테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알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한 가지만 더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검찰에서 11월 7일 날 보도자료를 냈지요? SNS, 인터넷 등을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 명예 훼손하는 행위는 매체의 파급효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 적절한 발표였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형벌 집행을 담당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에서 구속기준은 제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건에 있어서 검찰 자체 판단으로서는 소위 말해서 허위사실의 유포로 해서 타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그 파장이 중차대하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주광덕 위원 그런데 왜 하루 만에 '허위사실 유포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심각하고 중대한 명예훼손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구속수사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다소 좀 구차한 변명의 추가 논평을 냈는데……

○법무부장관 권재진 처음부터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언론에서 구속수사에 방점을 두고 있다 보니 그렇게 보도가 된 것인데 처음부터 검찰 입장이 바뀐 건 없습니다. 구차하게 변명을 한 것이 아니고……

○주광덕 위원 그런데 장관님, 그렇다면 너무 당연한 내용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라면……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 굳이 SNS에서 FTA에 관한 여러 가지 괴담이랄까 이런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상황에서라도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당연하지만 사회적으로 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는 그런 면도 있는 겁니다.

○주광덕 위원 저는 오히려 이러한 것이 일반적 구속요건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검찰권 행사를 통해서 구속수사를 하고 구속한 후에 국민들한테 수사결과를 발표하면 되지 굳이 미리 이러한 상황을 예상해서 인터넷상의 어떤 표현의 자유나 우리 젊은 청년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뭔가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좀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논평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또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보도자료

발표를 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물론……

○주광덕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위원님 말씀처럼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고 또 사회 공익적 측면에서 뜻하지 않은 명예훼손의 피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양자의 이익형량을 잘 고려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민사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지원을 통해서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 그런 발표도 했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렇게 보도자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이것은 적절한 겁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사회적 폐해를 감안해서 아마 그런 발표가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주광덕 위원 아니, 민사소송은 사적 영역의 문제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검찰이 법 집행의 문제, 그로 인한 피해로, 예를 들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 입장에서는 그것이 월권되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 지원은 할 수 있다고……

○주광덕 위원 개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데 검찰에서, 법무부에서 어떻게 법률적 지원을 합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지금 범죄피해자지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 같은 것을 상정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래도 이 표현이 좀 지나치네요,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광덕 위원 이것은 범죄피해구제제도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모든 것을 다 해서 이런 일로 손해가……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런 폐해를 걱정해서 아마 그런 보도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이런 보도 언론에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그런 보도자료를 낸 것이나 그런 방침을 밝힌 것은 아니고요. 다만 사회적으로 거기에 따른 괴담이나 명예훼손이 심각하게 번졌을 경우에 예측하지 못할 폐해를 걱정해서 아마 그런 보도자료가 나간 것 같은데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혹시 억압할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장관님, 한번 기회가 되시면 20대 나이 또 30대 중반 이전 나이의 검사님들하고 정말 한번 격의 없는 그런 논의……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한번 꼭 하셔서…… 그런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요즘 2030세대와의 소통이 부족해서 최근에 그런 대화를 해 보니까 정말 저도 깜작 놀랄 만한 그런 현상을 많이 발견하고 또 많이 배웁니다.

장관님, 한번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법무부장관 권재진 알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조현오 예, 청장입니다.

○주광덕 위원 오늘 보도자료 보니까 '생활고의 그늘에서 서울 도처에 좀도둑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보도 보셨나요?

○경찰청장 조현오 예, 봤습니다.

○주광덕 위원 이것 통계자료로는 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조현오 예.

○주광덕 위원 CCTV가 늘고 하는데도 빈집털이 등 특히 생계형 초범, 절도 초범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 방안 어떤 걸 가지고 계십니까?

○경찰청장 조현오 먼저 통계에 대해서는, 그 통계 수치 자체는 정확한 통계입니다. 저희 경찰청에서 제공한 통계인데 그게 실제 발생하고 있는 절도사건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는 저희 경찰청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범죄통계가 킥스(KICS)체제로 운영됨에 따라서 이제까지는 조금 지연 입력을 한다든지 또는 입력을 안 했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암수범죄로 묻힐 만한 이런 절도사건조차도 이제

는 다 통계로 잡힙니다. 그것 때문에 좀 절도 발생 건수가 많아진 걸로 그렇게 저희 경찰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상관없이 전국 절도 발생 증가율이 거의 한 6.0%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보다 서울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절도사건 발생 증가율이 한 30%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별순찰활동이라든지 또 우리 경찰관 기동대 이런 걸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절도사건을 좀 줄여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주광덕 위원 특히 이제 안타까운 것은 20대 젊은이들이 학자금 문제 또는 생활비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절도하는 20대 청년들이 늘고 있다, 사실 한 번 절도전과가 성년이 된 이후에 생기게 되면 그게 전과로 남고 향후 취업이나 또 사회에서 재기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조현오 예,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20대들은 사실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이 크거든요. 이 점이 가장 안타까운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별히 사전에 예방활동을 강화하시고, 또 예방활동 강화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 심의하고 그럴 때 특별히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조현오 예, 잘 알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국가보훈처장님.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주광덕 위원 이번에 상이 1급 중상이자 분들에 대한 특별수당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보훈처 안이 있었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게 얼마 정도였지요? 최고, 최저 이렇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지금 최대……

○주광덕 위원 보훈처에서는 한 393~253만 원 그 정도……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수당만 따지면 한 30% 정도 올리려고 현재……

○주광덕 위원 기획재정부 안에 따르면 이게 많이 줄어들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 기획재정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주광덕 위원 우리가 기업에서 일하다가 중상을 당한 사람들이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한 438만 원 정도 받네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주광덕 위원 그런데 동일한 내용의 중상을 전쟁터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다치신 분들의 경우에는 금년 기준으로 평균 한 220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지금 전체 특별수당까지 합치면 내년에 500만 원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주광덕 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고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내년 기준으로 해서 특별수당 100% 인상까지 합치면 거의 500만 원 정도 됩니다. 49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광덕 위원 제가 한번 영국의 사례를 보니까, 일반 근로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 영국의 경우에는 군인으로 가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은 산재보상 피해자보다 5%를 가산해서 지급을 하더라고요. 물론 뭐 저희들 여러 가지 한정된 예산 문제 등이 있어서 그런데 보훈처 안을 조금 더, 다 반영은 못 해도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 안보다는 상향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정부도 1급 중상이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금년에 특별수당 신설에 이어서 내년에 200%,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2배로 인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재연금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산재연금은 보험금을 납부를 하고 재해 발생 시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보상체계는 지금 금전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비라든지 대학 등록금 등 추가적인 혜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직업보도에 관련되는 직장 직업 알선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금액 대 금액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금액 자체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이라든지 자녀 취업 교육비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광덕 위원 기획재정부차관님, 제가 그린벨트 지역 주민에 대해서 지원사업비 배정이 전국에 비해서 경기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개략적으로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주광덕 위원 대통령실장님, 어제 사실 여야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더 파격적인 그런 내용을 대통령님께서 우리 국회에 와서 제안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을 비롯한 많은 청와대 참모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 또 참 좋은 대통령에 대한 보필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떠셨습니까?

견해 말씀하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광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委員長 鄭甲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김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해남·진도·완도 출신 김영록 위원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문광부장관, 국방부장관, 보훈처장, 기재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외교통상부장관님, 대통령께서 어제 한미 FTA에 대해서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재협상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책임지고 미국과 재협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APEC 정상회담에 가셔 가지고 비준동의 전에 어떤 문서화된, 재협상하겠다는 문서화된 어떤 문건을 가지고 국회를 방문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하는 게 야당과 국민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번에 재협상을 하시겠다는 것은 협정문 22장에 보면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이 협정상의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록 위원 이것에 근거한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거기에도 근거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커크 대표와 또 김종훈 본부장 간의 그 사이에 교환된 서한에 따라서 양국이 발효 후 90일 이내에 투자와 관련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양측이 얘기하는 모든 문제를 논의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런데 대통령님 제안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오늘 공식 입장을 대변인이……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발표했습니다.

○김영록 위원 밝힌 바에 의하면 '최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 간의 서신 교환을 통해서 새로운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위원회에서 ISD를 포함해서 서비스·투자 분야의 어떤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ISD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서신 교환할 때…… 서신 교환을 언제 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서신 교환의 날짜……

○김영록 위원 10월 30일 날 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김영록 위원 그때만 해도 ISD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이번에 ISD에 대한 언급을 한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러면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 화답을 한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동위원회 정도, 예를 들면 양국 협상 통상대표가 참여한 공동위원회 정도에서 이 중차대한 ISD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서비스투자위원회입니까, 여기에서는 주로 서비스투자 문제에 대해서 이행에 관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실질적인 문제를 협의한다 이런 사항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원래 ISD가 투자와 연관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투자위원회에서 ISD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USTR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영록 위원 당초 문건에는, 서신 교환할 때

는 ISD가 명기가 안 됐었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명기 안 돼 있었습니다.

○김영록 위원 명기 안 돼 있었고, 지난 11월 9일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김영록 위원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장관이 답변할 때 남경필 위원장이 “ISD 재협상할 수 있느냐?” 또 “재협상에 준하는 어떤 협상할 수 있느냐?” 여러 차례 물었을 때 장관께서는 분명히 “재협상 대상이 아니다.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는 재협상할 수 없다. ISD를 폐기하는 재협상을 할 수 없다” 분명히 이렇게 답변 안 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서비스투자위원회 얘기가 아니고요, 발효 전의 재협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발효 전의 재협상은 곤란하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록 위원 발효 전이건 발효 후건 ISD를 폐기하는 것은 재협상을 할 수는 없다, 서비스투자위원회 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발언한 걸로 분명히 기억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우려가 있으시고 또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대승적인 결단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의를 해 주시면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리고 미국 측과 재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책임지고 하시겠다 하는 말씀은 ISD가 폐기가 가능한 것처럼 들립니다마는 실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결국 ISD 문제를 단심제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재심 정도 한다든지 또는 국제중재재판소의 어떤 객관성, 중재인이라고 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김영록 위원 그런 부분에 객관성을 둔다 이런 정도, ISD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아니고 어떤 마이너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냥 협상하고 개선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그것은 우리 정부 입장으로서는 ISD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미국하고 협의 내용에 이것을 집어넣었었고……

○김영록 위원 지금까지 필요한데 왜……

한미 간에 지금까지 ISD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있었습니다.

○김영록 위원 한미 간에 있었어요? 한미 간에 지금까지 ISD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이번 FTA에 ISD가 포함이 된 거지요.

○김영록 위원 FTA 전에 있었냐고요? 지금까지 없어 왔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FTA가 없는데 FTA 전에 있었다는 건 무슨……

○김영록 위원 FTA 전이라도 투자자보호협정상 BIT 정도는 ISD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없어 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ISD 제도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게 사전동의제도입니다. 투자자가 중재신청을 하면 국가가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국제투자중재제도 거기에 끌려가야 돼요. 그래서 사전동의제도 이게 87개 우리가 맺은 조약 중에서 31개 조약에만 있는 거예요. 사전동의제도를 없애 버리면 ISD가 있어도 큰 문제는 아니다, ISD를 아예 폐지하면 미국도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전동의제도를 없애 버리면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ISD 제도의 중재 거기 안 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런데 ISD 제도라는 것은……

○김영록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사전동의제도를 없애 버리면 우리가 ISD 중재재판소에 안 갈 수도 있는 거지요? 우리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제소는 미국 기업이 ISD를 가든 또 우리 법에 의하든 제소는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적인 문제라면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래서 사전동의제도를 없앤다고 하면 ISD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치유가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단심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심제로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ISD가 국가주권을 침해하고 경제주권을 침해한다는 본질적인 문제에는 아무런 혜택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지금 ISD에 대해서 협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김영록 위원 그러니까 ISD는 폐기하라 이것입니다, 폐기하라.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러니까 그것은 국회에서 합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미국 측 자문위원회에서도 '한국은 잘 발달된 사법제도가 있기 때문에 ISD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법무부도 지난해 이를 테면 '간접수용은 우리나라 헌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또 미연방대법원 판사 샌드라 오코너도 ISD가 한 나라의 사법권을 제3의 민간기구에 위임한다…… 좋게 말해서 위임한 것이지 이것은 뺏기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로 볼 때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ISD 제도에 대해서는 비준 동의 전에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답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결국은 전부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한국에 제소하는 것만 생각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지만 지난 2007년에 우리가 처음 합의를 한 이후 지난 4년 동안에 우리의 미국에 대한 투자는 350억 불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한 투자는 100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투자한 것이 세 배 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기업이 투자한 것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도 ISD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제가 간단히만 한 가지……

지금까지 ISD 없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해 왔어요. 그런데 한미 FTA 하에 ISD 제도가 되면 국가 법체계 운영의 틀이랄지 국가 법체계가 미국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다른 부분으로 또 넘어가야 되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록 위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미국식 법체계로 한다는 말에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부장관님, 지금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 시대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올해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한 구백육칠십만 될 것 같습니다.

○김영록 위원 제주도가 한 100만 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영록 위원 중국 관광객은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한 200……

○김영록 위원 200만 명 정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영록 위원 그래서 08년도에 중국 관광객이 116만이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렇지요.

○김영록 위원 그래서 중국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렇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래서 중국 관광객을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정도 해외여행을 한다 이거예요, 중국이. 그러면 2020년에는 일본 인구 정도 1억 3000만 명이 해외여행을 할 건데 중국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러려면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을 인천공항으로 유입을 해서 그다음에 제주공항을 통해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거나 중국에서 온 관광객이 제주공항을 통해서 와서 서울국제공항에서 다시 나가거나 이 좋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인천공항과 서울과 제주도는 비행기로 연결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영록 위원 이걸 고속철도로 연결해서 한다고 하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러려면 목포에서 제주까지 고속철도를 연결을 해야 돼요, 167㎞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 완도 보길도에서 제주도까지는 해저터널로 73㎞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 관광객들에게도 새로운 어떤 관광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체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장기적으로는 생각해 볼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중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에 대해서 제주도로 직접 들어오는 방법 그것들이 지금 좀더 확충되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크루즈를 통해서 하는 방법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런데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이 주로 서울로 많이 이동을 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영록 위원 그래서 중국에는 해뜨는 동해 바다는 있어도 해지는 서해 바다는 없다, 우리나라에 와서 제주도나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서 중국 쪽으로 해지는 바다를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이템화 해 가지고 이 해저터널을 목포에서 시작해서 완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해저터널을 놓게 되면 이게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거다 이거지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차관님이 나와 계시는데 이게 B/C 분석하면 1 이상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들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그 용역비가 지난번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아직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는 엄청난 사업비가 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엄청난 사업비가 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 14조 정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B/C는 1 이상이 나오는 거고 돈은 더 많이 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서울에서 목포까지 호남고속철도가 많은 돈이 들고도 사실은 승객이 적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주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호남고속철도뿐만 아니라 제주도까지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전체 호남고속철도 투자효과가 완전히 살아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그런 부분 용역결과가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하지요.

○김영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대중국 관광객을 국가적으로 유입시키는데 대형 프로젝트를 한번 국가적으로 검토해야지, 조그마한 것 가지고 이렇게 자꾸 접근하는 것보다는 큰 프로젝트 차원에서 우리 기획재정부차관님, 문체부장관님,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국무위원 여러분께도 꼭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용역 결과를……

○김영록 위원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용역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보훈처장관님, 6·25 참전용사 참전명예수당 그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15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미망인들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나도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살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참전용사수당 과거에 남편이 받았던 것 일부라도 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나이 80 되신 분들이 저를 붙들고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들으면 그 부분도 좀 타당한 것 아니냐, 배우자에 한해서 말이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영록 위원 그분들이 연세들도 많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간을 조금 더 주세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미망인들 말씀을 들으면 정말 타당성도 있고 그분들의 이 제안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다른 또 여러 타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김영록 위원 국방부장관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식 관계를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또 잘 먹어야 국방부가 튼튼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밀을 지금 예를 들면 국민 1인당 31㎏을…… 지금 쌀은 70㎏이고, 밀은 31㎏인데 우리밀을 좀 우리 장병들에게도 소비할 수 있게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밀은 ㎏당 1900원이고 수입밀은 1150원입니다. 그런데 이 추가 소요액이 한 49억 정도 되는데 국방부장관님께서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양 부처가 좀 공동 부담을 하더라도 우리밀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군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제안입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원칙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가급적 군 예산을

쓰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국산밀이 수입밀보다 2.2배 가격이 높다 해 가지고 저희는 국산밀로 대체하는 경우에 약 68억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봤는데 이것은 가격이 점점 더 낮아지는 경우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일부 우리밀을 써 가면서 점점 비중을 높이는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甲潤 수고하셨습니다.

곽정숙 위원님.

○곽정숙 위원 앞서서 우리가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비교섭단체에게는 사전에 정보를 주지 않으셨었습니다. 원 구성하는 비율에 있어서 한나라당으로 정수성 의원님께서 입당한 후에 의석 변동이 생긴 것에 적용을 해서 의석수 비율을 정했기 때문에 비교섭단체 비율이 2석에서 1석으로 줄어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부당하다 이런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결위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당의 의석이 변경됐으면 예결위를 구성하는 비율, 교섭단체 협의에 따른 그 비율에 맞춰서 비교섭단체를, 즉 한나라당이 1석을 교체하셔서 비교섭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의석 배정을 조정한 후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원회를 어떻게 예결위 전체 구성에 합의된 것에 위배하면서 구성하는 것은 매우 불평등한 부당한 거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재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委員長 鄭甲潤 예, 존경하는 곽정숙 위원님께서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애초에 제가 우리 수석님을 통해서 비교섭단체에게 가서 설명하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방금도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설명 안 드렸냐고, 또 설명 드리든 안 드리든 방금 우리 곽정숙 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나중에 이 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고 말씀드리겠는데……

○곽정숙 위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12인 안에 보시면, 결국은 소위 정수성 의원이 한나라당에 입당하기 전에 12인 안에 한나라당이 6.96, 그다음에 민주당이 3.60, 비교섭단체 1.44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곽정숙 위원 아니, 의석 변동 후와 변동 전은 매우 다릅니다. 의석 변동 전에는 12인, 13인일 경우 7·7, 4·4 교섭단체 두 분 똑같고 비교섭단체는 1명이고, 12인 경우 1명이지만 13인 경우 둘이잖아요.

○委員長 鄭甲潤 우리 수석님, 나중에 가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곽정숙 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분명히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이해하셨잖아요.

○委員長 鄭甲潤 그러니까 지금 이 표를, 그냥 제가 누구를 주고 싶어서 주고 어느 당에 많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고 이건 양당 간사 간의 합의입니다. 제가 어떤 누구한테, 저는 단지 비교섭……

○곽정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委員長 鄭甲潤 제 말씀 들으세요. 비교섭단체는……

○곽정숙 위원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사 협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려 주시라고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委員長 鄭甲潤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정숙 위원 예.

○委員長 鄭甲潤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꼭 하셔야 됩니까?

○김창수 위원 예.

○委員長 鄭甲潤 다음은 김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자유선진당 대전 대덕구 출신 김창수입니다.

앞서서 보훈 관련 질의가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 보훈 관련 단체에 계신 분들은 뭐 보수냐 진보냐 하는 그런 이념 논쟁을 넘어서 우리 국가를 지키고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가 먼저 나서서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그리고 헌신에 대해서 보답해야 됩니다.

보훈 단체가 사실 많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영록 위원께서 말씀하신 미망인회 또 유족회,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또 무공수훈자회 그리고 6·25참전용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만 이분들은 모두 하나같이 앞서 말씀드린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국가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몸을 던진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편성을 하든 또 국가시책을 펴 나갈 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선진당의 이회창 전 대표께서 작년 8월 6·25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50% 이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법률 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데요.

우리 이런 보훈 대상자들한테 국가가 어느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해 주냐는 것은 지금 아직 제대로 체계가 잘 안 잡혀져 있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우선 일단 이런 참전명예수당으로는 저희들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적어도 50%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해마다 1만 원씩 올리고 2만 원 올리고 이런 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 지금 현재 6·25참전용사의 참전명예수당은 월 한 1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인상한다는 그런 정부 얘기가 있었는데, 국가보훈처장 나오셨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김창수 위원 이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기준은 어느 정도고 내년 예산은 얼마로 편성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월 12만 원이고 무공수훈자 특별수당은 월 18만 원으로 돼 있는데, 현재 정부안은 내년도 예산에 아직 인상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해도 되나요? 지금 참전유공자 그분들이 고연령이라는 건 아시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근로능력이 없고 건강도 안 좋습니다. 또 부양가족도 제대로 없는 그런 분들한테는 월 10만 원 정도의 이런 수당이 명예수당이라는 게, 차라리 명예수당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말든가, 명예수당이라는 용어를 써 가면서 이렇게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계속 이렇게 돼야 되나요, 아무리 국가재정이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6·25참전유공자 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년에 들어와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복지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시고 또 복지 부분에 많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는데, 이런 복지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복지는 6·25전쟁에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우리 참전유공자 분들에 대한 예우가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산정을 해 보니까 최저생계비의 50%로 잡으면 한 1인당 월 27만 원의 명예수당이 지급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한 504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거로 추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 1478억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정도는 정부에서 증액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보훈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니, 노력만 한다고 하시지 말고, 이분들 사실 살아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한테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이게 이제 절대적인 시간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고 또 이분들이 아직도 보훈병원에서, 6·25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50년, 60년이 넘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김창수 위원 이분들의 보훈병원 치료비가 현재 얼마나 지급되고 있지요? 의료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그분들의 치료비가 정확히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가유공자 분들은 무료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지금 보훈병원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이 참전유공자가 6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진료비는 그렇게 감면받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2005년 6월 이전에는 50%였다가 6년 전에 10%로 이렇게 감면 혜택을 줬는데 이거 더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장제보조비 같은 것도 지금 15만 원 정도뿐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김창수 위원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런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 인상은 우리 사회적 예우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말고 대일, 일본 강점기에 국외로 강제동원 됐다가 살아 돌아온 분들에 대한 생계 지원, 이것도 우리 국가가 좀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지금 94세 되시는 김종만이라는 노인 분이 대일 강점기 태평양 전쟁 희생자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94세 되신 분이. 이분이 얼마 전에 죽을 고비를 넘겼다가 다행히 살아나셔서 지금 100세 가까운 그런 고령의 나이에 정부 지원을 좀더 해 줘야 된다, 그분은 같은 회원들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금이 얼마 나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행안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김창수 위원 이건 행안부장관 소관 사항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8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얼마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연 80만 원……

○김창수 위원 의료지원금이지요, 이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김창수 위원 현재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지난 3월 말 현재 2만 451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이 80대 중반을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김창수 위원 대부분 노인 질환자이시고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한테 연 8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지요, 이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8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이지요.

○김창수 위원 한 달에 7만 원조차도 안 됩니다, 이것.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김창수 위원 속된 말로 껌 값도 안 됩니다, 이것.

이렇게 해서 국가가 과연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고 내세울 수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위로금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지금 말씀대로 정말 껌 값도 안 되는 것이지요. 충분히, 더구나 노령인 점을 감안하면 결코 이게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틀림없는 말이고요.

그런데 다만 이 생활금 지원은 유사 성격의 6·25 전우, 민간인 희생자 또 유족에 미치는 영향, 국가 재정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전체 아마 이것이……

매월 30만 원씩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개정안을 위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창수 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김창수 위원 제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지금 계류 중인 것?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면 내년에 한 722억 원이 증액되는 것인데, 하여튼 이것은 기재부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서 얘기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아까 참전 유공자보다도 연령대가 약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통계를 뽑아 보니까 현재, 지금 내년부터 지원을 한다고 하면 한 2만 59명 정도 되는데 이게 2030년도 가면 다 소멸됩니다. 말하자면 이분들이 다 이 세상을 뜨신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 가면 갈수록 소요 예산액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 만일에 이게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700억 정도 되는데 해마다 이것이 100억 내지 200억 정도 소요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행안부장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김창수 위원 국방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군사기밀 이외에는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지금 전국에 탄약창이 몇 군데가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약 9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 탄약창은 대개 언제 형성이 된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언제 형성되었다는 것보다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탄약창이 필요로 되기 때문에 부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대덕구 장동 지역에 탄약사령부가 있지요, 이 9개의 탄약창을 총괄하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김창수 위원 이것이 61년도에 미군이 그쪽에 주둔하면서 형성된 그런 군부대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 장동 탄약사령부가 예전에는 대덕구 내에 위치해 있었는데 대전시가 도시가 팽창하면서 이삼십만 도시에서 150만 도시로 하면서 장동에 있던 탄약사령부가 이제는 도심 한복판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시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탄약과 관련된 위험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기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 하나 수리를 제대로 못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접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대청호하고 계족산이 있어서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이 탄약사령부가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암적인 존재,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이쪽에 개발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의 시계가 그대로 멈춰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2008년도에 이상희 국방부장관 시절에 이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 본다고 했다고. '대체 부지가 조성되면 이전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도 제가 답답해서 청원까지 냈습니다, 그 주민들을 소개해 가지고.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대로 방치해 둘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고 대부분 부대가 그렇듯 최초에는 교외에 위치하다가 시가지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가지고 도심 쪽으로 가까이 들어오는 것이 전국 어디나 다 있는 현상이고 그럴 경우에 지자체에서 이전 부지를 제공해 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저희가 지자체하고 협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 협의를 해 가지고 대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검토, 검토' 하다가 부지하세월이 됩니다.

제가 1분만 좀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중앙선관위원장 계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사무총장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것은 행안부장관하고도 좀 관계가 되는 것인데 어떤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선거를 해서 시장도 뽑고 심지어 교육감도 뽑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회의원은 뽑지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그 부분은 정개특위가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김창수 위원 제가 정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데 바로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것이 내년도 4월에 세종시장도 뽑고 초대 교육감도 선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회의원을 독립 선거구로 뽑아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지금 있는데, 그리고 그게 타당한데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 부분은 선거구 획정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답변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중앙선관위 의견도 있는 것 아니에요? 중앙선관위의 의견이 있는 것 아니냐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것은 지금 저희들 선거구획정위원회하고 정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김창수 위원 이 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가 이미 지난 5월에 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를 독립 선거구로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취 불능)

행안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글쎄, 정개특위에서 할 문제를 여기서 제가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기가 조금 뭐 합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볼 적에는 별도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저녁 8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회의중지)

(20시34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甲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주당 김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위원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 2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예.

○김상희 위원 2010년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전 이재오 특임장관께서 특임장관실에서 진행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 공개를 요구했고, 또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했었는데 이 여론조사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공개되고 있는 관련 자료를 특임장관실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방부에 요구하는 건데요, 2011년 군에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최신 불온서적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공군 산하 한 전투비행단장이 '장병 정신전력 강화에 부적합한 서적 반입 차단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발송한 공문에 부록으로 이 책, 불온서적 리스트가 딸려 있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국방부에서는…… 국방부장관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이거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파악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특임장관실은……

○특임장관직무대행 김해진 예,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아니, 직함을 말씀하세요, 직함.

○특임장관직무대행 김해진 예, 차관입니다.

○김상희 위원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하겠다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특임장관직무대행 김해진 저희들이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국정 현안, 매주 하는 이슈 현안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아 왔고요, 분기별로 하는 조사라든가……

○김상희 위원 그런데 왜 그거 공개를 안 합니까?

○특임장관직무대행 김해진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위 위원님들한테 제출도 하고,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도 해 왔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공개를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무엇이지요?

○특임장관직무대행 김해진 그것은 이제……

○김상희 위원 거기에 뭐 국가기밀이 있나요?

○특임장관직무대행 김해진 아니, 국정 현안에 대해서 정부부처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공개하게 되면 특정 현안을 그런 쪽으로 유도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로만 하지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그것은 불필요한 생각이신 것 같고요, 과도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하고,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여론조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특임장관직무대행 김해진 다 제출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김상희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조사했는데 무슨 이유에서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를 달아서 주십시오.

○특임장관직무대행 김해진 예, 그런 목록은 지금까지 제출해 왔습니다.

○김상희 위원 전체 목록과 그리고 의원실에 제공하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도 첨부해서 보내 주

시기 바랍니다.

○특임장관직무대행 김해진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차관님이 나와 계시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김상희 위원 예산 수시배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원칙적으로 수시배정이라고 하는 제도는 어떤 상황에서 활용되어지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배정은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배정계획에 따라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배정계획을 짭니다. 그때에 계획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다든지 또는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또는 구체성이라든지 확보됐을 때 배정하는 그런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수시배정사업 중에서 상당수가 국회에서 증액을 요구한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2011년도 수시배정사업을 분석해 보니까 총 120개 사업 2조 6000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79개 사업 1조 6000억 원이 국회가 증액 의결한 사업입니다. 이렇듯 수시배정사업 전체의 3분의 2가 국회의 증액 의결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고, 각 부처의 예산 담당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기재부 공무원들의 프라이드는 상상을 초월한다. 자신들이 애써 맞춰 놓은 예산을 국회가 증액하고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심한 반감을 갖고 있고, 때문에 국회 증액사업을 수시배정으로 묶어 놓고 예산을 동결해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푸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소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위원님,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든지, 또 법령에 의한 어떤 선결절차가 해결이 안 됐다든지, 또 국회에서 예를 든다면 한미 FTA 같은 경우에 한미 FTA 비준을 전제로 해서 한 그런 사업들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하지, 저희들이 어떤 국회에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 한미 FTA하고 비교하는, 그것을 예를 든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전체 79건의 국회 증액요구 수시배정 예산 중에서 53건만 4492억 원이 실제 배정됐습니다, 실제로는. 그중에서 31건이 7월 이후에 배정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26건은 국회 요구대로라면 총 7831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아예 배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관련해서도 보면 국회 증액요구사업이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과 그다음에 수시배정된 수시배정사업이 다 그런 사업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폐기물 자원화 사업, 교과용 도서개발 보급 등 이것은 수시배정으로 묶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사업들조차도 다 그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각한 것이 7월 이후에 배정된 사업에서는 통상 1년을 기준으로 수립된 예산을 각 부처가 불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6개월 안에 무리하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종종 이게 굉장히 부실하게 쓰여지고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체 국회 증액요구 수시배정 예산액 중에 47%가 아예 배정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예산을 심사하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기재부가 자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위원님,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43조의 예산의 배정 그 규정에 따라서 하고요. 이제 계획이 확정이 안 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안 된다든지 선결절차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배정을 해 드려 봐도 집행이 안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결국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부처가……

○김상희 위원 기재부가 어떤 부분은 그런 조건에 있는 것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상당부분이 국회의 증액요구에 대해서, 특히 국회의원들의 그런 요구에 의해서 책정된 예산들을 이렇게 기재부에서 무시하는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존립기반인 삼권분립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그런 행위를 기재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기재부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역할이 도를 좀 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위원장님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헌법정신과 국회의 권위를 살리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위원회 차원에서 이 수시배정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련해서 기재부가 수시배정과 관련한 이유들을 상세하게 해서 다시 저희 의원실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위원님, 상세히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배정에 관련된 사항이 집행이 되면 왜 배정을 안 해 드리겠습니까? 당연히 해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수시배정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계속사업 자체도 개수가 줄어들고 규모도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 증액요구 수시배정 예산액 중에서 47.1%가 아예 배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차관님의 그런 변명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도에 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저희들 국회에 확정된 예산을 왜 집행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배정을 해 드려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요건이 해결이 되면 배정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부처에 그 내용을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언제든지 배정을 해 드립니다.

○김상희 위원 차관님, 아까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배정되지 않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께 상세히 가서 설명도 드리고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기재부가 얼마나 지금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독자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저희들이 월권행위가 아니고 그것은 예산집행의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문화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상희 위원 위클리공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클리공감, KTX 타면 모든 좌석에 이 잡지가 꽂혀 있더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지금 특별실에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이 위클리공감 발행부수를 이번에 3만 부에서 5만 부로 확대하려는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상희 위원 워낙에 지난 2010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이 위클리공감에 대한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상희 위원 그래서 지금 국회가 주간을 격주로, 그리고 부수를 7만 부에서 3만 부로 확정을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다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축소했던 것을 다시 또 번복을 해서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제 여기저기서, 아까 KTX 같은 경우는 지금 특실만 되어 있는데 이제 일반실을 더 한다든지 또 읍·면·동에 하나씩 있는 것을 더 배포한다든지 그럴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위클리공감 관련 예산 내년도 증액분이 문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상희 위원 삭감이……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예결위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래서 지금 그대로 3만 부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 부수를 확대하려고 한 것도 문제지만 이 위클리공감은 발행사가 어디입니까? 발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

○김상희 위원 모르세요? 조선뉴스프레스사가 발행하지 않습니까? 어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거기는 발행이 아니고 인쇄……

○김상희 위원 조선뉴스프레스가 발행사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출신 기자의 기사가 24개 중에서 11개입니다. 그리고 특정 보수언론사 출신 기자의 기사가 전체의 92%입니다. 이것은 지금 해도 좀 너무 했다 하는 생각 안 드십니까?

실제로 지금 가장 최신호인 132호를 봤더니 지금 이것입니다. 총 24건의 기사 중에서 조선일보가 쓴 기사 11건을 비롯해서 지금 보수언론 출신 기사가 92%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9월 7일에 발행된 125회에 보면 62페이지 중에서 28페이지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찬양기사입니다.

이런 정도로 지금 위클리공감을 이렇게 해서 정책 홍보지로 만드는 것이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물론 국민들에게 시의성 있는 정책 정보…… 하지만 한편 실생활 관련된 정보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연속해서 4대강 관련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기사를 써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 예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서 내용을 균형 있게, 객관성 유지하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도대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이것을 읽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 열독률을 한번 조사를 해 본 적 있으십니까?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어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희 위원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김상희 위원 조사를 해 봤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것은 상세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저는 아무리 이게 정책홍보지라 하더라도 이렇게 도가 넘는 홍보 전략에는 국민들도 외면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명박 대통령, 4대강에 대한 찬양만을 계속하실 생각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하여튼 내용을 보다 더 다양성 있고 균형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지난 결산과 국정감사에서 IPTV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여야 위원들이 예산 낭비적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의 답변은 이것은 지휘수단으로서 유용할 뿐만 아니라 격오지부대에 있는 장병들의 사기·복지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 사용료가 적정수준보다 높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 수준까지 인하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 IPTV 관련해서 95억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IPTV 사업과 관련해서 장병들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선호도 조사를 IPTV나 위성TV, 케이블TV 이런 것과 비교해서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일단은 다른 수단 가지고 잘 되지 않는 격오지부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상희 위원 그런 데는 더 어렵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 데는 IPTV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청료 차이도 2배 내지 3배 나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훨씬 낫다 이렇게 결론을 저희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선호도 조사 자체가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료 차이도 2배 내지 3배 높고, 사용하지도 않는 인터넷 회선 사용료가 전체 요금의 55%를 차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확대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교과부에서도 국방부보다 먼저 IPTV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 서비스 오류라든가 회선의 잦은 단절들이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대가 산골 오지에 위치해 있어서 이게 전혀 맞지 않는데 이 사업을 다시 95억을 편성을 한 이유는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문제에 대해서,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예산을 태울 적에, 태우기 전에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국회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지금 이것이 올라왔고 계속 국회에서 문제가 됐는데도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희가 이제까지 조사한 자료는 후방 격오지부대에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상당히 유익하다, 사기와 복지 측면에서 상당히 어필하는 바 크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장관님께서 제대로 이것이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저에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수고하셨습니다.

수시배정제도의 문제는, 김상희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수시배정제도의 문제는 결산 때도 지적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회 예산결산제도의 개선 문제로 향후 심도 있게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구상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찬 위원 장관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서울 강서갑의 구상찬 위원입니다.

먼저 국방부장관님께 하사관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장님 녹색어머니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소방방재청장님 나오셨지요?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예.

○구상찬 위원 소방공무원 전문검사·진료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요. 또 시간이 남으면 대법원장님 와서 답변하실 기회가 별로 없으신데 대법원장님 공탁금 회수율에 관한 질의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먼저 국방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국방부 병력 증원 소요에 따른 예산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하사관을 양성하기 위해서 2만 명 증원을 2004년부터 했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구상찬 위원 보면 이것이 일반병의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 방지를 하기 위해서 또 일반병사들의 전투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사관을 2만 명 양성한다 이런 취지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2만 명을 목표로 계속 04년, 05년, 06년, 07년도에 5000명씩 정원을 늘려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2만 명을 늘려갔는데. 예산을 신청하기는 3000명 분, 2000명, 2000명, 2000명 해서 총 1만 920명만 예산을 신청하고 증원은 2만 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만 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바꿔 얘기하면 07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자료를 챙겨보니까 증원에 비해서 예산을 타 간 병사의 급여를 계산해 보니까 1만 1000명이나 차이가 나요. 장관님 그것 알고 계시나요? 쉽게 얘기하면 1만 1000명이라는 유령군인이 탄생한 것입니다. 증원은 있는데…… 장관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제가 지금 사실 질문을 사전에 받지 않아 가지고 현장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용어는 부사관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를 증원하는 것은……

○구상찬 위원 하사관은 옛날 말이고 부사관이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간부를 증원하는 것은 2004년부터 시행되었던 국방개혁의 일환으로서 전 육군 장교들의, 간부들의 40% 정도의 비율로 증원한다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시하신 그 1만 1000명이 왜 유령……

○구상찬 위원 유령군인이지요. 왜냐하면 증원은 있는데 급여 타 가는 것은 1만 명밖에 안 타갑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제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출처, 전문하사 및 2012년 해병 추가 증원은 제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구상찬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장관님께서 이런 소소한 데이터를 기억하실 수는 없어요. 그 데이터를 못 외우시는 것은 당연하신 것인데 제가 지금 장관님께 질의를 드린 것은 예산편성에, 지금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 아닙니까? 예산편성에 이렇게 증원 대비 반밖에, 2만 명 증원한다고 계획해 놓고 그다음에 예산은 1만 1000명만 타 가지고 가면 속된 말로……

○국방부장관 김관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제가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하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살펴보고서 답이 나오면 나중에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이런 것은 예산편성 하는데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2012년도 예산도 한 5000명이 남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무슨 소소한 데이터를 장관님이 기억 못 하시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을 다 챙기라는 얘기입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알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이런 것 제가 끄집어내는 데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장관님께서는 데이터를 좀 못 외우고 계시지만. 이런 것은 하사관들 인력 운영 정상화할 때 또 이런 전문인력 양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배치해서 하시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제가 이것 나중에 직접 전달해 드릴 테니까 장관께서 판단하시고요, 이런 것은 고치세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다음에 경찰청장님께, 이것 마이너한 문제인데요. 또 결코 이것이 마이너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얘기라서요. 청장님 우리 아기들 등·하굣길에 스쿨존에서 일하는 녹색어머니회라는 것 있는 것 아시지요?

○경찰청장 조현오 예.

○구상찬 위원 우리 젊은 초등학교 엄마들이 순번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말이지요, 전국에 1만 4000개 스쿨존에서 12세 이하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다친 교통사고가 2010년도에 733건이나 일어났습니다.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어린 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이것이 2006년도 323건에 비하면 2배가 넘게 증가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쿨존이 안전한 지역이 아니고 오히려 위험한 지역이 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서는 것이지요. 물론 2006년 이전에 차량 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산술적으로 보면 사고가 조금 많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이 지난번에 정부에서, 교육부장관님 나오셨나요? 교과부장관님 안 나오셨나요? 이것은 같이 들으시면 좋을 텐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충실하기 위해서 각 학교의 녹색어머니들이 현장에서 경찰 대신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 그렇지요?

○경찰청장 조현오 예, 그렇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런데 녹색어머니들이 활동하는 학교 수가 4156개고요, 그 회원 수가 52만 명으로 제가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국비 지원이 말이지요, 경찰청에서 5억 3500만 원을 줬고 그다음에 교과부에서 특교로 5억 원을 지원해서 총 10억 3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 교과부 지원은 사라지고 경찰청에서도 2억 4200만 원으로 예산이 반이 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녹색어머니 1명당 315원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청장님 우리 경찰관들 대신해서 어린이 교통을 도와주는 분들한테 1년에 315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엄마들 몇 분한테, 세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녹색어머니회들. 제 지역구라서 좀 죄송하긴 한데 강서구에 있는 신정초등학교의 경우는 말이지요, 녹색어머니회 회원이 500명이 있는데 1년에, 1학기에 동복 한 벌, 2학기에 단복 한 벌 와이셔츠 3개 준답니다. 청장님 이것 모르셨지요?

○경찰청장 조현오 각 학교마다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다르긴 하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경찰청장 조현오 예, 그렇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래서 녹색어머니회가 경찰청 직원들을 대신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1년에 315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봉사활동이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경찰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장비나 단체복도 제대로 못 사고 1년에 동복 한 벌, 단복 한 벌, 와이셔츠 3개, 모자 2개, 1인당 315원. 제가 보기에는 청장님 적어도 최초 지원 수준인 10억 원 정도는 다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10억 원이라기보다, 이런 지원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작년 2010년부터 처음으로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필요한 장비 구입·교육간담회 비용을 지원해 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어머니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그 지역에서의 교통사고는 증가했지만 그 지역 1000개소당 교통사고 발생 사망 그리고 부상자 숫자는 평균 한 30% 내외씩 줄었습니다.

○구상찬 위원 전체 교통사고는 줄었지요. 그런데 스쿨존은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우리 아이들 교통사고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찰청장 조현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늘어났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같은 이런 장소 지정 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1000개소당 발생 건수를 보면 한 30% 정도 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줄어든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어머니회 회원님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청장께서 그렇게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이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지원에서 좀 줄이더라도 아이들 교통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청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조현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소방방재청장님 나와 계시지요?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예.

○구상찬 위원 올해 들어서 8명의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 끊은 것 아시지요?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예.

○구상찬 위원 지난 4년간 자살한 소방관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25명입니다.

○구상찬 위원 예, 25명입니다.

소방방재청 연구 결과에서도 소방관 10명 중에 네 분이 심한 우울증 증세를 앓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예.

○구상찬 위원 또 현직 소방관 2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소방관의 상당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 아시지요?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예.

○구상찬 위원 이런 고위험군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예.

○구상찬 위원 그런데 올해 정신건강 관련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여전히 지원은 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방방재청 예산이 총 9400억 원이고 금년도보다 28% 증가됐더만요. 그렇지요?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예.

○구상찬 위원 그런데 방재관리 예산이 증액된 것이고 소방관의 정신대책이나 이런 소위 사회적 인프라에 관한 예산은 오히려 50억 원이 축소된 것 아십니까?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알고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300억 원으로 되어 있지요?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예.

○구상찬 위원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증액이 되어야 되는 예산이 300억…… 그러니까 50억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관계는 올해 처음으로 기획재정부에서 3억 8500만 원을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고위험군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로 인해서 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들이 3년간 평균 한 2000명 정도의 외상 후 스트레스 환자가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 중에서 한 30%만 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3억 8500만 원이 편성이 됐고 또 2012년 사업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증액 여부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아까 경찰청도 그랬고 소방방재청도 그랬고, 어려운 곳에서 고생하는 우리 하급직 공무원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예산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이제 복지화, 복지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그런 기조로 나가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소방방재청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하급직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제도에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는 뜻으로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잘 알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다음 대법원장님께……

○법원행정처차장 고영한 법원행정처차장 나왔습니다.

○구상찬 위원 행정처차장이 나오셨네요.

이것 원장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혹시 공탁금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해 볼게요.

우리 공탁금이 지금 엄연한 국민의 재산인데 말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웃음) 30초.

○구상찬 위원 그러면 제가 대법원 해외거점 도서관 사업하고 이것 서면질의 할 테니까, 어디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고영한 예.

○구상찬 위원 드릴 테니까 서면질의에 착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고영한 예, 잘 알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리고 맹형규 선배님, 행안부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도 약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서면질의 할 테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구상찬 위원 그다음에 문화재청 말이지요, 청장님 나오셨나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여기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제가 문화부장관님 보고 질문하려고 그랬네요.

(웃음소리)

국외문화재 환수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서면질의 할 테니까 이것도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구상찬 위원 장관님 아니고 문화재청장님……

○문화재청장 김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장님은 여기에 출석 안 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이 나오시는데 오늘 차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통령실장님 계신가요, 대통령실장님? 아까 계셨는데 안 계신가요?

○委員長 鄭甲潤 답변하세요.

○대통령실정책기획관 이동우 정책기획관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한미 FTA 비준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ISD 재협상에 관한 제안에 대해 민주당 의총이 종전의 당론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합의 처리 노력을 계속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정책기획관 이동우 대통령님이 가신 취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논의를 심사숙고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명수 위원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까?

○대통령실정책기획관 이동우 그렇습니다.

○이명수 위원 하여튼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면 사실은 대통령께서 혼자 뛰어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정부 전체가 나서야 되는데 그

러지 못한 점이 내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기재부차관께 묻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처의 장관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부처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사실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되거나 삭감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기재부차관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일자리가, 일자리 창출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데 많은 경제 보고, 여러 가지 연구소의 보고서는 그렇지 않은 전망이어서 걱정입니다.

다행히 얼마 전에, 우리가 비정규직 600만 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근로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모든 정부부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고용 현황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식을 하고 계신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이명수 위원 그래서 지금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그런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십만 명이 되는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대부분 호봉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 소속의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15만 명인데 여기만은 호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타 부처 기관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데 여기에 단계적으로라도 호봉제를 도입해 달라고 하는데, 검토하시겠습니까?

여기만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처 비정규직은 되어 있는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황부터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지금 당장 답변은 안 하더라도, 하여튼 타 부처의 비정규직은 호봉제가 되어 있는데 학교 비정규직은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재원이 많이 수반된다면 단계적으로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꼭 한번 챙겨 주십시오.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청년실업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그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청년을 보라' 그랬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참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청년창업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예산을 보니까 소위 창업 선도대학, 대학생 벤처기업 창업지원 사업이 금년에 300억이었는데 내년에 오히려 200억으로 줄었네요.

이것 증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야말로?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자리 예산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일자리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청년실업 관련되어서는 청년창업 전용자금 2000억을 이렇게 신규로 설정을 했고……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목을 설정을 했는데 정말 중요한 대학생들의 벤처기업 창업지원은 오히려 줄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관련되는 다른 부분의, 전체적으로 해서 늘렸기 때문에 일부는 조금 조정이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창업과 그리고 청년실업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이명수 위원 청년실업 문제 중요하니까 중요하게 다뤄 주시고요.

또 하나 산학 연계한 대졸 청년 교육과 취업을 연계한 도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도에 반영이 미흡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전체적으로 보되 이 사업의 중요성과 또 여러 가지 청년들의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있었던 그런 사안들은 나름대로 평가라든지 아니면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명수 위원 다음은 몇 번 반복이 됩니다마는 보훈 관련, 그분들에 대한 예우 문제입니다.

6·25 참전 무공수훈자, 벌써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할린 묘지 실태, 호국원 설치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소극적이고 다소 미흡한 그런 재원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반복해 드리고요.

그중에 사각지대가 근로정신대 분들입니다. 그래서 위안부와는 또 다른 역사의 피해자인데 이분들의 연령이 대개 또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이제 정말 돌아가시면 우리가 배상을 받아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서 외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이분들한테 정부가 먼저 배상을 해 주고 나중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떤 구상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검토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

○이명수 위원 결국 예산 문제입니다, 외통부의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문화체육관광 부문에 대해서 내내 기재부차관께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게 동의가 되더라도 기재부가 결국 반영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우리 국민 모두가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데 오늘 언론에 보니까 '강원도 지역에서 춘천의 빙상팀을 해체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 투자나 우수선수 육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 또 체육계 이쪽에서 우려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스케이트장 정비하는 사업, 동계훈련비, 선수 육성사업, 이런 부분이 대개 체육진흥기금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 부분이 많이 미흡합니다.

또 국가대표로 있다가 나중에 은퇴한 선수들의 사후관리 체계 구축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도 역시 투자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꼭 평창동계올림픽만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려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평창동계올림픽은 2018년이고 조직위원회가 지금 출범을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서 SOC 인프라 그리고 체육경기 시설 또 관련되는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계획대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이게 지금 계획대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한번 챙겨 보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계획 자체가 지금 전체를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계획부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또 하나는 대전의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우리나라에 문화재 관련 여러 가지 시설이 많습니다만 무형문화재에 관해서는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를 위한 전용 공간을 확보하도록 풍류센터를 건립하는데 여기도 지금 예산 지원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사업계획이 어떤지를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역의 특색이 많이 가미되는 그런 사업들은 광특이라든지 또는 지역에서 하면서 일부 보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재원 문제에 관해서 아마 여러 차례 기재부하고 논의가 됐었는데 부처에서는 동의했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경찰·법원·검찰, 소위 사정기관의 청사 신축이나 이런 여러 가지 행정 지원 시설이 전반적으로 일반 행정기관보다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대체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신축하거나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요.

문제는 이런 사법기관의 여러 청사 그런 것들이 소위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너무 수치에 매달리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처리가 되어서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거나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태안의 경찰서 신설하는 문제, 이미 행안부에서 반영이 되어서 기재부에 갔습니다마는 이게 인구나 신고 건수나 이것만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실제 그 지역이 전국적인 문화관광지고 또 해안지역이고 또 과거에 거기에 북한에서 요원이 침투한 사례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치안 수요를 본다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아산신도시에도 인구가 5만 명을 2014년까

지 한다고 합니다마는 역시 거기도 사실상 치안 수요가 많은데 너무 수치에 의한 순서를 고집하다 보니까 순위가 많이 밀려 있고요. 또 천안의 지청·지원 이것도 청사 신축이 시급한데 많이 늦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도 중요합니다마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되 특별한 수요나 판단에 따라서 촉진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이런 청사라든지 관사 관련되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신설이 되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충남 태안서의 경우에는 여러 지역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른다면 충남 태안서는 순위가 굉장히 밀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수 위원 예, 수치상 기준은 늦은데 그쪽의 특별한 치안 수요를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제 4대강 사업이 대체로 마무리되고 지천의 문제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충청지역의 여러 가지 지천에 관련된 사업들이 좀 늦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지역을 얘기를 해서 좀 안됐습니다마는 곡교천의 경우에 충청도 강물이라고 느리게 흐르는 게 아닌데 이 사업은 참으로 느립니다. 5년, 보통 10년 전부터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마무리 지을 때이고, 지천이 깨끗해야 4대강 사업도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곡교천의 곡교지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고려해 주십시오.

또 하나 충청권 유일의 국가관리 무역항이 서산 대산항입니다. 여기에 국제여객터미널, 여객부두사업 이것도 이미 중국과 국제여객선을 취항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전혀 안 되어서, 여기에 충분한 물동량이나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콘테이너 물동량 증가율도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물론 신규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지류·지천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까지도 여러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관련되는 사업은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강조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객터미널 관련되어서는 제가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예, 꼭 좀 고려해 주시고요,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장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에 있는 소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외국인 전체가 10월 말 현재 약 140만 명 되고요, 17만 명 정도, 약 10% 조금 넘는 분들이 지금……

○이명수 위원 글쎄요,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사유를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게 자꾸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이명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저희 지역의 농민 한 분이 와서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하소연을 하는데, 이분이 작은 과수원을 하는 분인데 여기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와서 근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상적인 인력사무소에서 채용을 했고 언어가 안 통합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나와서 나오자마자 그것을 단속을 해서 벌금 200만 원을 바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농민한테, 과수원 배농사 하는데요 200만 원을 20일 내에 내라, 안 내면 다시 두번 독촉이 왔고 이번에는 검찰에 이첩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농민이 와서 자기는 용역업체를 믿고 했고, 정말 농촌에 일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과일을…… 딴 사람이,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받았고 또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니까 썼는데 이렇게 법을 집행해도 되느냐 하는 하소연을 하는데, 저는 그분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보통 통상 행정법규를 단속할 때는 첫 번째는 경고라든가 서면 어떤 뭐를 하는데 첫 번째 단속하자마자 200만 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을 당연히 집행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농민들한테 이런 정도까지 가혹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일선 현실인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1회·2회·3회로 나눈다든가 법에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좀 사정에 따라서 집행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필요한 지시나 그런 것을 한번 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권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불법체류자 단속 문제는 국경의 안전한 관리 문제하고 또 고용의 문제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농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권문제 이런 것까지 전부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해서 출입국, 불법체류자 단속 문제에 있어서 좀더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단속은 하시되 정말 현지 실정에 맞게, 말도 안 통하는 농민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200만 원이라고 하는 과태료를 매겨서 언제까지 안 되면 독촉장 내고 검찰에 이첩하는 이런 집행은 좀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박우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순 위원 강원도 원주시 박우순 위원입니다.

수고들 참으로 많으십니다.

먼저 문화체육부장관님, 국가보훈처장님, 국방부장관님, 경찰청장님, 그리고 시간이 되면 평통회장님, 통일부장관님, 행안부장관님, 이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공사와 관련해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역의무공동도급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우순 위원 지방은 건설 경기가 수도권에 비해서 매우 취약하고 공공부문 의존율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최근 공공 공사 발주 물량마저 감소해서 지역 건설업체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강원도는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이 지역 건설경기에 기여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무한경쟁으로 지역 건설사업이 시행된다면 지역 업체는 설자리가 없게 되고 동계올림픽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형 건설업체와 타 지역, 그리고 낙후된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동계올림픽 기반시설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동계올림픽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또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인 만큼 또 품질 확보를 위해서 능력 위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등 관련 사항들이 포함된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이 저희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기관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순 위원 장관님께서 주무 장관님이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박우순 위원 총체적으로…… 아까 기재부차관님 말씀처럼 계획 이런 것 철저히 세워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흑자 올림픽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박우순 위원 그리고 참전 유공자하고 관련해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박우순 위원 먼저 민긍호 의병장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박우순 위원 제가 중학교 국사교과서 볼 때 이미 "대한민국에서 1등 의병장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열악했는데 이번에 국가에서 자금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박우순 위원 그리고 미국 같은 데 보면 몇십 년 전 유골까지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참전용사 분들을 홀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고령으로 돌아가시고 생존하시는 분의 87%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우순 위원 국가 지원은 명예수당 12만 원, 약값·의료비 일부 지원에 불과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 금년에 어떻게 예산증액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전반적으로.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금년에도 지원 확대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셔 가지고 일단 지금 정무위에서는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우순 위원 지금 명예수당이 3만 원씩 증액?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게 일단……

○박우순 위원 그것도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매년 돌아가시잖아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박우순 위원 그러면 돌아가시는 그 비용만 해도, 상당수가 되고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지나면 모시려고 그래도, 예산 증액해서 지급하려고 해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참전 유공자 분들이 최소한의 자부심과 명예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예수당 등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확실하게 처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셔 가지고 주장을 하셔야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우순 위원 그리고 또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지만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는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박우순 위원 그러니까 배우자께서 먼저 돌아가셔도 확실한 경우에 먼저 안장을 해 드리는 그런 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그 문제는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참전 유공자가 나중에 돌아가시는 경우에 혹시 안장 자격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생기면 먼저 안장되신 배우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우순 위원 그리고 또 아까도 어떤 위원님한테서 나왔던데, 수당하고 연금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지금 수당이 너무 예우의 차원에서 홀대가 아니냐, 그러면 수당 대신 연금으로 바꾸어야 된다. 그런데 그 취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훈처장님께서 한번……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잠깐 말씀드리면 연금은 희생되시거나 아니면 신체적 상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연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희생되시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상을 안 해 드렸는데, 그러나 6·25 참전용사 분들과 같이 연세가 많으시고 또 6·25 전쟁에서 너무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위로의 뜻으로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박우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수당이라는 용어를 연금으로 바꾸어서 연금 같은 처우를 해 드릴 수는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그것은 연금하고 수당하고는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르고 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연금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으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박우순 위원 검토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박우순 위원 그리고 김관진 국방부장관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면 평화정책에 힘을 써야 되겠지만 또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예산 투입에 힘써야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 보면 예산 투입 증가액수가 침체되고 있다 이런 결론이 지금 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순신 장군님 예를 들지 않더라도 병사들과 같이 대화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이렇게 해서 병사들 사기 진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열악한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국방비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내년 정부재정 증가율이 과거보다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국방비 증가율도 작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부재정 증가율보다는 다소 상회하는 수준의 국방비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 전투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병과 동고동락을 하고 또 교육훈련을 통해서 전투력을 유지하는 지휘활동은 항상 저희들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박우순 위원 2012년 예산안을 보면 영내자 급식비는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또 2010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피복 관련 예산은 3년간 11%가 증가했지만 착용 불편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전투화 또한 기능성 전투화로 완전히 대체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산의 재조정 등을 통해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장병들의 병영생활에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지적하신 급식, 피복, 군화 이런 것들인데 급식예산은 저희 정부안이 원래 3.2% 증가안을 올렸습니다마는 국방 상임위에서 5.8% 수준은 증가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증액해 가지고 현재 예결위에 올렸으며, 피복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얼룩무늬피복에서 이제 디지털피복으로 금년도부터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 12% 증가액을 올렸고, 전투화도 기능성 전투화로 바꿔서 이것은 좀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22%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물론 더 많은 예산을 획득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수준으로 하고 내년도부터 조금 더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우순 위원 그리고 또 직업군인에게는 근무지의 빈번한 이동으로 자녀교육에 애로가 많은데 군자녀 기숙형 고등학교 건립사업의 경우에 2011년도 예산편성액 30억 중에서 10월까지 집행액이 0원이었다가 10월 이후에야 일부 집행되고, 개교일도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왜 이런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금년도 예산이 30억인데 18억은 설계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억은 한민학원이 설립허가가 다소 늦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현재 추세로 보면 원래 예정일인 14년도 3월에 개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추진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박우순 위원 하여간 군 관사도 낡고 노후된 게 너무 많다 이렇게 나오고, 2011년보다 20.9% 증가했지만 노후 관사, 부족 관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부족한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관님, 하여간 군대 무기 현대화도 아주 중요하고 또 이러한 군인들의 처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박 위원님 군을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우순 위원 조현오 경찰청장님.

경찰은 잦은 휴일, 야간근무, 돌발적인 비상근무, 위험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 중에서 처우가 제일 열악하다 이렇게 옛날부터 많이 나왔잖아요.

○경찰청장 조현오 예, 그렇습니다.

○박우순 위원 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왜 처우가 이렇게 약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경찰청장 조현오 외국 같은 경우는 경찰공무원들이 다른 일반 공무원들보다 상당액 보수를 더 많이 받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공무원들보다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좀 괜찮아진 셈입니다.

○박우순 위원 지금도 현업 대상자 24시간 교대근무자가 70%지요?

○경찰청장 조현오 예, 그렇습니다.

○박우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야간근무, 불규칙한 교대 등 건강상의 문제점을 초래하는 교대 근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조현오 예, 그렇습니다.

○박우순 위원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일반 근무자의 임의적 근무에 적용하는 수당 단가를 동일하게 적용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야 교대 근무에 대한 직접 보상으로 교대근

무수당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일선에서 계속 제안이 들어오는데 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경찰청장 조현오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교대근무수당을 늘리려고 했는데 새로운 수당 신설 문제 때문에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경찰 다른 수당을 증액을 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또 휴일근무수당은 대부분 저희 경찰들이 많이 혜택을 보는 그런 수당인데 휴일근무수당도 저희들이 한 243억 원 정도 보전하는 것으로 대체됐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4시간 365일 체제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 특성을 잘 반영시켜 줘서 그러한 교대근무수당을 신설해 주시는 게 궁극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우순 위원 그것도 하위직에 대해서 큰 배려를 해 가지고 처우가 잘 되어야 자부심도 느끼고 마음도 편해서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조현오 예, 그렇습니다.

○박우순 위원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 조현오 예, 감사합니다.

○박우순 위원 또 급식단가 이렇게 보니까 전·의경 1일 급식단가가 6008원, 그러니까 매끼당 2000원 수준입니다. 이것은 말 자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영양사도 또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조현오 예, 영양사 굉장히 부족합니다.

○박우순 위원 그래서 123명 배치하는 것하고 단가 올리는 것,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장 조현오 전·의경 부대 식사단가는 군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군 같은 경우는 인원이 사병들이 한 50만 명 되는 데 반해서 저희 경찰은 전·의경들 한 2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 같은 경우는 급양부대를 별도로 운영해서 식재료 자체를 싸게 구입하는 반면에 저희 경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한받게 됩니다. 전·의경들 상당수가 모여 있는 서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식재료 구입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전·의경 식사단가를 현실에 맞게 좀 올렸습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잘 유지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양사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대로 방치시켜 두면 법을 위반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영양 섭취와 위생 관리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만큼 이번에 꼭 확보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우순 위원 20대 젊은이들, 국민 전체 건강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충분히 먹어야 또 계속 성장을 해 가지 않습니까?

○委員長 鄭甲潤 보충질의……

○박우순 위원 30초만 더 주십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상직 처장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이상직 예.

○박우순 위원 아까 어떤 위원님도 다 말씀을 하시는데, 원주 지역 민주평통 사무직 직원들 보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월급도 좀 올려주고 거기에 교육비라든지 이런 등등 처우를 많이 개선해야 지역주민들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국가안보를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그러던데, 어떠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이상직 올해 현재 기본급여가 11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3% 인상하여 113만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소관 상임위에서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15% 이상 인상되어서 예결위로 넘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2년도 4인 가족 생계비 149만 원보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최소한 15% 정도 인상된 분에서 책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우순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甲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윤석 위원께서 서면질의로 대체해 주심으로써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1일차 주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보충질의 하실 분이 여덟 분 계십니다.

그래서 질의시간은 아시다시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진섭 위원, 서면질의 안 합니까?

○정진섭 위원 예, 저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장선배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그렇지요. 여당은 서면질의 하는 게 맞아요.

존경하는 정진섭 위원, 서면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장병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완 위원 장병완 위원입니다.

저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와 관련해서 문광부장관님, 국무총리실장님, 그리고 기재부차관에게 말씀드리고, 외교부장관님께 내년 국외 재외국민선거 준비와 관련해서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문광부장관님,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관광 잠재력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요즘은 해양관광이 아주 많은 분들한테 관심이 많아서요.

○장병완 위원 이제 우리나라 관광객이 700만 명이 넘어섰지요? 그런데 특히 중국 관광객 유치가 관건인데 중국에는 세계 유수의 명승지가 워낙 많은데 중국에는 사실은 섬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장병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도 좋아하고 섬 여행을 유달리 아주 환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서남해안이 그런 측면에서 정말 유망한 관광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프라 확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가 해남·영암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관련된 지금 문화관광부에서의 향후 투자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병완 위원 기본적으로 향후 저는 우리 정부 정책의 모든 중점을 일자리 창출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 없는 복지가 없고 최선의 복지는 결국 일자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관광산업이 고용흡수력이 높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렇지요. 고용……

○장병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의 청년들의 일자리를 생각해서라도, 부가가치 높은 여타 산업이라는 것이 물론 강소기업 육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 관광인프라는 한 번 깔아놓으면 수백 년을 우리 후손들이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볼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무총리실장님, 농어촌공사와 전남도 간의 서남해안지역 부지 인수 문제가,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몇 번 조정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예.

○장병완 위원 지금 어떻게 결말이 날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일단 이게 쟁송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송 결과를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 기본적으로는 지금 총리실에서 조정했던 것에서도 양 기관들이 지금 합의를 아직도 못한 상황인가요?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장병완 위원 그런데 연 내에는 종결이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던데 사실입니까?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예, 저희도 나서서 계속해서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관 간에 아무튼 의견을 좁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 기재부차관님,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다른 장관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쪽이 굉장히 향후 잠재력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결국 인프라를 깔아 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장병완 위원 그런데 이 기업도시에 진입도로 하나는 우리가 여타 산업단지와 같은 개념으로 지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올해 2회째 실시한 F1 경기장 진입도로를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의 진입도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F1 경기장이 이 기업도시 전체의 제일 왼쪽 모서리에 살짝 걸쳐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혀 기업도시 진입도로 역할을 지금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국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인프라를 깔아야만이 관광레저도시가 조성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실질적인 진입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살려서 검토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 외교부장관님, 지금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것이 내년도에 두 차례의 선거가 있고 그것이 처음으로 재외국민들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장병완 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모의선거를 실시하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장병완 위원 그 모의선거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노출됐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우선은 등록하는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투표하러 오는 데도…… 두 번씩 이렇게 등록하러 오고 투표하러 오고 이런 것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질까 봐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자체 평가보고서를 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아직 개선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 문제, 여러 가지 또 지적된 게 많은데,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불과 한 5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60%가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충분한 겁니까?

이것 한 공관당 300여 만 원 정도 가지고 두 번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사실 아마 중앙선관위하고 예산이 중복이 됐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외공관에 쉰세 분이 나가 계신데 그분들이 나가 계시지 않은 100여 군데 이상의 공관에서는 독자적으로 공관에서 선거를 이렇게 치러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장병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좀 부실한데 여러 가지 후유증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대비를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

○委員長 鄭甲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숙 위원 국방부하고 선관위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사무처, 행정안전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간되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지난 주말에 제주도가 세계 7대 경관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 졌는데요. 이 선정의 의미는 놔두고라도 선정된 이유는 천혜의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곽정숙 위원 제주해군기지 예산 관련해서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유네스코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정한 강정마을 구럼비바위를 파괴하면서 세계 7대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하는 것은 매우 이중적이고 모순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제주의 환경을 파괴하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예산을 삭감한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차상 그리고 주민갈등의 문제인데 애초에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들만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야 함에도 대천동 전체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여론조사를 왜곡하고 강정마을 인구가 1900명인데도 불과 87명이 모인 마을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결의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인 강정마을 주민들의 뜻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지금이라도 제주도의회가 갈등해법으로 주민투표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인 것입니다.

강정마을 앞바다는 문화재보호구역이자 해양보호구역이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존지역입니다. 지난 9월 5일 제주해군기지 건설부지에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친 광범위한 매장문화재가 존재한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부분공사 허가'라는 이런 편법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안보와 외교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에 의문이 있는데요. 정부와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명분으로 국가안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 인근해상에서 해군의 호위가 필요할 정도로 특수한 상황은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평화의 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제주가 군사요충지로 변모될 경우 오히려 외교적 부담이 증폭될 우려가 있습니다.

네 번째, 국회 부대의견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난 2007년 12월에 2008년 예산안 심사에서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 등의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단 바 있는데 정부는 민·군복합관광미항이라 선전을 해 놓고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특별자치도가 체결한 기본협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했습니다. 아, 다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것과 국토해양부 그리고 제주도 보관 협약서에……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 이렇게 되어 있고 국토부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산편성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제주해군기지사업은 전체 예산의 현재 집행이 17.2%밖에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인데 이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 집행부진의 원인에 주민 반대와 각종 의혹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집행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추가시간을 안 주시나요?

……

마지막으로 제주해군기지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5만t급 크루즈선은 다섯 척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아시아권에 입항한 실적이 없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조사 결과에서도 제주도에 15만t급 크루즈선이 입항하는 시기는 2025년이고 2044년이 되어도 1년에 단 두 척만 입항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크루즈가 입항하지 않는다면 결국 여객터미널은 유령터미널이 될 것이고 크루즈부두는 군함 전용부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타당성 측면에서 전혀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원칙과 이유에 근거해서 제주해군기지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2012년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

……

○委員長 鄭甲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국방부장관 김관진 간단히, 간단히 답변……

○委員長 鄭甲潤 간단히 하시고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제주도 7대 경관 선정을 축하드리고, 이것은 제주도와 국방부는 협약을…… 선정하기 위한 상호 협정서를 맺어 가지고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시작을 했고, 방금 지적하신 문화재 문제, 부대의견 문제, 15만t 문제도 전부 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나중에 더 상세한 것은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오제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세 위원 민주당의 청주 흥덕갑 오제세 위원입니다.

행안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대체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제세 위원 통상 20~30% 수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단히 높은 비율입니다. 스페인이나 이태리 같은 데가 지금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데, 거기가 그 정도 지하경제가 되고 있

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지하경제 수준이면 세수가 적어도 50조에서 100조 정도가 덜 걷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하경제를 위해서 국세청 조직에 대해서 장관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특별히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세청에서 이런 저런 가끔 나쁜 소문도 나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세금을 거두는 데 애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제세 위원 국세청 조직에 대해서 애기 들으신 바는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특별히 근래에 거기에 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오제세 위원 정부부처의 조직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주관을 하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오제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세청 총 정원이 2만 명입니다. 2만 명인데, 5급 이상이 7%, 1400명이고 93%가 6급 이하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국세청 조직이 전근대적이고 낙후되어 있다.

제가 보기에는 하는 일의 중요성에 비해서 직급이 가장 낮은 부처가 아닌가, 또 탈세를 막고 조세정의를 위해서는 국세청 조직이 상당히 고급 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조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5급 이상, 사무관 이상이 7%밖에 안 되고 93%가 6급 이하로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가 제안하기로는 1년에 적어도 100명 정도씩만 6급을 5급으로 올려서 5개년에 걸쳐서 한 500명 정도 6급을 5급으로 올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행안부하고는 아직 협의가 안 된 모양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제세 위원 제 얘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오제세 위원 문화관광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오제세 위원 거기에 수장하고 있는 미술품이 상당히 많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렇습니다.

○오제세 위원 그런데 수장고라든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던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특히 왜 그러냐 하면, 미술품 소장뿐만 아니라 정부에 있는 미술품까지 다 관리하기 때문에 수장고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오제세 위원 이번에 예산을 올렸다가 기재부에서 안 되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정부예산에 편성을 추진했지만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제세 위원 기재부차관님, 국립현대미술관에 대단히 소중한 미술품들이 2만 점 이상 이렇게 있는데 보관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보관해서 좋은 작품을 잘 전시도 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잘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오제세 위원 금년 예산에 23억원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제세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제세 위원 청주공항이 대단히 신장률이 높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특히 청주가 지역적인 위치상으로 봤을 때 화물공항으로서 특화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치가 중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물공항으로 특성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11월 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예산 20억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으면 하고 요청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저 말씀입니까?

○오제세 위원 예.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지금 예타 관련돼서는 하반기 예타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제세 위원 아니, 그래서 11월 달에 나오거든요. 이제 거의 나올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꼭 넣어 주셨으면 하고요.

아울러서 서울서 청주공항까지 수도권전철복선화사업도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것도 기본용역설계비 5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청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전체 예타 결과가 나오면, 지금 40건 이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결과 나오면 보겠습니다.

○오제세 위원 이 청주공항 문제는 공항의 활성화와 또 전체 경제적인 효과를 봤을 때 시급성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당기기 위해서 설계와……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甲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김영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행정안전부장관님, 국방부장관님, 문화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예산 조기 집행에 대해서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정상화해 달라는 그런 건의는 안 받았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근래에 그런 건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김영록 위원 제가 현장에 다녀 보면 하반기 때는 지역경제가 너무 썰렁하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위기 때 했던 거니까 정상적으로 해 달라 하는 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기획재정부장관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정상 환원조치 하겠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대개 대통령께서 연두보고를 12월 달에 받는 이유가 1월 1일부터 예산 집행을 빨리해 가지고……

○김영록 위원 경제위기가 지났잖아요, 이제. 지금도 경제위기로 보고 그렇게 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저희들이 아직 완전히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장관님, 현장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판단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다음에 국방부장관님, 군납관계 또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수산물 군납이 매년 지금 줄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특히 해조류 군납을 보면 마른 실미역, 마른 톳, 마른 다시마, 이 3개 품목이 다른 해산물에 비해서 또 적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보면 수산물 중에서도 해조류, 김이랄지 이런 부분도 군납을 하게 해 달라고 여러 가지 견해를 여러 차례 들었는데 미역, 톳, 다시마, 김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군납을 하는 게 장병들 건강에도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해조류가 부족하다면 잘 검토해 가지고 보완해 보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청장님, 임진왜란 당시에 승병을 모아서 나라를 구한 서산대사 잘 아시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김영록 위원 어디 계십니까, 청장님?

○문화재청장 김찬 여기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래서 제사를 모시는 제향을 국가제향으로 조선시대 때는 계속 그렇게 지내 왔는데 일제강점기에 총독부에서 이게 폐지되고 나서 해방 후에도 그대로 지금 사찰 차원의 제향에 머물러 있는데 청장님, 이순신 장군 제향이나 칠백의총과 곽재우 장군 제향은 국가제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예, 그렇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렇다면 서사대제도 국가제향으로 이제, 과거 조선시대 때도 했는데 승격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청장 김찬 우리 국가제향과 국가기관, 유적관리 기관화할 건지는 지금 위원님 질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릴 정도로,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아마 심층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래서 금년 9월 달에 조계종 중앙종회에서도 서산대제를 국가제향으로 복원해 달라, 과거에는 관찰사 6개 군 군수들이 와서 제향을 직접 모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조선시대 때도 이렇게 국가 호국사상에 대해서는 정신을, 유교국가이면서도 그렇게 국가제향으로 지냈는데 이건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에서 접근하지 말고 정말 국가를 지켰던 호국정신을 살리는 서산대사님을 국가제향으로 모셔야 되는 것 아니냐,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고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김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다음에 진도에 용장성이라고 있습니다. 청장님, 삼별초 항몽 유적지 잘 아시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래서 삼별초 박물관을 짓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한 4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박물관을 짓는 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국비가 30%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일반문화재를 할 때는 70% 지원이 되는데 박물관 할 때는 국비가 30%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이것 자치단체 사업도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엄격히 말하면 국가사업인데 자치단체에서 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김찬 예.

○김영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치단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뭔가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청장님, 그 부분은…… 청장님도 제 말에 동의는 하신 거지요?

○문화재청장 김찬 유적 보존, 주변 정비 그리고 그걸 유적 전시관으로 할지 아니면 박물관 형태로 할지……

○김영록 위원 아니, 제 70%, 30% 그 부분을 답변하세요, 간단히.

○문화재청장 김찬 그렇지요. 그 비율은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비율이라서……

○김영록 위원 법정으로 정해졌는데 문화재청장님 입장에서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재청장 김찬 그것은 꼭 뭐 기획재정부가 하라 그래서 하는 건 아니고요, 피차 논의를 해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어떤 지역의 특정한 사정에 따라서 특례를 두거나 그러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준을 바꾸려면 다 바꿔야 되니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영록 위원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이 문제 조금만 토론하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흥사에 국가문화재를 보관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국가문화재 보관하는 박물관이면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달라 하니까 지방박물관이 돼 가지고 이게 얼마, 70%를 군비 부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80억 중에서 70%, 오십몇억을 군비 부담하려니까 군에서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장님은 그런 것을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고치려는 생각을 안 하시고 오히려 '그것 맞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보니까 청장님이 지금 문화재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있는 것이냐 정말 의심이 됩니다.

○문화재청장 김찬 그것은 같이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록 위원 기획재정부차관님, 이 문제는 너무 과중해요.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전에 총리도 오셔 가지고 현지에 와서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건 문제가 있다. 특별교부세라도 내려 주겠다' 이렇게까지 하신 사항이에요,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너무나 과중합니다.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저희들 보조금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

○김영록 위원 법은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

○委員長 鄭甲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 저는 국방부장관님하고 그다음에 기재부차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관진 장관 뵈면 늘 든든한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일반 국민들을 많이 만나면…… 소위 북한의 핵 말고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기밀을 요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지와 소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사정포, 미사일, 화생방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국방 능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기밀을 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 예산 확보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김관진 북한은 북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력에 비해서 과도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약 120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최근 십여 년 사이에 북한이 집중적으로 증강시킨 분야는 소위 비대칭전력이라고 하는 핵미사일 전력 약 12년 동안에 열두 배 이상 증가를 시켰고, 특히 경보병부대 즉 침투부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많이 증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난해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도발이 있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항상 도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 군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장관님, 그래서 그것 대비하시고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장사정포, 미사일, 화생방 이 부분에 대한 제일 불안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걸 좀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북한의 화생무기는 그것은 최근에만 증강시킨 것이 아니라 십수 년 전부터 상당량의 화생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장사정포인데 이 장사정포는 수도권 인근, 휴전선 인근에 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수도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명수 위원 장관님,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어느 정도, 국방부가 원하는 예산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이 문제는 수년 전부터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는 분야기 때문에 현재 대비체제를 잘 유지하면 되고……

○이명수 위원 ‘최단시간 내에 여기에 대한 대응방어 체제를 구축해 주십시오’ 하는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기재부차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이명수 위원 전반적으로 영유아 보육사업이 중요하다는 건 아시는데 지금 반영된 내용을 보니까 보육교사 처우 개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보육료 지원이 아직도 좀 미흡합니다. 조금 더 고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뭐 재정 형편이 저거 한 범위에서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저희들 보육에 관련돼서는, 영유아 5세아 관련돼서는 누리과정을 지금 내년부터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그건 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갑니다만 그렇게 하고, 또 보육 관련돼서 지원을 지금 최대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이명수 위원 예, 하여튼 형편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더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불법 정보유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회적 혼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안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취약합니다. 네트워크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정보 시스템 보안에만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불법 이런 침입의 최종 목표는 데이터베이스 보안입니다.

이 부분을 좀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을 아마 신청을 했는데 이게 반영이 전혀 안 됐습니다. 큰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사업들은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예산서 내에 삭감할 내용이 많습니다, 뭐 대형 사업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내부인력이 해야 될 사업 이걸 전부 아웃소싱이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청년인턴 모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사업들이 아웃소싱이나 용역으로 가고 있다……

또 BTL 사업, BTO 사업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많이 입증이 됐습니다.

또 예를 들면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지방에 이전하면서 서울에 또 분원을 두고 있거든요. 지금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입니다. 수조원의 국민 세금으로 이게 연금을 주면서 다시 이전사업을 하고 있는 것 이것도 문제고, R&D 사업 또 대형 국책사업의 여러 가지 평가 이런 것들을 보면 삭감할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더 냉정하게 봐 주고 늘 예산이 없어서 반영하지 못하는 국가유공자 이분들한테 인색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재삼 또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저희들 보안 관련해서는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이 어떤 사업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사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이번에 편성을 할 때도 유사 중복이라든지 또는 집행의 부진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거듭 검토를 많이 했고 평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있으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또 앞으로 있을 편성 과정에서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委員長 鄭甲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비경제부처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강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위원 강기정 위원입니다.

대통령실의 우리 임태희 실장 대신 누가 나와 계신가요?

○대통령실정책기획관 이동우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강기정 위원 정책기획관, 수석님도 아니고……

정책기획관, 보이지도 않네. 답변을 하실 수 있으려나?

경호처 부지매입비 올해 예산 40억 운영위에서 신설됐네요?

○대통령실정책기획관 이동우 예.

○강기정 위원 알고 계신가요?

○대통령실정책기획관 이동우 저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강기정 위원 답변도 못 하시는데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지, 내가 그래서 실장한테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묻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올해 내곡동 땅값이 전용한 2억 8000하고 해서 42억 8000을 집행했지요? 그런데 내곡동 사저 백지화가 되어서 이 투자된 42억 8000을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회수해야……

기재부에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것 회수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게 기재부로 넘어 올 것이지요, 이 땅은?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지금은 아직까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행정재산을 폐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 넘어오게 됩니다. 아직 그 전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문제는 이것을 지금 팔면, 기재부에서 관리에 들어가서 다시 되팔면 이 42억 8000이 안 나오는데 이것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지금 아직까지 매각 관련된 사항을 어떻게 하겠다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일단 총괄청으로 넘기면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그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그 이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위원 여기가 이시형 씨 지분의 땅값을 국가가 대납하는 이런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실지로 국가가 관리해서 매각한다면 이 42억 8000을 회수하기 힘들 것인데, 살 때 이것 꼼수로 산 것 아닙니까? 이시형 씨는 비싼 땅을 싼 값에 돈을 내놓고 국가는 경호 땅을 싼 것을 비싸게 사고 그러니까 이것을 일괄 샀기 때문에 매각할 때도 일괄 매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답변할 사람이 없네, 참말로.

땅은 지금 청와대에 있고, 그런데 기재부에서 관리해야 되니까 기재부차관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관리청이 청와대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기정 위원 청와대에서 혹시 이 점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청와대?

○대통령실정책기획관 이동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호실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작년에 경호처 부지매입비를 다 지급했는데 이것을 허당을 지금 하고 다시 또 올해 40억을 운영위에서 내놓으라고 지금 왔단 말입니다. 정부도 아니고 운영위에서 이것이……

정부 편성 아니지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저희들은……

○강기정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년의 예산에 경호처 부지비용 안 대도 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까지는 행정재산으로 대통령실에서, 경호처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처분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총괄청으로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기정 위원 좋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다만 국회에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반영한 부분은 그것을 용도폐기를 하고 다시 매입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운영위에서 반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기정 위원 그래서 이시형 씨하고 국가가 공동지분으로 샀기 때문에 팔 때도 같이 팔아서 같이 나누어서 이 42억 8000이 회수되고 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청와대 쪽에 다시 묻겠……

이 명의 이전을 왜 안하십니까, 지금? 바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당시에?

○대통령실정책기획관 이동우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기정 위원 이것은 부동산실명제 위반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바로 명의 이전을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기재부차관 말씀대로……

2분만 더 주십시오.

기재부차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관리로 전환한 이후 문제는 이후 문제대로 당장 부동산실명제 위반이기 때문에 명의 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강기정 위원 법무부 예산 중에 DNA 감식 국산화·선진화 사업비 20억 반영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기정 위원 시약 국산화 예산이라고 해서……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강기정 위원 이 국과수에 비슷한 사업이 중장기 사업 예산으로 37억 내년 반영됐는데 이 같은 사업이에요. 검찰에서 지금 자꾸 국과수 사업, 행안부 사업을 뺏어 가는데 검찰은 법무부장관이 딱 보호를 해 주는데 행안부장관은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계세요. 국과수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아니요, 국과수는 제가 처음 취임하면서부터 국과수를 국과원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국과수 발전 5개년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기정 위원 그래서 제가 법무부에, DNA 감식 국산화·선진화 사업비 20억은 이 국과수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사업이고 삭감돼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기정 위원 조금만,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법무부에.

지금 첨단범죄 디지털 수사 예산 134억 법무부에 반영됐는데요, 역시 국과수에 매년 285억이 지금 나가고 있고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비슷한 사업인데, 완전히 중복 사업인데 법무부는 지금 134억을 가지고 연 2848건을 하겠다, 그러니까 연구원 1인당 91건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요, 국과수에서는 연 27만 건을 처리하겠다, 285억으로, 그러니까 1인당 1200건을 하겠다.

아니, 이왕 국가 돈 들이면서 국과수에서 1인당 1200건 처리하는데 법무부에서는 1인당 91건을 하겠다는데 굳이 이것을 법무부에서 하겠다고 달려든 건 또 무슨 일입니까?

이것은 삭감돼야 되고 국과수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법무부장관 권재진 우선 DNA 감식 기술 예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중복 편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찰과 국과수 DNA 채취하는 그 범위가 다릅니다. 검찰은 불구속 후에 유죄 확정된 수형인, 그러니까 불구속 사건에 대해서 유죄 확정된 수형인이고, 경찰에서는 구속피의자에 대한 DNA를 채취해서 관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다르고, 국과수 검증 결과에 대해서 만약 이의가 제기되거나 국과수에서 감식에 실패한 경우에 재검증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을 보유할 필요성이 있고, 결국 국과수와 검찰이

각자 역할이 다르고 업무 분장도 법률상 구분이 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중 투자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고, 두 번째 질의하신 첨단화 사업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기정 위원 그 답변은 옳지 않고요. 검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아주……

○법무부장관 권재진 아니, 법상 그렇게 분류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것은 R&D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甲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영록 위원님, 곽정숙 위원님, 장윤석 위원님, 정진섭 위원님, 구상찬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이성헌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 주광덕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 이군현 위원님, 조전혁 위원님, 노철래 위원님, 박우순 위원님, 권경석 위원님, 김재경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정미경 위원님, 김태환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강기정 위원님, 장윤석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 곽정숙 위원님, 정진섭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장병완 위원님, 김영록 위원님, 감사합니다.

특히나 오늘 질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종료 시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배영식 위원님, 박병석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위원을 비롯한 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집행부 쪽에 답변할 때, 내일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불쾌하게 들으시지 마시고 유념하시라고 두 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류성걸 기획재정부차관께서는 답변하실 때 목소리를 크게 하시든지 마이크를 조금 더 당겨 주시면 쉽게 듣습니다. 답변에 전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좀 당겨 주시고요.

최광식 문화관광부장관께서는 마이크를 앞쪽으로 당겨 주시면 그 큰 키에 자꾸 옆으로, 화면에 누워서 보입니다. 화면에서 보면 그게 다 보입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국회의원이 질의하는데 답변하면서 마치 누워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서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9시에 개의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마지막 부별심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1분 산회)

○출석 위원(41인)

강기정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김상희	김성식	김성태	김영록
김용태	김재경	김창수	노철래
박기춘	박병석	박우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안효대	여상규
오제세	이군현	이명수	이성헌
이정현	이종혁	장병완	장윤석
전혜숙	정갑윤	정미경	정수성
정진섭	조경태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주광덕	주승용	진성호
한기호			

○출장 위원(1인)

신학용

○청가 위원(2인)

임영호 홍일표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종후
입법심의관	송대호
입법심의관	이창림

○국회측 참석자

사무총장	권오을
사무차장	구희권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대통령실
실 장 임 태 희
경제수석비서관 김 대 기
정책기획관 이 동 우
특임장관직무대행 김 해 진
국무총리실
실 장 임 종 룡
국정운영1실장 홍 윤 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 상 직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 성 걸
외교통상부장관 김 성 환
통일부장관 류 우 익
법무부
장 관 권 재 진
차 관 길 태 기
국방부
장 관 김 관 진
차 관 이 용 걸
행정안전부장관 맹 형 규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 최 광 식
제2차관 박 선 규
여성가족부장관 김 금 래
법제처장 정 선 태
국가보훈처
처 장 박 승 춘
차 장 우 무 석
병무청
청 장 김 영 후
차 장 박 경 규
방위사업청장 노 대 래
경찰청장 조 현 오
소방방재청장 이 기 환
문화재청장 김 찬
감사원
원 장 양 건
사무총장 홍 정 기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홍 성 규
국민권익위원장 김 영 란
국가인권위원장 현 병 철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 장 차 한 성
차 장 고 영 한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사무처장 하 철 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무총장 이 종 우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김광림	진성호	한나라당	2011. 11. 16